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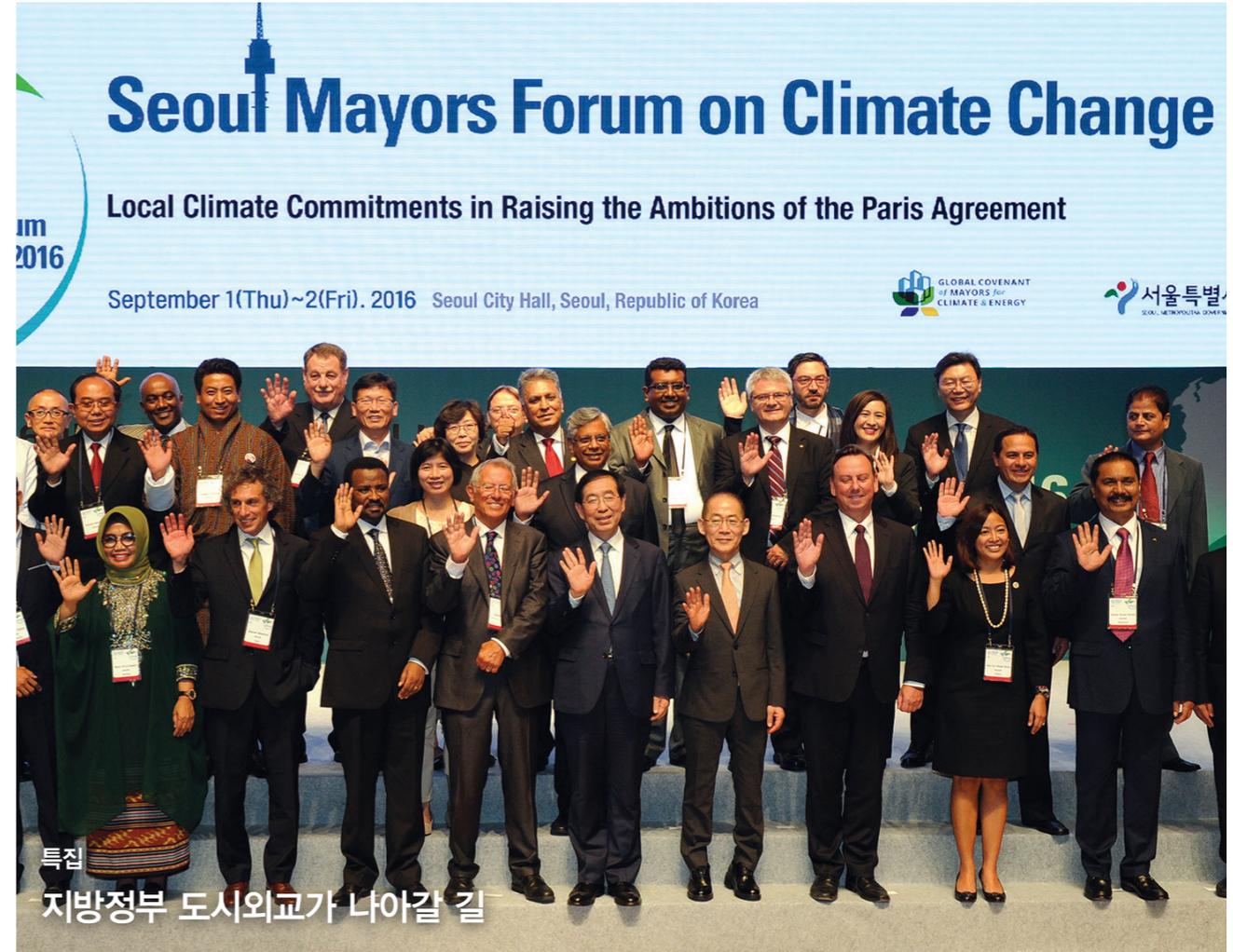
WORLD&CITIES

세계 도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seoulsolution.kr/worldncities

세계와 도시

세계 도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WORLD&CITIES



특집
지방정부 도시외교가 나아갈 길

04

포커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서울시의 도시외교

68

기획
지금은 세방화(Glocalization)
한·중 시대

116

이머징 씨티 16
떠오르는 인도의 스마트 도시
자이푸르 · 수라트

140

주목할 도시자료
강력하고도 지속가능한
도시가 된다는 것

WORLD&CITIES

세계 도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seoulsolution.kr/worldncities

Editor's Note
편집자의 글

어느덧 <세계와 도시>를 발행해온 지 5년째입니다. 첫 호가 발행되던 2013년은 서울시가 해외도시와 다변화된 교류를 꾀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와 도시>는 해외도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는 한편, 해외도시와 서울시의 교류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와 전략들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선진국,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지역의 여러 도시와 폭넓은 교류를 맺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서울의 정책을 공유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서울시 내에 해외도시협력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는 국가에서만 수행하던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호 주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를 위한 '도시외교 전략'으로 선택했습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는 현재 태동 단계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제교류와 협력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여러 분야와 소통하고 지식을 넓히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례적이고 단기적인 교류사업이 아닌,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서울의 위상도 높이는 국제교류 활동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수행해온 교류활동을 발판으로 하여 좀 더 발전적인 도시외교 전략을 살펴보는 의미로, 이번 호에는 특별히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 전문을 소개하였습니다.

'포커스'에서는 도시외교의 발달 배경과 서울시 도시외교의 필요성과 잠재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집'에서는 해외도시의 성공적인 도시외교 사례와 우리나라의 도시외교 현황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활성화 방안과 도전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기 위해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를 검토했습니다. '기획'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와 중국의 도시외교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보았습니다.

'이머징시티'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인도의 떠오르는 신흥도시를 조사했고, '주목할 도시자료'에서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국제 도시경쟁력 지표를 소개했습니다. 서울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목차

- 04 **포커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서울시의 도시외교
강명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학 교수
- 10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 (전문)**
- 30 **특집**
지방정부 도시외교가 나아갈 길
- 32 **서울시 도시외교의 특화를 위한 도전**
고준호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4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김형수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 54 **지방정부 국제기구, 도시외교 전략의 지렛대**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를 중심으로
송기돈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68 **기획**
지금도 세방화(Glocalization) 한·중 시대
- 70 **세계무대에 뛰어난 중국의 도시외교**
신종호 |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실장
- 79 **새로운 전략을 요구받고 있는 한·중 도시외교**
황태연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 88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 106 **세계 ODA사업 동향**
- 116 **이머징 시티 시리즈 16**
떠오르는 인도의 스마트 도시 | 자이푸르 · 수라트
임재빈 |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 140 **주목할 도시자료**
보고서
- 141 **강력하고도 지속가능한 도시가 된다는 것**
김목한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COVER

WORLD&CITIES Vol.18 Summer 2017

사진제공 서울시 보도국

세계와 도시는 한국간행물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세계와 도시에 게재된 글은 사진과 무단 복제를 금지합니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서울시의 도시외교

[글] 강명구 교수 mk@uos.ac.kr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도시외교 태동의 배경과 특징

최근 서울시는 세계 여러 도시들과 직간접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서울시 교통개선에 큰 역할을 했던 스마트카드 시스템과 교통정보 시스템(TOPIS) 그리고 대중교통 혁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후한 고가도로를 철거하여 친환경 수변녹지공간으로 전환한 청계천 복원 경험도 중국과 인도네시아 도시들에게 심분 활용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하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도시 내에 수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영감을 부여하고 실천적인 계획과 실행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해외 협력사업은 서울시의 도시외교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오늘날 세계 도시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도시외교가 어떠한 이유로 등장하였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서울시의 강점에 기반한 특화된 서울시 도시외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인구 대부분이 도시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도시의 시대가 되었다. 도시의 시대에 서울이 적극적으로 도시외교를 펼친다면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가 될 것이다.

외교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자국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타국에 진출한 자국민 또는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외교’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러한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외교란 협상에 의한 국제관계의 관리이고, 대사와 공사 같은 외교 담당자에 의하여 국제관계가 조정 및 관리되는 방법이며, 외교 담당자의 직무 또는 기술이다.”

외교의 실무는 대사, 공사 및 외교관 등 국가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람 또는 기관이 국가를 대표하여 실행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1900년대 중반 이후, 많은 국가에서 국민주권에 관한 인식이 성숙해지면서 주권자인 국민도 외교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진전하고 교통·통신수단 및 대중매체의 발달에 힘입어 많은 정보들이 빠르게 소통되면서 외교의 민주화도 촉진되었다. 그에 따라 외교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외교정책에 참여하는 시대를 맞아 대학, 언론, NGO 등 비국가 기관도 외교 행위자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는 여러 국면의 수많은 요소들이 외교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또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¹

19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외교의 민주화를 넘어 공공외교(Public Diplomacy)²가 대두한 것이다. 공공외교란 국내외 국민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역사·전통·문화·예술·가치·정책·비전 등에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증진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이는 외교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해관계의 단순한 조정에 머물지 않고, 문화·예술·원조·지식·언어·미디어·홍보 등을 활용하여 타국 국민들(Foreign Public)과 직접적인 교감을 바탕으로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공공외교가 중요해진 이유는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하드파워(Hard Power)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Soft Power)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소프트파워란 강제력보다는 매력으로, 즉 명령보다는 상대국가 및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끌리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자국의 ‘선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군사적 개입, 강압적 외교, 경제 제재 조치 등의 물리적 힘으로 표현되는 하드파워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공공외교는 국가 간의 관계를 증진하고 자국의 긍정적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여 소프트파워를 높여준다.

최근 글로벌화가 확장되고 국가들 간의 상호연결성이 긴밀해지는 변화 또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소다. 글로벌화는 경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를 낳기도 하지만, 정치나 안보 측면에서는 긴장감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경제 측면에서는 국가 간 교역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지만, 정치와 안보 측면에서는 국가 간 또는 국내의 이익 분배를 둘러싼 갈등과 국민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일본·중국의 경제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한 위험성이 상존한다. 세계화에 따라 기업이나 국민의 국제 이동이 증가할수록 경제구조와 일자리 분야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가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조정이 어려운 국면에서는 국가 차원의 공식적 외교가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법인데, 공공외교는 타국의 도시들과 시민 차원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도시 간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국가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화해와 협력의 창구 기능을 하기도 한다.

공공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다. 국민 개개인, NGO, 기업, 지방자치단체, 각급 정부기관 등 다양한 계층의 행위자들이 상대국가의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상호교류할 때 돈독한 공공외교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도시가 외교의 주체가 되는 도시외교의 등장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는 분권화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국가권력이 약화되면서, 국가 중심의 전통적 외교와 차별화된 새로운 방식 또는 보완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Glocal Forum,

¹ 이러한 변화는 ‘외국’만을 중심으로 접근해오던 외교에서 ‘자국민’의 이해와 관심도 고려해야 하는 외교로 변화를 가져왔다.
² ‘대중외교’라고도 한다. 중국은 ‘공중외교(公衆外交)’라 한다. 시진핑 이후 중국의 외교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중국위협론을 불식하며 세계에서의 중국역할론을 강조하는 등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기 위한 목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중국의 공공외교는 중국의 총체적인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교전술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04; 고경민 외, 2014 에서 재인용). 둘째는 글로벌 시대에서 도시들이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스스로 모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도시는 국가에 소속된 행정구역 단위이지만 세계가 글로벌해지는 가운데 도시도 국제사회의 경쟁 주체로 나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와 협력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Pluijm(2007)은 도시외교의 범위를 좀 더 넓혀 다음의 여섯 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

표1 도시외교의 범위

안보(security)	분쟁 해결, 분쟁 예방, 중재, 평화 구축
발전(development)	원조, 연대, 결속
경제(economy)	외국인관광객 유치, 외국기업 유치, 국제기구 유치, 국제 행사 개최, 수출
문화(culture)	상호 이해 증진, 자매우호 도시, 문화 또는 스포츠 행사를 통한 상호방문
네트워크(networks)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대의(representation)	EU, UN, Council of Europe

국가 차원의 외교와 마찬가지로 도시외교도 근시안적이거나 배타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도시의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도시외교는 일방적인 전파의 방식에서 벗어나 타국의 관습과 문화 등을 고려하며, 수평적이고 대칭적 관계로 인식하고 쌍방향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국익을 추구하

는 국가외교처럼, 도시외교 역시 도시의 품격을 높여 주는 활동이 요구된다.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매력을 발굴하고, 소프트파워를 증진하여 세계 공동의 번영과 안보 및 평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펼치고, 도시와 시민이 세계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외교³의 핵심 강점 두 가지

서울시는 도시외교에서 다양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적적인 도시발전 경험,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시 외국인 방문객 및 거주자, 문화예술·관광·스포츠·청소년 교류 기획,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자매우호도시를 포함한 국내외 조직망 및 관련 정보 등 국제사회에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킬 다양한 자산을 지니고 있다. 그 중 서울시가 도시외교를 통해 국제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자산인 도시계획 경험과 외교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서울의 도시계획 경험은 세계적 자산이다⁴

지난 반세기 동안 서울이 보여준 도시계획은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냈다.⁵ 서울시 도시외교의 잠재력은 도시의 성장과정 경험 그 자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인구가 급증하면서 급속히 도시화되고 있는 오늘날, 서울시가 일궈낸 도시계획의 성과는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지적 자산이다. 사실 그동안 한

국은 기적적인 경제 성장만을 대내외에 부각해왔다. 하지만 그보다는 급격히 서울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어떻게 그 많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했는지, 경제적 발전 속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는지, 발전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사회적 형평성을 어떻게 증진시켰으며, 도시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공 스토리가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약 30억 명의 도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탄생할 도시를 과거와 같은 도시, 서구 도시와 같은 모습으로 만든다는 건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향후 새로 탄생되는 도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서울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물론 서울의 경험이 세계적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그 과정이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서울의 경험을 외국 도시에 그대로 이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서울의 도시화가 현재까지 세계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손꼽히는 사례라는 것만은 사실이다.

서울의 도시화 경험을 상상의 유토피아적 도시화에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서울의 경험을 전수받는 외국의 도시도 그 내용을 표면적으로 베끼는 차원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계획의 본질을 깊이 이해한 바탕 위에 현지 상황에 맞게 재창조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의 도시화 경험은 현재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의 도시계획에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선진국의 도시 발전은 생산력과 경제기반이 풍부했고 기반시설이 비교적 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즉 부유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도시 발전이 안정적인 편이었다. 하지만 현재 개발도

상국들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다. 도시의 경제기반이나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도시계획 및 개발을 추진할 역량이나 재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선진국이 경험했던 도시화보다 훨씬 대규모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던 서울이 오늘날에는 놀라운 경제 발전과 환경 개선을 이루었고, 사회적 형평성도 제고하였다. 현재 개발도상국 도시들은 그들의 미래에 서울과 같은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서울의 도시계획 경험은 개발도상국의 도시 발전과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신규 도시지역 개발 경험 또한 중요하다. 오늘날 서구에서는 신시가지 계획 및 개발이란 상상 불가능한 개발, 즉 ‘(아직) 시민이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도시들은 현재 도시인구 급증을 겪고 있고, 곧 수백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도시로 옮겨와 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구증가와 도시화 현상으로, 개발도상국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인구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앞으로 늘어나게 될 도시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용 토지와 기반시설을 계획할 때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곧 등장할 미래”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관점에서 서울의 신시가지 개발 경험도 개발도상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외교거점이 될 수 있다

공공외교 차원에서 서울은 외교적 의미가 매우 큰

³ 외교의 참여 형태에 따라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도시외교(city diplomacy), 유명인외교(celebrity diplomacy), 스포츠외교(sports diplomacy), 경제외교(economic diplomacy), 비즈니스외교(business diplomacy), 환경외교(environmental diplomacy), 과학외교(science diplomacy)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⁴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강명구(2015) 참조.

⁵ 한국인은 자기의 위상에 대해 현실과 달리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직 저개발국가 국민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 가져야 하는 ‘책임’까지 외면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도시다. 한 해 방문객이 1,000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등록된 외국인이 27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보고 겪은 체험은 그대로 서울의 이미지, 나아가 한국의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된다.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의 경우를 보자. 브뤼셀은 서울의 한 개 구(區) 크기에 인구는 20만 명도 채 안 되지만 유럽연합(EU) 본부가 소재하고 있어 '유럽의 수도'라고 일컬어진다. 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서유럽연합(Western European Union, WEU), 베네룩스 경제연합(Benelux Economic Union),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등 유럽의 중요한 국제기구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의 정부와 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관계자들이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니, 브뤼셀은 단연코 유럽 외교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을 겪어온 유럽의 역사에 비추어볼 때 브뤼셀의 위상은 더욱 빛난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치열한 전쟁과 점령의 경험으로 점철된 과거사를 안고 있으며,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2차 세계대전으로 사망한 영국과 프랑스의 인구는 민간인 포함 100만 명이 넘는다. 강대국들의 전쟁과 긴장관계로 인해 평화의 시대가 요원할 것으로 보였던 유럽 대륙에 평화와 공조를 끌어낸 도시가 바로 브뤼셀이었다. 그런 면에서 브뤼셀은 서울시의 도시외교에 영감을 부여한다.

서울은 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이끌어낼 역량을 지닌 도시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간의 갈등과 문제를 논의할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듯 2011년 9월 서울에 한국, 일본, 중국이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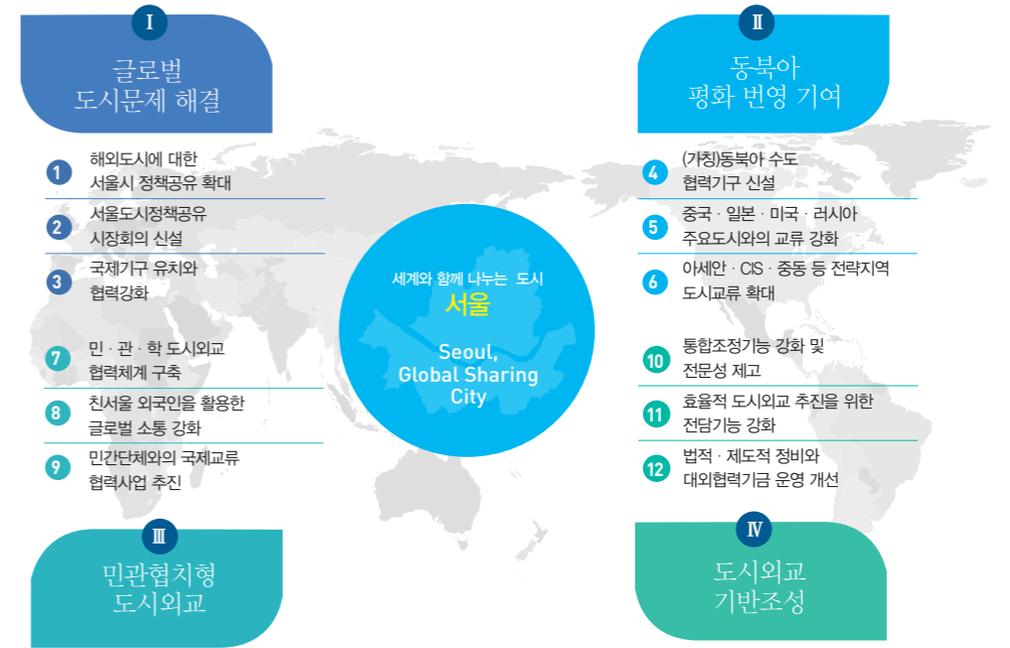
국제기구인 '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가 설치되었다.

또한 서울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서울이야말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소통과 협력의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상호간의 이해를 높여야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때로는 물적 지원과 원조를 포함하여 다양한 차원의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은 개발도상국들이 코리안드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원할 책임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대화와 협력의 국제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 세계의 중심도시 중 하나로서 서울이 해야 할 역할과 의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역할에 맞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제사회에서 외교의 중심도시로 활약할 수 있다.

새롭게 도약하는 서울시 도시외교

최근 서울시의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 발표는 시의적절하며 매우 반가운 일이다. '세계와 함께 나누는 서울(Seoul, Global Sharing City)'이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와 번영 기여, 민관협치형 도시외교, 도시외교 기반조성이라는 4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 아래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은 서울시 도시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예산, 조직, 인력 양성, 법령 정비 등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재정적으로 2020년까지 총 100억 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서울시 본청, 기관, 자치구별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교류 사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도시외교 정책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더



불어 공무원의 글로벌 전문성 강화, 계획 실행을 위한 관련 조례와 규칙의 개정 및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전통적인 국가 간 외교로써 풀어 내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도시화, 기후변화, 사회적 양극화 등과 같이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글로벌 이슈에 빠르고 실용적으로 접근

함으로써 글로벌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국지적으로는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고 세계 시민들의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리더이자 외교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서울시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W**

참고문헌

- 강명구, 2015, 왜 서울인가? 전 지구적 도시화와 서울 도시계획 경험의 의미, 세계와 도시 8호, 서울연구원
- 고경민, 장성호, 2014,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본 도시외교의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22(3), pp.49-72
- 서울특별시, 2013, 해외도시연구 및 전략적 교류방안 수립
- 신종호, 2014, 시진핑 시기 중국의 공공외교 전략,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문
- van der Pluijm, Rogier, 2007, City Diplomacy: The expanding Role of Cit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 https://seoulsolution.kr/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

Seoul, Global Sharing City

Seoul, Global Sharing City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

I. 도시외교의 시대

외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체인 정치군사 중심의 전통적인 외교는 기후변화 대응, 경제적 불평등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외교로서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환경, 교통, 주거 등 압축성장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도시로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환기 국제정세 아래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국가외교를 보완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서울시의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서울시 도시외교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담은 도시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II. 서울시 도시외교 현황과 과제

자매우호도시 확대를 통한 도시외교 외연의 확장

서울시는 2017년 3월 현재 57개의 세계 주요 도시와 자매우호결연을 체결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1968년 타이페이를 시작으로 미국 워싱턴 DC,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프랑스 파리, 러시아 모스크바 등 주요 국가의 수도를 중심으로 23개 도시와 자매결연(Sister City)을 맺고 있으며 1997년 캐나다 오타와를 시작으로 미국 LA, 중국 상하이, 베트남 호치민, 이탈리아 밀라노 등 34개 세계 주요도시와 우호도시 교류협정(Friendship City)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5~6기 동안 적극적인 도시외교로 자매우호도시가 급증하였는 바,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신규체결한 자매우호도시는 총 18개로 전체 자매우호도시 중 32%에 이릅니다.

서울시 자매우호도시 현황

(2017년 3월 현재)

구분	자매도시(23개)	우호도시(34개)
미국 (5개)	워싱턴 D.C,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휴스턴
중국 (9개)	베이징, 타이페이(대만)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저장성, 텐진시, 상하이시, 쓰촨성
일본 (2개)	도쿄	홋카이도
아시아 (11개)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울란바토르(몽골), 하노이(베트남), 아스타나(카자흐스탄),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방콕(태국)	비엔티엔(라오스), 콜롬보(스리랑카), 카트만두(네팔), 반둥(인도네시아), 호치민(베트남)
유럽 (17개)	앙카라(터키), 모스크바(러시아), 바르샤바(폴란드), 로마(이탈리아), 아테네(그리스), 파리(프랑스)	런던(영국), 베를린(독일), 코펜하겐·오덴세(덴마크), 암스테르담(네덜란드), 부다페스트(헝가리), 민스크(벨로루시), 부카레스트(루마니아), 이스탄불(터키), 밀라노(이탈리아), 바르셀로나(스페인)
오세아니아 (2개)	뉴사우스웨일즈(호주)	웰링턴(뉴질랜드)
아프리카 (4개)	카이로(이집트)	아디스아바바(에티오피아), 마푸토(모잠비크), 조와네(남아공)
북·남미 (7개)	보고타(콜롬비아), 멕시코시티(멕시코), 상파울로(브라질)	오타와·몬트리올(캐나다),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브라질리아(브라질)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참여로 글로벌 어젠다 선도

서울시는 1970년 아·태 관광협회(PATA) 가입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현재 총 17개의 주요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다자간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전자정부협의체(WeGO)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의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인간정주관리를 위한 지방정부망(CITYNET)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ICLEI)의 회장도시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ICLEI 총회 서울 개최시 '서울의 약속' 선언(2015.4) 및 GSEF '서울 선언'(2013.11)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경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어젠다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의 유치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서울에는 총 30개의 국제기구 사무소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센터 빌딩을 국제기구 전용시설로 지정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전체 국제기구의 50%에 이르는 14개의 국제기구를 신규로 유치하였습니다.

서울시 가입 국제기구 현황

(2017년 3월 현재)

연번	기구명	규모 (회원도시 및 단체)	개요	비고
1	아·태 관광협회 (PATA)	73개 지부 1,000여 회원	아·태 지역의 관광사업 발전 및 부가가치 창출	'70년 가입
2	세계대도시협의회 (METROPOLIS)	171개 도시 및 단체 (파리, 베를린, 카이로 등)	세계 대도시의 경제발전, 삶의 질 향상	'87년 가입 집행위원도시
3	인간정주관리를 위한 지방정부망 (CITYNET)	24개국 130개 도시 및 단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자치단체연합, NGO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인간정주 보장	'89년 가입 회장
4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CLG)	1,000여개 도시 및 단체 (바르셀로나, 베이징, 방콕 등)	지방자치단체 대민서비스 향상, 주거환경 향상, 지역사회 경제발전 지원	'98년 가입, 집행위원 및 아태지부 이사위원
5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ICLEI)	67개국 1,078개 도시 및 단체 (LA, 뉴욕, 베를린, 로마 등)	지역활동을 통한 지구환경 보호와 지속가능 발전의 성과 달성	'99년 가입 회장
6	아시아대도시네트워크 (ANMC 21)	13개 도시 (도쿄, 델리, 싱가포르 등)	아시아 대도시들간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도시의 공동번영 도모	'01년 가입
7	세계대중교통협회 (UITP)	90여 개국 / 2,900여 회원 (홍콩, 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 및 회원간 정보, 기술교류를 통해 개선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05년 가입
8	C40 기후리더십 그룹 (C40 Climate Leadership Group)	회원도시 40개 참여도시 19개	전세계 기후변화에 공동대응, 기후변화 관련 산업 발전 도모	'06년 가입 부의장도시
9	국제도시조명연맹 (LUCI)	정회원 : 71개 도시 준회원 : 52개 기업	전세계 도시조명 발전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	'07년 가입
10	글로벌디자인 도시협의체(GDCO)	26개 도시 (앙카라, 양저우, 방콕 등)	도시디자인을 통한 도시발전 경험과 관련 정책 개발, 공유	'11년 가입
11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UNESCO the Creative Cities Network)	116개 도시(7개 분야) (베이징, 시드니 등)	문화산업의 창조적,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을 지역차원에서 확대하여 세계문화 다양성 증진	'10년 가입
12	세계전자정부협의체 (WeGO)	회원도시 72개	전자정부 국제교류, 협력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도모, 전자정부 우수사례 공유, 확산	'10년 설립·가입 의장도시
13	세계관광도시연합회 (WTCF)	총168개 회원 도시(113),기관(55)	세계 관광도시들의 경제사회적 발전 증진, 관광을 통한 해외도시간 교류 확대	'12년 가입
14	세계협회연합 (UIA)	전세계 6,000여개 기구 및 협회	세계 국제기구 및 협회 정보데이터 구축, 회원간 정보공유 및 홍보툴 마련	'12년 가입
15	세계도시문화포럼 (WCCF)	32개 도시 (런던, 모스크바, 상하이 등)	세계 주요도시들의 문화정책 정보 공유와 교류를 목적으로 한 도시 간 정책 네트워크	'13년 가입
16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78개 지방정부 (샌프란시스코 등)	유엔-기업간 파트너십을 통한 세계경제의 지속 균형 발전	'14년 가입
17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SEF)	31개 도시 및 단체 (몬트리올, 빌바오 등)	민간조직과 지방정부간 국제적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체계적 발전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	'14년 설립·가입 의장도시

서울소재 국제기구 현황 (2017년 3월 현재)

정부간 기구(16개)	국제백신연구소 본부,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유네스코 서울사무소,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등 16개
준정부간 기구(7개)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본부, 아시아-유럽간 국제연구망, 이클레이 동아시아 본부, 시티넷 본부, 메트로폴리스 국제연구원 본원 등 7개
국제 NGO(7개)	세계변화사협회 아시아센터, 서울국제중재센터,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칼 폴라니 아시아지부, 유엔협회 세계연맹 서울사무소 등 6개

서울시의 경험과 정책을 세계와 공유

도시문제를 해결한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여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5개국 36개 도시 45개의 우수정책을 해외 도시와 공유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서울의 발전경험과 기술을 사업모델 화하여 본격 추진한 결과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전체 해외진출 사업의 84%에 해당하는 36개 사업이 신규로 진출되었습니다.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실적

교통 (22건)	태국 방콕 교통카드시스템 컨설팅 등 교통카드 13건, 필리핀 마닐라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 교통정보센터 3건, 스리랑카 콜롬보 교통체계 기술자문 등 교통계획 6건
상수도 (5건)	페루 찬차마요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시설개량 3건,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건설 컨설팅 등 시설조성 1건, 몽골 울란바토르 수질개선 등 수질관리 1건
전자정부 (5건)	모잠비크 마푸토 전자정부 타당성 조사 등 전자정부 2건, 인도 뭄바이 시민참여시스템 콜롬비아 빅데이터 활용 도시방재 시스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상권분석
도시철도 (6건)	방글라데시 치타공-친키아스타 신호설비개량 컨설팅 등 시설개량 2건, 베트남 호치민 민관협력 정책자문 등 재원 조달 2건, 필리핀 마닐라 경전철 컨설팅 등 기타 2건
도시계획 (2건)	베트남 다낭 도시개발 전략 컨설팅, 미얀마 한따와디 및 양곤주 남부 지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환경 (2건)	중국 후난성/허난성 하천복원 설계지원 컨설팅, 필리핀 마닐라 LED 가로등 설치
기타 (3건)	방글라데시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시스템 구축 컨설팅,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직원역량 강화 프로그램, 인도 스마트시티 한국형 기술(ICT) 적용 프로젝트

서울시 국제위상

이러한 도시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인해 서울시는 세계 10위권에 드는 국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국제회의 유치활동을 통해 세계 3위 권의 국제회의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서울의 국제위상

(2016년 기준)

모리재단도시경쟁력 지수 (GPCI : Global Power City Index)	4년 연속 6위
AT커니 GCO(Global Cities Outlook)	아시아 1위, 세계 10위
PWC 도시기회지수(Cities of Opportunity)	세계 11위
ARCADIS 지속가능도시지수(Sustainable Cities Index)	세계 7위
국제협회연합(UIA) 국제회의 개최도시 순위	세계 3위

서울시 도시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글로벌 어젠다와 교통, 환경, 주거, 상수도 등 대도시 공통문제 해결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 서울시 도시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도시외교의 중장기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간 서울시의 국제교류 사업은 해외 도시와의 우호친선 관계의 형성에 주력하였다면 이제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서울의 적극적인 역할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시외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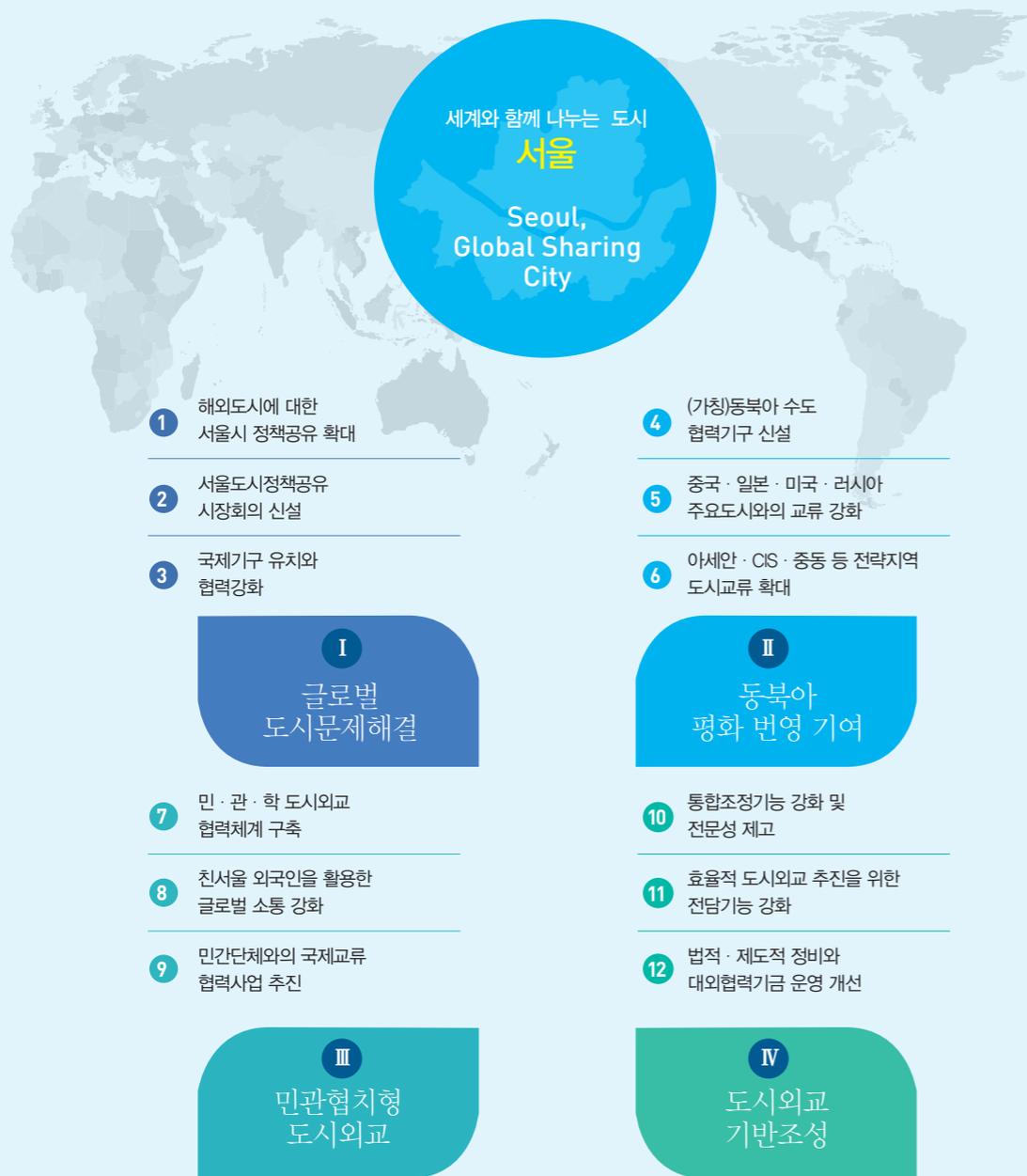
둘째, 세계 도시와의 정책공유를 서울시 도시외교의 핵심 브랜드로 삼고자 합니다. 서울의 경험과 기술을 해외 도시들과 공유하여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유치를 통해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해 나가자 합니다.

셋째, 동북아 평화 및 공동번영을 위한 도시외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외교의 방향과 연계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국가와 미국 주요도시와의 우호교류를 강화하여 전략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시외교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넷째, 민간역량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도시별 전문성과 경제, 문화, 국제개발협력(ODA) 등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자문단을 확보하고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도시외교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서울시 도시외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추진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도시외교 정책의 협의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자치구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지닌 도시외교 전담조직을 설립하여 추진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Ⅲ. 서울시 도시외교 비전과 기본방향



Ⅳ. 4대 기본방향 및 12대 정책과제

기본방향 1
정책공유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

정책과제 1
해외도시에 대한 서울시 정책공유 확대

서울은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발전을 이룬 도시로서 이러한 서울의 도시 성장 노하우는 많은 개도국의 롤 모델(role model)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발전경험과 도시관리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많은 해외도시들이 서울을 찾아오거나, 정책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도시에 대한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는 우리의 도시발전 경험을 개도국 도시들과 나누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울러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일자리 창출,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이미 콜롬비아 보고타, 몽골 울란바토르에 서울형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페루 찬차마요 상수도 시설 개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분석 컨설팅 등 현재까지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 세계 25개국 36개 도시에 전파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상대도시의 발전단계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수정책을 모듈화 하겠습니다. 우수정책 콘텐츠는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서울정책 아카이브'에 등록하고, 수요 맞춤형 정책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로 200건 이상의 정책 설명서



를 등록한 DB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시티넷(CityNet),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축한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회원도시 간 정책공유를 확대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해외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정책 콘텐츠의 전달력도 높일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정책공유의 사업재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및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기구를 대상으로 정책 마케팅과 협력사업 발굴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컨설팅, 타당성조사 등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간 우호협력에 기반한 전통적 외교에서 나아가 상대도시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적극적 협력을 위해 자매·우호도시뿐만 아니라 아세안, 서남아(인도 포함), 독립국가연합(CIS)와 같은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 도시와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과제 2

서울 도시정책 공유 시장회의 (Seoul Urban Solution Summit) 신설

서울시에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회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에도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등 12건의 국제회의가 계획되어 있지만 서울시가 주도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 교통, 주거문제 등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사례를 공유하는 시장급 국제회의를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해외 시장단의 참가율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에서 유사한 시기에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연계하여 개최하고 시장단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서울 도시정책 공유 시장회의(Seoul Urban Solution Summit)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용성장 컨퍼런스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기후변화대응 시장포럼을 같은 시기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각 두 개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시장들이 도시정책 공유 시장회의(Seoul Urban Solution Summit) 에도 참석하여 참가도시들의 포용성장과 환경관련 우수 정책을 서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국제회의를 같이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를 통합·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책과제 3

국제기구 유치와 협력 강화

서울에는 현재 총 30개의 국제기구가 소재해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등 정부간 기구가 15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동아시아 본부, 시티넷 본부 등 준정부간 기구가 7개 있고, 또한 서울국제중재센터, 칼 폴라니 아시아 본부와 같은 비정부기구(NGO)가 6개 있습니다.

이중 13개 기구는 서울시가 국제기구 클러스터로 조성한 서울글로벌센터빌딩(서울 종로구 소재)에 입주하여 한 공간에서 상호 긴밀한 교류·협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기구간 교류·협력은 활발한 도시외교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유치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조례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도 국제기구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20개의 국제기구를 추가로 유치해 서울을 아시아 국제기구 허브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6,000여 개의 국제기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계협회연합(UIA) 정보데이터를 활용하고, 아울러 국제기구 유치뿐 아니라 UN 산하 기구 신규 창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혁신파크에는 혁신·사회적경제 등과 관련되는 국제기구를 집중 유치하고,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에도 국제기구 사무전용 공간을 확보하여 국제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책과제 4

(가칭)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 신설

한국·중국·일본은 공동 번영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협력이 필요하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으로 인해 복잡한 역학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찍이 1995년 베세토(BESETO-베이징·서울·도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출범시킨바 있으나 한·중·일의 정치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2000년도를 기점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 및 도시간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협력 추진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4개 국가 수도 도시(대한민국-서울,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몽골-울란바토르) 간 상설 협력기구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기구는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사안을 배제하고 기후, 지속가능발전 등 각 수도 도시들이 직면한 공통의 도시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및 문화·청소년 교류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 기구를 통해 4개 수도도시 시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향후,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시 북한의 평양까지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 주요 사업(안)

- 보건복지: 고령화 대책, 전염병, 장애인 재활기술 공동 연구
- 환경분야: 기후변화 대응, 황사, 환경산업 및 기술 공유 등
- 문화관광: 문화정기교류 콘서트, 공동 관광사업, 공동광고, 스포츠교류 등
- 교육 및 청소년: 대학간 학점인정 캠퍼스, 청소년 및 차세대지도자 포럼 등

정책과제 5

중국·일본·미국·러시아 주요도시와의 교류강화

(1) 중국

서울시 1993년 중국 베이징과 자매도시 체결 이후 중국 주요도시와 경제·사회·문화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베이징, 상하이 등 9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였고 다른 도시들과 교류협력을 추진중입니다. 서울시와 중국도시 간에는 관광, 투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 공통 관심분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도시외교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정부 차원에서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동북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 등 전략거점도시와 우호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중국의 날 등 문화축제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베이징시간 정책교류를 위한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를 통해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체결현황

- 자매도시(2) : 베이징(1993), 타이베이(1968)
- 우호도시(7) : 산둥성·장쑤성·광둥성(2008), 저장성·톈진시(2009), 상하이시·쓰촨성(2014)

(2) 일본

서울시는 1988년 도쿄도와 자매도시, 2010년 홋카이도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이래 긴밀한 교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코하마시, 미야자키현 등 다른 지역과도 인적 교류 및 관광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안전 분야, 관광 등 양국 간의 공통 관심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존의 도로함몰 및 상하수도 등 도시안전 관련 정책교류에서 다양한 분야로 그 협력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20년 도쿄올림픽을 활용하여 관광 분야에서 적극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미국

서울시는 현재 미국 내 총 5개의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와는 2014년부터 서울시 직원을 파견하는 등 인적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자매 우호도시와의 실질적인 우호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뉴욕, 시카고 등 전략 거점도시와 우호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싱크탱크 및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추진하고 있는 인적 교류를 휴스턴, LA 등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휴스턴, LA에 서울거리 및 서울공원을 조성하고 LA 한인축제에 문화예술 공연단을 파견하여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 경제·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시와의 정책교류를 제도화하고, 시카고시와도 지속가능발전 정책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 대표단의 미국 순방과 연계하여 미국의 국제적인 싱크탱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국외교협회, 브루킹연구소 등 주요 기관에서 서울시 도시외교 전략, 도시안보문제 관련 공동 컨퍼런스 개최 등 서울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체결현황

- 자매도시(3) : 호놀룰루(1973), 샌프란시스코(1976), 워싱턴 D.C.(2006)
- 우호도시(2) : 로스앤젤레스(2006), 휴스턴(2014)

(4) 러시아

서울시는 1991년부터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도시계획 등 도시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모스크바 시장단의 서울 방문시에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벤치마킹하고, 2016년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스크바 도시화 포럼을 개최하여 서울시의 도시계획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연해주 등 한반도 주변 도시와는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자매도시인 모스크바시와 기존의 정책교류에서 문화, 관광, 청소년 교류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를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향후 전략적인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의 주요 도시와 우호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17년 서울시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 모스크바 도시화 시장포럼 참가를 통해 도시 정책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리아노브스크에서 열리는 제4차 WeGO 총회 참가를 계기로 러시아 주요도시들과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러시아의 문화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문화 분야에서 우호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극동지역의 지방협력 포럼에 참여하여 극동지역 주요 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외교부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및 한국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연계하여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도시와 교류가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과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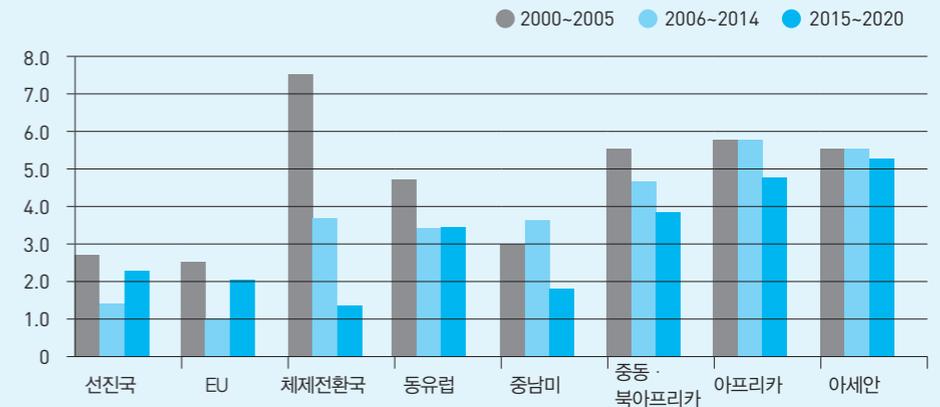
아세안·CIS·인도·중동 등 전략지역 도시교류 확대

서울시는 인프라 개발 및 도시문제 관련 정책 수요가 높은 아세안(ASEAN), 독립국가연합(CIS), 인도, 중동 등을 전략적 교류 대상지로 정하고 해당 지역과의 도시외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아세안

아세안의 경우 기존 자매우호도시들과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재까지 교류가 미흡하였던 아세안 국가의 수도 도시들과의 교류를 추진하여 2020

세계 지역별 경제성장률 비교
- ASEAN Community(한아세안센터),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IMF)



아세안(ASEAN) 개요

- 명 칭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ASEAN)
- 회원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10개국
- 사무국 : 자카르타(인도네시아)[1967~]



서울시와 아세안(ASEAN) 지역 자매우호도시 현황

- 4개 국가 6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체결 및 교류 협력 중
- 자매도시(3) : 자카르타(인도네시아/1984), 하노이(베트남/1996), 방콕(태국/2006)
 - 우호도시(3) : 비엔티엔(라오스/2014), 반둥(인도네시아/2016), 호치민(베트남/2016)

년까지 아세안 전 회원 국가 수도와 자매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아세안 10개국 중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4개국 6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어, 앞으로 5개 국가의 수도도시[프놈펜(캄보디아), 네피도(미얀마),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 마닐라(필리핀),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와의 자매우호도시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독립국가연합(CIS)

CIS 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그간 교류가 적었으나 기존 자매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우호교류 확대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2017년 서울시 대표단의 CIS 지역 방문을 필두로 현지 고려인 커뮤니티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외교부, 기재부, KOICA) 및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대도시 공통문제인 교통, 환경, 전자정부 분야 정책공유를 추진하여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자매우호도시 현황

- 4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체결 및 교류 협력 중
- 자매도시(3) : 모스크바(러시아/1991), 아스타나(카자흐스탄/2004),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2010)
 - 우호도시(1) : 민스크(벨라루스/2008)

(3) 인도·중동

인도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특히 IT 분야를 선도하며 급격하게 성장,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 서울시 대표단의 인도 방문을 통해 인도 수도 텔리와의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하고 향후 도시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동 지역의 경우, 주요 도시 시장을 초청하여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70년 대부터 우호관계를 형성해온 테헤란(이란) 시장을 시작으로 텔아비브(이스라엘) 시장 등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기본방향 3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해 민관협치형 도시외교 추진

정책과제 7

민(民)·관(官)·학(學) 도시외교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는 도시외교정책 수립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국제교류 전략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제교류전략자문단 풀(pool)을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수적 확대가 아니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지역별 전문가와 UN·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 기후변화대응·포용적 성장 등 주제별 전문가를 50명까지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도시외교 성과 및 개선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 대표단 해외 출장시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교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공공외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과장 정례회의를 건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외교현안을 이해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보를 교류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소재 국제대학원, 국립외교원 등과는 공동포럼을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도시외교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학계 전문가 초빙 강연 등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제 8

친서울 외국인을 활용한 글로벌 소통 강화

서울시는 외국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유학 또는 체류 경험이 있거나 시정에 관심이 높은 해외 인사로 구성된 지역별 서울클럽(총 10개 도시 143명)을 통해 국제교류지원, 시정홍보대사 및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과 시 방문 외빈을 명예시민으로 선정(총 92개국 770명)하여 자국에 서울시를 홍보하고 양 국가간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을 활용하여 도시외교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해외주요도시에서 영향력있는 인사를 서울 글로벌 대사(Seoul Global Ambassador)로 임명하고 서울 글로벌 대사 자문위원회(Seoul Global Ambassador Advisory Council)를 개최하여 자문기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통해 도시 간 실용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손님이 아닌 글로벌 서울시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관광 정보 및 콘텐츠를 해외에 알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서울 메이트(Seoul mate) 제도를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 모임으로 확대하여 서울을 전 세계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클럽 개설 현황(2017. 3월 현재)

구분	계	베이징	마닐라	베를린	뉴욕	LA	쓰촨성	산둥성	도쿄	울란바토르	방콕
인원수	143명	11명	13명	17명	14명	15명	15명	10명	14명	17명	17명
구성일		'13.4월	'13.8월	'14.8월	'14.9월	'14.9월	'14.11월	'14.11월	'15.2월	'15.8월	'16.7월

명예시민 수여 현황(2017. 3월 현재)

구분	계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수	92	19	29	2	21	3	14	4
수여자수	770	186	225	215	69	21	46	8



정책과제 9

민간단체와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서울시에는 2017년 3월 현재 총 230여개의 비영리법인·민간단체가 구호개발(116개), 우호교류(37개), 문화체육관광(32개)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외교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지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과 협업하여 서울시 도시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올해 국제교류 관련 비영리법인·민간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울시와의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비예산 협력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도시외교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민간단체로부터 국제교류사업을 공모하고 공공성과 효과성이 높은 사업은 서울시와 민간단체간 사업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예산은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을 활용하고, 3년 지원 일몰제를 통해 안정적 사업추진단계까지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소재 국제교류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현황(2017.3월 현재)

구분	계	구호개발	우호교류	문화체육관광	학술연구	아동청소년	경제협력
계	229	116	37	32	28	8	8
비영리법인	135	77	17	14	20	2	5
비영리민간단체	94	39	20	18	8	6	3

기본방향 4

제도적 정비와 역량강화로 도시외교 추진기반 조성

정책과제 10

도시외교 통합조정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서울시는 각 부서뿐만 아니라 22개 투자출연기관과 25개 자치구에서도 해외 도시 및 기관들과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사 또는 중복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제교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외교 컨트롤타워로써 ‘도시외교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국제교류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매년 시장단 해외출장 예정지역, 신규 결연체결 협의 지역 및 집중 교류지역 등 중점 도시외교 계획을 공유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중 ‘국제통상 직류’를 도입하겠습니다. 국제통상 직류의 공무원이 국제협력, 통상 및 투자유치, 관광, 해외홍보, 국제기구·국제회의 등 국제교류 업무 관련 보직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업무 노하우와 경험이 전수될 수 있도록 매년 서울시 도시외교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울시 도시외교 백서’를 제작하고 국립외교원에 ‘국제교류 업무 담당자 위탁교육’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서울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제 11

효율적인 도시외교 추진을 위한 전담기능 강화

서울시에서는 도시외교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획조정실 산하 국제협력관을 두고 있으며 국제협력관은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 2개 부서를 관할합니다. 다만 도시외교의 집행기능을 지원하는 조직이나 해외사무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도시로서 위상에 걸맞게 도시외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은 국제정세 분석, 도시외교 전략 수립 등 정책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외도시와 교류협정 체결 이후 후속조치 관리를 비롯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중인 국제교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외교의 실행력 보강을 위하여 관광 마케팅, 기후변화대응, 정책공유 등을 시행하는 부서·기관 등과 연계하여 해외도시 교류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은 서울시의 정책을 세계도시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유치와 협력기능, 서울시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의 지원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관계 대사를 미주·구주 전담 대사와 아시아 전담대사로 이원화하여 도시외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정책과제 12

법적·제도적 정비와 대외협력기금 운용 개선

도시외교와 관련하여 2016년 8월부터 ‘공공외교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법규로는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도시외교 재원으로는 일반예산 이외에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12년도말 기준 약 27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사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전략 자문단 운영, 서울 글로벌 대사 운영, 국제교류 민간단체와 협업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사업 중 다년간 계속되어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재검토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2020년까지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0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수입금 및 민간법인·단체 기부금 등 지속적인 수입금 확충을 통해 총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 도시외교가 나아갈 길

01

서울시 도시외교의 특화를 위한 도전

고준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김형수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03

지방정부 국제기구, 도시외교 전략의 지렛대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를 중심으로

송기돈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시 도시외교의 특화를 위한 도전¹

[글] **고준호** 연구위원 jko@si.re.kr
서울연구원

도시외교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국가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의 전통적인 외교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종식, 소프트파워(soft power)²의 등장 등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그 실효성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반면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자국의 역사·전통·문화·예술·가치·정책·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국제사회에 자국의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1960년대 중반 미국 터프트대학교 플래처스쿨의 학장이었던 에드먼드 길리언(Edmund Gullion)이 처음 사용한 ‘공공외교’라는 용어는 원래 미국의 생활방식을 다른 나라의 대중에게 알리는 단순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수평적이고도 쌍방향적 관계를 형성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다원화된 개방형 외교를 의미하게 되었다.

공공외교는 급속한 세계화와 민주화의 확산에 따라 이슈도 다양해지고 참여 주체도 확대되어왔다. 특히 교통 및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최근에 이르러 도시는 공공외교의 핵심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도시는 인구와 경제의 중심이자, 국가 간 교류의 접점이기도 하다. 또한 글로벌화는 분권화를 가속화하여 도시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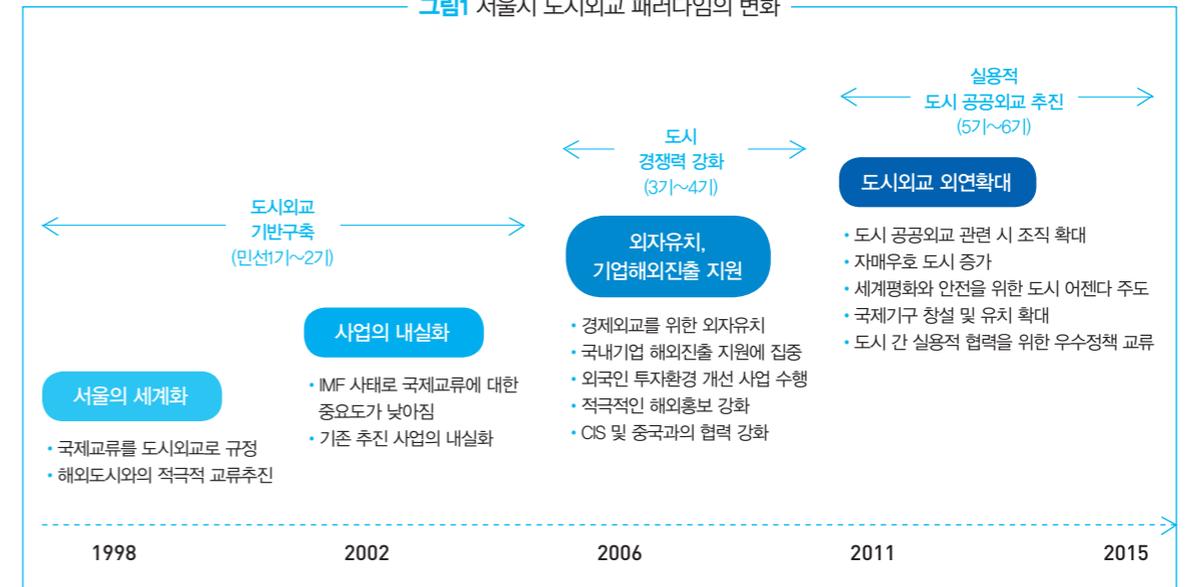
있으며, 그로 인해 도시는 점점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도시 기능의 확대는 도시가 수행해야 할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현재 1,000만 인구의 대도시 서울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문제를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도시문제 해결에 관한 한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빠른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도시문제가 점차 광역화되고 국제화되는 시점에서 도시외교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서울시 도시외교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해외의 도시외교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서울시 도시외교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서울시 도시외교가 걸어온 길

서울시의 외교 패러다임은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서울시 도시외교의 초기라 할 수 있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화와 도시외교 사업의 내실화에 집중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선 1기(1995~1997)에는 서울시와 해외도시 간의 교류를 국제교류

그림1 서울시 도시외교 패러다임의 변화



¹ 이 글은 서울연구원에서 수행된 '도시외교 기본 전략 방안 연구'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² 군사적 개입, 강압적 외교, 경제제재 조치 등의 물리적 힘으로 표현되는 하드파워(hard power)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강제력이나 명명보다는 매력을 통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끌리게 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힘을 지칭함.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셉 나이(Joseph W. Nye Jr.)에 의해 1990년경부터 사용된 용어(자료: <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

에서 도시외교로 격상시키고 해외도시와의 사업 교류를 추진하였다. 민선 2기(1998~2002)에는 아시아 금융위기(일명 IMF 사태)로 서울시정에 국제교류의 비중이 그리 크게 작동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에 시행 중인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시기였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도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외국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거나 IT와 금융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쪽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외적으로는 국내기업의 외국 진출을 돕기 위해 구소련 연합국가와 중국을 대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해외 홍보사업에 노력했다.

2010년대 초반부터는 도시외교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도시외교와 관련된 부서를 신설하고,³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해외도시와 자매우호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리더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국제기구 창설 및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도시의 공동발전을 위한 우수정책 교류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제까지의 도시외교 노력을 토대로 앞으로 비약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서울시가 지닌 세 가지 강점에 기반을 둔 것이다. 첫째, 과거 60년간 서울시가 개발도상 도시에서 선진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의 성공적인 도시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도시화 과정에서 메가시티⁴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환경·복지·경제 등 여러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지니고 있다. 셋째, 서울시는 동북아 지역 등 국제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어젠다를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외교적 역량을 축적하여 최근에는 리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⁵ 이러한 장점은 서울시가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자산이다.

물론 서울시가 극복해야 할 문제도 있다. 우선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⁶ 이에 2014년에 제정된 ‘도시공공외교통합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도시외교 기본계획’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지역적 편향성을 보이는 현재 서울시의 도시외교도 문제다. 유럽·북미를 상대로 일반 외교에 치중하는 한편 동남아시아에 우수정책을 수출해왔으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전 세계 도시를 외교 파트너로 하는 채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문화·예술에 치중되었던 도시외교 분야도 다양하게 확대하여 시민의 참여기회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³ 2014년에 서울시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국제협력관과 서울연구원 내 해외 도시를 연구하는 세계도시연구센터를 신설하였으며(현재는 글로벌미래 연구센터), 2015년에는 SH공사(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도시정책을 수출하는 정책수출사업단을 출범시켰음.

⁴ 메가시티란 일반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거느린 대도시권을 의미한다.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37개 도시권이 이에 해당하며, 2030년에는 41개로 증가할 것으로 UN은 전망하고 있음(<https://en.wikipedia.org/wiki/Megacity>).

⁵ 이에 대한 사례로 서울시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세계전자정부협의회(WeGO) 및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의 창설을 들 수 있음.

⁶ ‘세계와 함께 나누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이 계획에는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 등 4대 기본방향과 1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공공외교에 성공한 해외 선진도시는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해외 선진도시에서는 각 도시의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 파리, 본, 제네바, 도쿄의 경우를 두루 살펴보기로 한다. <표1 참조>

뉴욕의 도시외교는 시장실 직속의 국제담당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뉴욕시 국제담당과는 2012년 블룸버그 시장 재선 임기 때 뉴욕 유엔위원회와 영사위원회가 통합된 조직이다. 국제담당과는 해외도시와의 협력을 위해 비정부기구인 ‘글로벌 파트너스(Global Partners)’를 설립하였다. 이 기관에서는 100개 이상의 도시와 교류를 진행하면서 45개 도시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34개 도시와 우수정책 자료은행을 구축했고, 매년 도시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굵직한 도시외교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2015년 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데이비드 던킨스 전 뉴욕시장을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사장으로 위촉함으로써 도시외교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독일은 1991년 본으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국제협력플랫폼’을 주요 기능으로 설정하였고, 그 결과 본은 UN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2014년 현재 본에 소재한 UN 등의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수는 150개에 달하며, 국제도시정상회담인 ‘도시의 목소리(The Voice of the Cities)’를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본의 도시외교는 지속가능성, 생태다양성과 같은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국제기구와 국제회의를 유치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술의 도시 파리는 ‘세계문화의 중심지’답게 역사적인 기념물과 박물관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나 전시회를 기획하여 일 년 내내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1970년 프랑수아어권 49개국 265개 도시의 지역협의체인 AIMF(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Maires Francophones)를 조직한 이후로 줄곧 프랑스어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도시·문화·지역개발·역량강화·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 등을 논의하며 국제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그림2 참조>

제네바는 18세기부터 구축한 ‘신뢰와 안정’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유럽과 세계의 분쟁 조정자 기능을 맡고 있다. 특히 ‘국제도시 제네바’라는 비전 아래 국제평화, 안전, 인권 등을 상징하는 다양한 국제기구 및 회의를 유치하고 있다.

도쿄는 마스조에 요이치(舂添要一) 도지사(도지사)가 2014년 ‘도시외교 비전(My Vision for City Diplomacy)’이라는 시민선언문을 발표할 정도로 도시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수립된 ‘도쿄비전 2020’은 성

7
1989년에 뉴욕, 런던을 시작으로 이후 파리, 싱가포르 (1990년), 서울 (1993년), 시드니 (1994년), 북경 (1997년)에 순차적으로 설치하였음 (출처: http://korea.clair.or.kr/clair/about_clair.asp)

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통해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고자 하는 장기계획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1988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체인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自治体国際化協会,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CLAIR)'가 설립되어 해외 7개 도시⁷에 사무소를 두고 일찌감치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그림2 AIMF 회원도시 분포



자료 <https://www.aimf.asso.fr/>

표1 해외 도시외교 추진 사례

도시	목적	방법
뉴욕	자매도시 추가 및 국제행사의 확대	시장직속 도시외교 전담조직 '국제담당과'와 '글로벌 파트너스' 설립
파리	세계문화의 중심지	프랑스어권 지역협의체 'AIMF' 창립, 전시·컨벤션 통합브랜드 'VIPARIS' 개발
본	독일의 유연도시 / 국제대화 플랫폼	'Concept for International Contacts of the City of Bonn' 조례 채택
제네바	세계평화와 공생을 바탕으로 한 유럽의 중재자	신뢰, 안정 중립국 이미지와 국제도시 이미지 활용
도쿄	중앙정부와 지자체협력 / 세계 최고의 도시	도쿄비전 2020 수립

자료 저자 정리

서울시 도시외교의 비전과 도전 과제

비전 | 연계도시, 리더도시, 해결도시

해외 선진도시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서울시도 도시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위 글로벌 도시(High-level Global City)⁸'를 향한 비전과 추진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비전은 해외도시와의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Bridge city(연계도시)', 국제사회에서 도시 협력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Leader City(리더도시)', 실용적 외교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Solver City(해결도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림3 참조> 이러한 비전에 따른 추진전략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이 직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용적 외교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는 민간의 협력까지 아우르는 체계화된 거버넌스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전 1 | 영역은 확대하고 기능은 강화할 것

서울시가 국내의 도시들을 잇는 연계도시, 그리고 전 세계 도시의 어젠다를 주도하는 리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해외도시와 국제교류를 나누는 수준에서 벗어나 관계를 폭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대상지역 및 영역을 확장하여 포괄적 서울형 외교관계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세계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중국과 아세안(ASEAN) 지역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서울-중국-아세안을 잇는 전략적 협력관계(서울시 도시외교 골든트라이앵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외 5개 대륙의 도시들과도 교류를 넓혀 현재 52개인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100개 수준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 자매우호도시들과는 표면적인 성과 위주의 양해각서 체결을 뛰어넘어 협력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

그림3 서울 도시외교 추진 방향



8
영국의 도시 연구가인 피터 홀(Peter Hall)이 제시한 개념으로, 세계 선도 도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명령과 조정의 기능으로 정부와 국제기구 및 주요 기업들의 본부를 보유한 도시, ②금융과 비즈니스 기능으로 회계·광고·컨설팅 등의 산업유치 기능을 지닌 도시, ③관광산업 기능이 발달한 도시, ④문화산업 기능이 발달한 도시를 의미함.

리기 위해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도시 공공외교가 필요하다. 개발도상의 도시와는 정책 및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선진도시와는 문화·학술교류와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도 실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나 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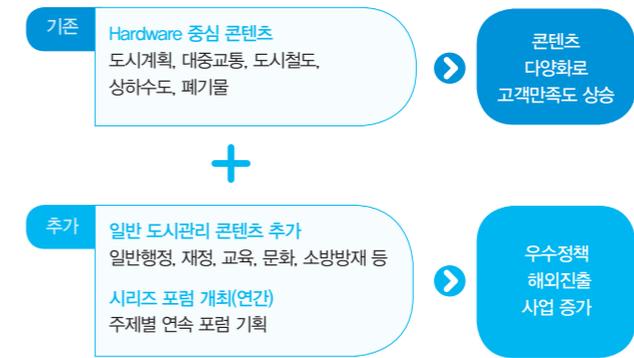
그 분야도 문화와 예술 교류 수준에 그치지 말고 공동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들어가야 한다. 서울의 대기오염 문제를 위해 국제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최근 상황은 이러한 필요성을 입증한다. 서울의 서울국제경제자문단(Seoul International Business Advisory Council, SIBAC)과 상하이의 국제기업자문단(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Advisory, IBLAC)처럼 성격이 유사한 기관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면 공통 관심사를 논의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이 도시외교 주체로 나서는 것도 효과적이다. 미국의 경우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인, 소설가, 운동선수, 기업인 등이 전략적 발표자 프로그램(Strategic Speakers Program)을 통해 타국을 순회하면서 개인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스럽게 미국에 대한 호감을 심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이 서울시 공공외교의 주체가 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전 2 | 우리의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할 것

최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해온 서울의 경험을 배우고자 해외 도시의 많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서울을 찾고 있다. 이러한 해외 도시의 관심과 정책 협력의 수요를 고려할 때 서울이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도시계획, 교통, 상수도, 환경, 전자정부 부문 등의 우수정책을 전략적으로 공유하고 수출한다면 서울은 국제적인 해결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 개발도상국은 경제 발전과 도시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도시개발을 통한 인프라 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했던 우수정책 전수를 전 세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 개발을 국가발전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인도, 지역통합 및 경제개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진행 중인 중남미, 포스트오일(Post-Oil)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도시 관리시스템을 효율화시키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중동을 중점 대상지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수정책의 콘텐츠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2000년대 초반에 시행된 대중교통체계 개편, 청계천 복원, 난지도 개발(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상

그림4 해외도시 공무원 대상 교육 콘텐츠 다양화 방안



암 하늘공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등의 하드웨어 정책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일반 도시관리 및 소프트웨어 정책의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는 충분하다는 전제 아래 특정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시리즈 포럼' 등을 개최하여 해외도시 공무원과 전문가의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전 3 | 아시아의 국제기구 중심지로 육성할 것

외교에서 국제기구의 설립과 운영은 '협력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도시가 유치하는 국제기구의 수는 도시의 글로벌화와 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한 지표가 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유치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수는 도쿄, 방콕,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내 주요 도시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향후 서울시는 고령화, 여성, 인권 등 서울시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 국제기구의 수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 산하기관, 학술단체 간의 협업을 토대로 국제기구 유치와 창설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유치하고 있는 기존의 국제기구를 활성화시켜 진정한 국제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글로벌센터에 있는 서울국제중재센터는 2013년에 개소하였지만 그 활동은 런던 국제중재법원,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등과 같은 해외 우수기관에 비해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영토 분쟁이나 민족 갈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특화하여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도전 4 | 도시외교 추진 기반을 다질 것

서울시 도시외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여러 분야의 사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향성을 갖고 기능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시외교 기능을 수행하는 현재의 기관이나 담당부서의 기능을 강화·확대해야 하며, 서울 도시외교를 주도하는 전담기구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수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글로벌센터에 머물러 있는 국제기구 클러스터의 외연을 확대·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도시외교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서울시의 대외협력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요구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W**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무엇이 문제인가¹

[글] 김형수 교수 songmook@dankook.ac.kr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세계의 외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다

2015년 기준 세계의 도시화율은 54.0%로, 도시 거주 인구가 농촌 거주 인구보다 높은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82.5%로 아시아 국가 49개국 중 11위 수준이다.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싱가포르, 마카오, 쿠웨이트 등과 같은 도시국가 규모를 제외하면, 일본에 이어 2위로 보고되고 있다.² 이러한 도시화 현상은 향후 도시가 맡을 다양한 역할에 대한 예고편으로, 이미 각국 도시들은 외교 영역에서 국가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국제외교 활동을 펼치면서 도시의 이해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물론 외교 영역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국가의 독점성은 약화되고 있는 추세다.³ 21세기 들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외교정책을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수평적 협치 방식의 다각적 외교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과 다극화 현상 속에 등장한 ‘촉매외교(catalytic diplomacy)’ 개념이 이를 대변한다. 촉매외교란 UN이나 다국적기업과 같은 초국가단체와 더불어 NGO나 지방자치단체 등 하부 국가단체들이 외교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전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타국의 국민을 상대로 자국의 이미지나 국가 브랜드 제고에 초점을 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문화외교는 종종 공공외교의 핵심으로 간주되기도 한다.⁴ 우리나라도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 평화유지군(PKO)의 적극 참여뿐만 아니라 해외 문화원의 활성화, 한국어 교육기관의 증설, 국제포럼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 이 글은 김형수·노병렬, 2016,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집 2호, 한국세계지역학회, pp.91-113.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2 아시아 역내국가의 도시화율은 홍콩(100%), 마카오(100%), 싱가포르(100%), 카타르(99.2%), 쿠웨이트(98.3%), 일본(93.5%), 이스라엘(92.1%), 바레인(88.8%), 아랍에미리트(85.5%), 요르단(83.7%)순이며, 참고로 북한은 60.9%이다.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 Saskia Sassen, 2004, pp. 875-939

4 U.S. Department of State, 2005, p.1

참고문헌

- 고준호, 2015,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전략 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외교부, 공공외교 포털 (<http://www.publicdiplomacy.go.kr/index.jsp>)
- 이데일리, '서울시, 도시외교 활성화 선도한다', 2017. 4. 2.

이와 같이 현대 국가들은 외교정책을 소수 정책결정자들에게만 위임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비국가주체 및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게도 기회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비롯하여 사회단체 및 기업, 나아가 주변국가 및 국제기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는, 이른바 협치(governance)의 외교적 환경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양한 행위자들이 영향을 끼치는 국제외교 환경에서 국가는 이들과의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요구받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단체가 펼쳐온 공공외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현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 도시들과 국제교류 협력을 맺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중앙정부와 별개로, 즉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중앙정부의 전통적인 외교방식과는 달리 공공외교적 성격이 짙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로, 1995년 6.27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지방자치 시대와 맞물린다. 이때부터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형식을 탈피하여 지방행정의 세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독자적인 지역발전 전략이 수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 기준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 도시와 체결한 국제교류 건수는 1,183건으로 세계 65개 국가의 947개 도시와 1,183건의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 가운데 19개 지자체는 국제교류 체결이 없다.) 국가별 선호도는 중국이 가장 높은 476건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1, 2.3 참조> 하지만 이와 같은 수치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자매교류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우호교류만을 계산한 것으로, 단순 교류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내 지자체들의 국제교류가 활발해진 원인은 국가 간 교류를 넘어설 만큼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의 보고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 79개국 1,189개 도시와 1,593건의 교류협력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중 국제교류 협력을 체결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4개 시·군으로 조사되었다.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교류대상 국가 및 도시를 살펴보면 17개 시·

표1 국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자치단체 및 교류건수 (2017년 기준)

교류순위	1	2	3	4	5
자치단체명	경기도	서울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교류건수	260건	198건	137건	134건	128건

자료 행정안전부, 201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 종합현황(2017.3 기준)

주 본 자료는 시·도(분청) 및 기초자치단체별 교류건수를 합산한 것임

표2 국제교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대상지역 및 교류건수(자매결연, 우호협력) (2012년 기준)

교류순위	1	2	3	4	5
국가명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러시아
교류건수	640건	215건	176건	57건	53건

자료 행정안전부, 201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 종합현황(2017.3 기준)

표3 국제교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대상지역 및 교류건수(자매결연, 우호협력) (2012년 기준)

연번	기초자치단체명	교류협력 체결 건수
1	경북 포항시	10개국 26개 도시
2	경남 창원시	9개국 24개 도시
3	경기도 평택시	4개국 18개 도시
4	전북 군산시	4개국 16개 도시
5	인천시 중구	5개국 15개 도시
6	충남 아산시	8개국 15개 도시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현황 (2017.3월 기준)

도가 60개국 379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으며, 체결 건수로는 서울, 부산, 경기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교류를 체결하고 있는 222개 시·군·구 또한 세계 59개국 1,079개 도시와 교류를 맺고 있는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은 자매결연(sisterhood relationship)과 우호협력(friendship)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국제교류가 ‘외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대체로 ‘자매결연’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자매결연은 “한 정부가 다른 지방정부에 대해 상호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행정·경제·문화·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교류협력의 약속을 맺는 것”을 말한다.⁵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0호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의회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지자체가 자율적인 '합의서'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⁶ 자매결연은 중앙 정부 차원의 외교활동 범위 내에서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하는 등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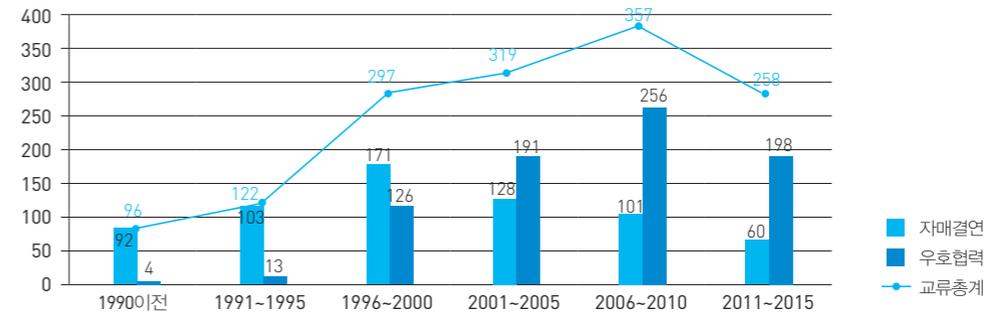
또 다른 국제교류 협력 방식인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의 이전 단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교류 추진에 대한 예고의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일정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식이다. 자매결연과 달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지는 않지만, 추진방식은 자매결연과 동일하다. 다만 한 국가에서 이중의 자매도시를 맺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

1960년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건수는 총 10건으로, 최초는 1961년 6월 경남 진주시가 미국 오리건주 유진(Eugene)시와 체결한 자매결연이었다.⁸ 이후 1970년대 총 18건, 1980년대 총 60건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3월 기준 자매결연 체결 현황은 55개 국가와 683건, 우호협력은 54개 국가와 910건의 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있다.⁹ 국제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던 1990년대를 기점으로 5년 단위로 시기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1 참조>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륙별 교류지역을 살펴보면 아시아가 1,077건 (67.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208건(13.1%), 북미 197건 (12.4%), 남미는 54건(3.4%), 대양주는 33건(2.1%), 아프리카 24건(1.7%)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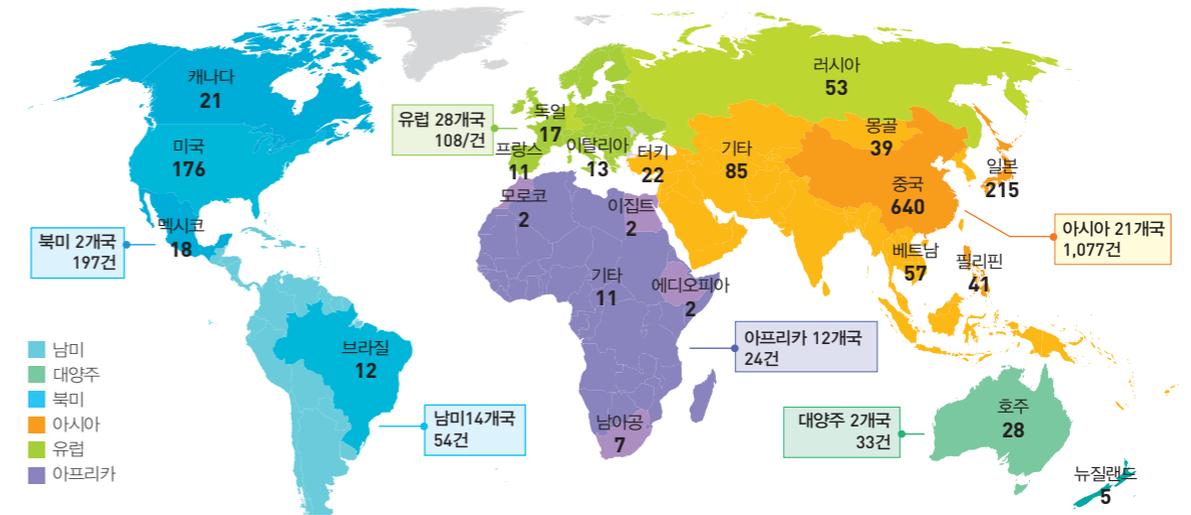
이를 국가별로 분석해 보면 중국이 640건(40.1%)으로 가장 많고, 일본이 215건(13.5%), 미국 176건(11.0%)으로 이들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4.7%를 차지하고 있다. 지리적 인접성과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국제교류 협력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베트남(57건), 몽골(39건), 필리핀(41건) 등과의 교류협력이 증가한 추세를 나타낸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결혼이주 여성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문화적 접근성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이들 국가 외에도 러시아(53건), 호주(28건), 인도네시아(20건), 멕시코 (18건), 독일(17건) 등의 경우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림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시기별 국제교류 현황(1991~2015년)



자료 행정안전부, 2012a;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2017. 3월 기준) 내용을 1차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

그림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대륙별 교류 비중



자료 행정안전부, 2012a;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2017. 3 기준) 내용을 1차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

표4 주요 교류국과의 교류건수 추이

대상국가 기준연도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베트남	호주	몽골	캐나다	필리핀	기타	계(건수)
2005년	335	142	98	28	22	21	19	9	9	159	842
누적건수	39.7%	16.8%	11.6%	3.3%	2.6%	2.5%	2.3%	1%	1%	19%	100%
2015년	589	200	163	46	47	25	36	20	40	292	1,458
누적건수	40.3%	13.7%	11.2%	3.1%	3.2%	1.7%	2.5%	1.4%	2.7%	20%	100%
2017년	640	215	176	53	57	28	39	21	41	323	1,593
누적건수	40.1%	13.5%	11.0%	3.3%	3.6%	1.8%	2.4%	1.3%	2.7%	20%	100%

자료 행정안전부, 2012a;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2017. 3 기준) 내용을 1차 자료로 활용하여 재구성

6 외국 지자체와의 자매결연은 행정자치부 훈령인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제47호에 의해 행정자치부의 승인인 얻어야 했으나, 2004년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7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2007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백서, p.9.

8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p.9.

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gaok.or.kr/gaok/exchange/listRegion.do?menuNo=200081>) 참조

10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2008, p.11; 김재근·서인석, 2012, p. 417;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참조

11

홍성우, 2011, p. 213

12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1994년 7월 15일 '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으로 출범하였다. 1995년 3월 22일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으로 명칭을 바꾸어 활동해 왔으나, 정부의 공공기업신진화 방침에 따라 2009년 말 해산되었다. 출범 당시 일본 도쿄,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중국 상하이, 호주 시드니 등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였으나 해산 후 재외공관으로 통합되었으며, 국제교류협력 관련 업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현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13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2008, p.29.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에 무엇이 담겨 있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주로 행정, 인적교류, 문화예술, 관광, 청소년, 스포츠, 기술·학술, 경제, 민간단체, 상징사업 등의 분야로 나뉜다.¹⁰ 교류 분야는 관계자 및 실무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편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국제화 인식 정도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¹¹ 그동안 교류협력은 주로 양쪽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특정 개인의 제안 또는 상대측의 제안으로 체결되곤 했다. 그러나 현재는 해산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¹²의 소개, 지역 언론사나 지방의회 제안, 대학 간 교류나 유관기관 등의 알선·추천, 공동사업 등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체결되는 추세다. 그 밖에 한자(漢字)로 도시명이 동일한 경우, 온천이나 광산 등과 같은 유사한 환경적 동질성, 한국전 참가 등이 체결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¹³ 이러한 내용은 관점에 따라 분류 내용과 방식에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도시 간 교류협력 외에도 국제기구나 국제회의를 통해 공공외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무대로 손꼽히는 기관이 30년 역사의 세계대도시협회(World Association of the Major Metropolises, Metropolis), 회원 도시가 1,000개가 넘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nited Cites and Local

Governments, UCLG)이다. 세계대도시협회에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8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에는 충청남도과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가 참여하고 있다. 역내 활동으로 동북아 지역 6개국 7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NEAR)에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의 세계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교류 협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되, 협력 대상국가 및 도시의 이익 증진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기술교류 협정, 상대측에 대한 투자보호 협정, 국제원조 활동 등과 같은 영역에서의 교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한계는 무엇인가

전통적인 외교정책은 중앙정부의 독점적 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비정부단체 및 초국가적 조직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과 연결망을 가지고 공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정책 결정의 분산화는 중앙정부의 독점적 권력에 대한 시민 통제력의 확대와 더불어 지방분권화(localization)에 대한 요구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외교정책 결정의 분산화는 현실적으로 정책의 복잡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복잡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기능적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을 염두에 두고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된 위임사무와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구분된다. 공공외교 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의 중앙정부와 교섭할 수 없으며, 자국의 중앙정부에게만 부여되는 '조약' 체결권이 없다. 국제법상 인정되는 조약은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조약 당사국들은 조약 내용에 구속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은 국제법상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창설

표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분야 및 내용

교류분야	해당항목 예시
행정교류	공무원 상호교환, 파견근무, 공무원 연수, 사찰단 및 조사단 등
인적교류	사찰단 및 조사단 파견, 청소년 상호방문, 학생교류(수업참관), 홈스테이 등
문화예술교류	축제 참가, 예술단 공연, 바둑 및 서예교류전, 미술전시회, 서적기증 등
관광교류	관광물산전, 수학여행, 의료관광유치 등
청소년교류	홈스테이, 수학여행, 청소년 스포츠 교류, 어학연수, 국제인턴십
스포츠교류	스포츠 교류단 상호 파견, 친선축구대회, 친선야구대회, 국제육상대회 등
기술·학술교류	행정정보관련 세미나, 국제심포지엄 개최, 농업기술연수, 산업관련 연수 등
경제통상교류	경제교류협정체결, 시장개척단 파견, 경제상담회 개최, 국제인턴십, 상공회의소간 교류, 투자설명회, 직항로 개설, 기술이전 협의 등
민간단체교류	상공회의소간 교류, 예술협회·의사회 등 민간단체간 교류, 대학생 교류사업 등
상징사업	공원조성(상호), 거리 명명식, 자매도시 전사관 개관, 명예시민증 수여 등
기타	의료봉사, 성금전달, 동식물 교환 및 기증, 재난시 상호원조 등

자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p.11; 김재근·서인석, 2012, p. 417; 대한민국시도지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재구성

하는 조약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¹⁴ 양자 간의 교류협정은 ‘대외합의서’나 ‘기관 간의 약정’ 또는 ‘양해각서’ 수준으로 한정된다. 그 내용은 물론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반면 자율성을 지닌다. 따라서 포괄적인 합의서나 양해각서를 국제법상의 조약으로 오인하여 교류 상대 도시에 부담을 부과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기능적 차원에서 국제교류 실무 담당자들의 비전문성을 해소해야 한다. 공공외교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업무는 국제 감각을 지닌 전문직 공무원이 담당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발된 전문 외교관이 정부의 외교정책을 수행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국제교류 협력 업무에 대한 장기 비전과 전략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서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과 관련된 실·국장급의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곳은 서울시 국제협력관, 인천시 국제협력관, 강원도 글로벌사업팀 등 3개 지역뿐이다. 그리고 과장 직급에 ‘국제협력’ 명칭이 포함된 지역은 부산시, 광주시, 울산시, 전라남도 등 4개 지역에 불과하다. 나머지 시·도의 경우는 기획관리 혹은 경제통상 관련 실국 소속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또한 순환 보직으로 배치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어 국제교류 업무 전반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활성화될 수 없는 실정이다. 국제교류 업무의 특성상 상호 신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장기적 비전 수립과 이에 기초한 인력관리 전략이 요청된다.

셋째, 프로그램 차원에서 교류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제교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해 상대지역과의 유사성 및 상호 보완성이나 향후 발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¹⁵ 그러나 전문인력 부재는 교류 대상 및 교류 형태의 다양성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단기적 이벤트성 교류 유형에 그칠 수 있다. 교류국가의 67.6%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이나 중국·일본·미국 등 3개국에 편중된 현상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교류협력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과 전문적인 계획 없이 정무직인 고위 정책 결정자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리가 전개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교류 내용의 실용성은 저하되고 진전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빠지는 우려를 안고 있다.

¹⁴ 김대욱·류영아, 2014, pp. 29-31

¹⁵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p. 15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할 몇 가지 제안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립할 것

도시의 공공외교가 확대되고 있는 전 지구적 현상은 ‘국제정치 탈집중화(decentralization)’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국제정치 영역의 변화를 의미하며, 제한된 수의 국가 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주체가 참여하는 관계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의 공공외교는 도시 자체의 이익을 위해 국제정치 영역에서 다양한 행위주체들과 주체적 관계를 맺는 외교방식이다. 도시 공공외교의 주체는 시장을 비롯한 행정 관료와 시의회 의원, 그리고 시와 관련된 다양한 대표단체들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제교류 유형은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체결을 통한 평면적 형태로, 실효적인 관계의 진전을 위한 초기의 양적 팽창 단계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 지구적 ‘위험사회’의 도래와 세방화(glocalization) 등의 교차 영향으로 도시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복합성을 더해가고 있다. 예컨대 빈곤, 환경, 보건, 에너지, 인권, 테러 문제 등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과 외국도시 및 관련 행위자들의 연합체인 국제기구와의 협력 필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도시는 독자적인 공공외교를 전개할 수 있지만, 공공외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 도시와 연합하여 공동외교 전선을 펼칠 수도 있다. 도시·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과 유럽도시연합(Eurocities) 등은 도시가 공동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도시들도 실질적인 공공외교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연계협력(networking) 노력이 요청된다.

다양한 공공외교 행위자들을 발굴할 것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외교는 교류형태에 있어서 다양성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도시들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온 뉴욕이나 도쿄 등의 도시 사례를 검토하여 세계의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원 분산전략을 세워야 한다.

오늘날 계층적이고 통합적인 행정조직이 분산되고 분절화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시민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주민-기업-시민단체 등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즉 전통적인 중앙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의 공공외교는 그 중심이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 이동하는 추세이며, 다층적인 '소통'과 '연대'에 의한 공공외교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 내에 소재한 NGO나 도시의 활동가, 도시의 창조계급 등 다양한 공공외교 행위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전방위적 전략이 필요하다.

도시문화 정체성에 기초한 전략을 수립할 것

한스 투흐(H. Tuch, 1990)에 따르면, 공공외교란 “기본적으로는 타국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대국 국민들과의 소통수단”이다. 조셉 나이(J. Nye)는 공공외교의 본질을 “비물질적 권력자원을 동원하여 상대의 자의적인 동화와 추종(co-option)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⁶ 따라서 도시 공공외교의 핵심전략은 도시문화가 지니는 상징성을 발견하고 이를 국제교류의 소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공공외교의 주체 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개성 넘치는 도시문화의 확산 과정에서 관광산업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도시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나 도시와는 차별화 된 우리만의 독특한 정 신문화를 정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특화 전략을 수립할 것

인구가 1,000만 이상인 대도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다양한 요구가 다층적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계층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외교정책의 수립 및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 층위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도시가 지향하는 문화·관광 중심의 특화 전략을 세우고, 도시 산업구조의 특성이 반영된 권역별 외교전략 수립이라는 지역사회의 기대치를 수용해야 한다. 동시에 교류를 희망하는 상대지역이 공감할 만한 특화 전략을 개발하여 전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경쟁해야 한다. 특화 전략을 피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해당 도시에 소재한 기업들의 취약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는 공공외교 전략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공공외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21세기의 현대국가들은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정책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세계화·지식정보화·민주화·탈냉전 등이 특별한 영향을 산출한다.¹⁷ 경계가 무너지고 상호 연계성이 확대되어 정책의 범주가 모호해지거나, 정책영역 간의 연계로 인해 복잡해지는 경향이다. 현대의 도시는 도시 자체에 내재한 다양한 정책문제와 복잡한 정치적 흐름이 결부되어 대안의 선택과 정책집행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치과정과 집행과정이 각각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때로 특정 시점에서 이들이 예기치 않게 결합되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드물게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 열리기도 한다.¹⁸ 이때 정책사업가(entrepreneurs)로서 자치단체장은 전략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각종 기술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을 구사해야 한다.

지방화 시대가 확장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집중화를 견제하면서 끊임없이 ‘정책의 창’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정책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율성, 전문성 및 자원동원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전략적인 공공외교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외교 전략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지역외교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7급 이하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외교 직렬(series of class)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방외교 전문가가 양성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 국제통상 직렬을 국제교류 업무에 우선 배치하고 이들을 전문직제로 지정하는 한편, 인사상의 순환 배치를 지양한다면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다.

둘째, 다원 분산 전략을 통한 다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내 ‘공공외교 정책 공동체’를 제안한다.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특정 정책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를 같이하는 집단과 개인들로, 그들은 개별적 관심에 따라 활동하는 객체들이다.¹⁹ 이들과 연계하여 정책공동체를 구성하고 정책과정의 참여를 확보하게 된다면 탈정치화(depolicitize)된 정책집행을 기대할 수 있으며,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공동체의 장점들을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¹⁷ 김국신 외, 2008, pp. 17-18

¹⁸ J. Kingdon, 1984, p.175.

¹⁹ Michael Hill & Peter Hupe, 2002, p.200

¹⁶ Joseph S. Nye, Jr., 2011, p 9; p. 22

셋째, 도시문화 정체성에 기초한 전략을 수립하려면 도시문화에 대한 재조명과 도시 정체성을 상징하는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내에 내재하는 유·무형의 역사·문화적 자산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을 통해 문화콘텐츠를 풍부하게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관련요소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연성과 다양성을 갖춘 행정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관련 제도의 정비가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공무 국외여행은 규칙상 외국 중앙정부·지자체·지방의회 초청, 3개국 이상의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한 출장, 도지사과 교육감의 국외출장 요청 등의 경우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두어 외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가 지향하는 '도시 공공외교의 수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조례의 입안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는 2014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제정하여 공무 목적의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례가 공공외교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규제에 초점을 두고 운용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W**

참고문헌

- 김국신 외, 2008,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 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pp. 17-18
- 김대욱·류영아, 2014,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추진방향 마련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 29-31
- 김재근·서인석, 201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구조적 특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26권 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 417
- 김형수·노병렬, 2016,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집 2호, 한국세계지역학회, pp.91-113.
- 우양호·이정석, 2010,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간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397.
- 홍성우, 2011,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현황과 공무원 인식수준의 비교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3권 1호, 한국지방자치학회, p.203.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2007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백서
- 행정안전부, 2012a,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 국가별
- 행정안전부, 2012b,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 지자체별
- J. Kingdon, 1984,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Harper Collins, NY, p.175.
- Michael Hill & Peter Hupe, 2002, Implementing Public Policy, Sage Publications, London, p.200
- Joseph S. Nye, Jr., 2011, "Power and Foreign Policy," Journal of Political Power, vol. 4, no. 1, p. 9; p. 22
- Saskia Sassen, 2004, Local Actors in Global Politics, Current Sociology vol. 52, no. 4, pp. 649-670
- U.S. Department of State, 2005, Cultural Diplomacy, The Linchpin of Public Diplomacy,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Cultural Diplomacy, p.1
- Yishai, Blank, 2006, The City and the World, Columb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4, no. 3, pp. 875-939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gaok.or.kr/>)

지방정부 국제기구, 도시외교 전략의 지렛대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를 중심으로

[글] 송기돈 교수 songkd@jbnu.ac.kr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외교 환경의 지각변동, 지금 중앙정부 외교는 변신 중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외교(diplomacy)’란, 정치실체들 간에 대외적인 기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여러 문제들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려는 행위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법률·기술적으로 풀면, 주권적 권위로부터 위임받은 행위 주체가 국제법 및 의정서 방식으로 소통하고 협상하여 공식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라 할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외교는 정치실체들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관념·규범·역할·실행 등으로 작동하며, 각각의 인식과 실천 정도에 따라 다양한 ‘외교들(diplomacies)’이 구현되곤 한다.

이와 같은 외교 행위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오늘날 근동(Near East)으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도시국가에서 그 기원을 엿볼 수 있다. 그 ‘실행’의 시점은 기원전 8000년경 도시혁명 출현 이후 5000여 년이 지나, 도시국가들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외교가 ‘기록’으로써 남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19세기 이후 발견·해석된 고대 유물 분석 결과, 문자가 발생한 시점인 기원전 3000년경부터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결국 외교 행위는 그 규모와 특성상 도시(국가)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시작된 것이다. 이런 특성은 국가 규모가 확대되었던 15세기에

도 이탈리아나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뚜렷한 형태로 관찰되고 있다.

서방세계 밖에서 시작된 동방외교는 고대 그리스, 로마, 비잔틴, 이탈리아 등을 거치는 경로로 이동하여 17세기 베스트팔렌 국제질서¹를 통해 현재의 근대 주권국가 중심형으로 정립되었다. 이후 20세기 들어 모든 대륙에서 ‘외교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제적 대표성을 독점하던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외교는 세계화에 따른 위로부터의 압력, 지방화·도시화로 인한 아래로부터의 요구, 지식·정보·네트워크화로 인한 옆으로부터의 다층적 협공을 받으면서부터 물질적·구조적·구성적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더욱이 탈냉전에 따른 희망적 사고가 퇴조하고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9·11 테러 등이 발생하면서부터 국가 중심의 외교보다는 세계화된 시민의 인간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외교적 지성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는 다양한 외교적 변화를 기획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외교 유형들이 등장하였다. 외교 주체의 경우 정부와 비정부가 함께하는 촉매외교(catalytic diplomacy), 지역기구 간 결사외교(associative diplomacy), 시민역량을 활용하는 시민외교(citizen diplomacy), 지방정부와 같은 국가하위 수준의 준외교(para-diplomacy) 등을 포괄하는 다중트랙 외교(multi-track diplomacy), 외교 영역의 경우 정치·군사 외의 문화·환경·인권·스포츠 외교 등 부문외교(sectoral diplomacy)로 구분된다. 또한 외교 방식 차원에서 보면 전통적인 협상 외에 과학·기술·정보·지식 등과 관련한 가상 디지털외교(virtual/digital diplomacy), 전자외교(e-diplomacy)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식(技識)외교(technolege diplomacy), 네트워크외교(network diplomacy) 등이 대표적이다.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 외교(smart diplomacy) 또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외교 주체와 영역 및 대상 모두에 걸쳐 작동하는 복합적인 외교 유형에 해당한다.

변환을 추구하는 이러한 외교 유형들은 현실형과 이념형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변환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 또는 협치외교(governance diplomacy)라 할 수 있고, 후자는 구성외교(constructivist diplomacy) 또는 탈(脫)베스트팔렌적 탈근대외교(post-modern diplomacy)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이러한 변환의 경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우월한 외교적 지위를 완화하여 다른 외교주체들과 진정어린 파트너십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도시외교의 한계도 바로 여기에 있다.

¹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이 독일과 스페인을 상대로 30년 전쟁의 종결을 위해 독일 베스트팔렌 지방의 뮌스터와 오스 나브뤼크에서 체결한 강화 조약. 최초의 근대적인 외교 회의를 거친 조약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변환의 추세에도 여전히 낯설기만 한 도시외교

이러한 외교의 변환적 추이, 특히 '준외교'를 통해 지방정부로 대표되는 도시외교(city diplomacy)의 재생과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² 그러나 세계의 저명한 외교연구소들이 공통적으로 애용하고 있는 '다중트랙외교(Institute for Multi-Track Diplomacy, IMTD)'의 모형에는 중앙정부 외의 8개 트랙 가운데 지방정부가 여전히 빠져 있다.³ 물론 지방정부를 중앙정부 트랙에 포함하여 거론하지도 않는다. 이렇듯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도시외교가 '정부' 부문과 '비정부' 부문 사이에서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는 외교를 여전히 전통적인 상위정치(high politics)로 인식하는 구도 때문이다. 즉 도시외교를 자매결연 도시 간 저수준의 교류·협력 정도로 생각할 때 도시에 '외교(정책)'가 부여되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중앙)정부 간 국제기구가 합의 및 구속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려는 인식 때문에 도시의 국제기구 외교는 더욱 현실성이 낮다.

최근 영국 웨스트민스터대학의 도시연구자들은 지방정부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에서 도시 주체가 국제행위자가 되기 위한 방식을 다음과 같이 조건화한 바 있다. 첫째 도시들의 집합적 관여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또는 참여, 둘째 국가(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도시 자체를 대표하여 다른 국제기구들을 상대로 전개하는 로비활동과 관여, 셋째 국제질서의 기득 세력인 국가 및 국제기구를 상대로 도시가 독립적 행위자로서 자체(도시) 의제들로서 관여하는 방식이다.(Herrschel & Newman 2017: 2) 이는 비록 도시가 지방정부 국제기구와 관계없이 개별 도시 스스로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오랫동안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nited Cites and Local Governments, UCLG)은 이러한 제도적 노력을 축적해왔고 UCLG의 수많은 회원 도시들은 이미 그 기반을 부여받은 상황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국제적 인식과 정책적 실천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과제는 곧 지방정부를 위한 외교적 분권(diplomatic decentralization)과도 연계된다. 즉 주권국가를 대표하는 중앙정부는 다른 정부 주체인 지방정부의 도시외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UCLG는 외교적 분권에 대한 근거로서 지방정부야말로 “시민들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정부 수준(the level of government closest to the people)으로서, 공동체의 필요를 가장 잘 확인·이해하는 시민과 공공기관 간 사회적 계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주체이며, 따라서 현재의 중앙집권형 모델이 변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UCLG World

Congress, Rabat, Morroco 2013)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지속가능발전 부대표인 시에르라(Katherine Sierra)가 UCLG의 'GOLD I'(지방민주주의와 분권에 관한 최초 연구보고서)의 서문에서 제시한 압도적 표현은 이러한 주장에 상황적 근거를 제시한다.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성격이) ‘글로벌적’인 반면에, 그 해결방안은 대체로 ‘지역적’인 것으로서 (문제 발생의) 현상이 지닌 특수한 상황이란 점에서 독특하다”는 것이다.(UCLG & World Bank 2008) 로마 교황도 2015년 10월 제3차 세계지방경제발전포럼(World Forum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LED)에서 “지방적인 것(local)이야말로 인간적이고 효율적이며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 100여 국가에서 온 2,0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전한 바 있다.

UCLG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자체의 제도화 수준은 물론 다른 지방정부 국제기구와의 통합 또는 파트너십, 그리고 유엔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들과의 네트워크 작업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왔다. 그리하여 UCLG는 현재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지방정부 국제기구이다. 비록 소속 국가의 중앙정부와의 관계, 전통적인 중앙정부의 외교 영역 및 권한,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 실현의 가능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UCLG의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실천행동의 의지를 고려하면 도시외교의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도시외교의 정상화가 아직 상상의 수준을 극복하기 어렵다면, 머지않아 다가올 현실을 위해서라도 지금 기초 작업을 다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지방정부 국제기구로서의 UCLG와 도시외교

UCLG의 제도적 통합 과정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이념을 매개로 한 파비안도시계획(Fabian Municipal Program, 1891)이나 도시의 특정 이슈를 매개로 한 국제적 도시운동의 사례가 있었다.⁴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도시운동의 계기는 1913년에 창설된 국제도시연합(UIV)(벨기에, Ghent)에서 비롯된다. UCLG의 모태라 할 수 있는 UIV가 창설됨으로써 도시 중심의 지방 간 거시적 목표 설정, 포괄적 도시 의제, 조직·운영의 상설화 등이 가능해 졌다. UIV는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이후 활동을 재개하면서 국제연맹(1919)을 잠재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등 조직 및 활동을 확대해오다가 1928년 국제지방정부연합(IULA)으로 명칭

⁴ 후자의 한 사례로 1904년 영국도시연구위원회(British Committee for the Study of Municipal Institution)가 주관한 국제정원도시회의(International Gardencity Congress) 등이 있음.

² 지방정부 주체의 외교 용어는 확대된 외연 수준에서 '국가 하위 수준 외교(sub-national or sub-state diplomacy)' 또는 '지방 외교(local diplomacy)'가 같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UCLG의 공식 표현으로서 '도시외교'로 통일하여 사용함.

³ 다중트랙외교의 8개 주체: 전문가, 기업, 사적 시민, 연구·교육기관, 평화행동주의, 종교, 기금, 매체·소통

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특화된 이슈를 중심으로 별도로 창설되어 활동해오던 세계도시연합연맹(FMCU)-도시연합기구(UTO) 및 세계대도시협의회(METROPOLIS)와 현재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으로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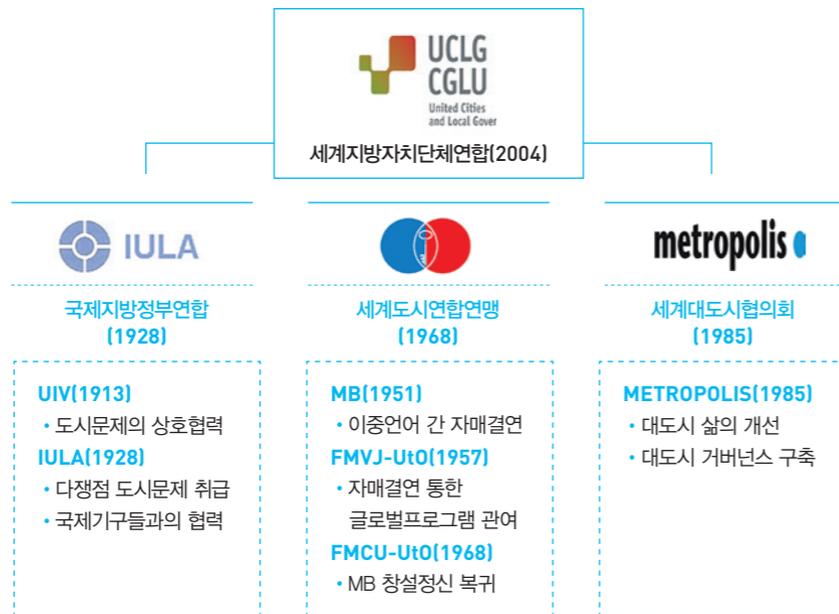
IULA를 중심으로 통합된 UCLG에서 FMCU-UTO는 IULA의 기존 활동과 중복되는 점 때문에 현재 그 존재감은 미미하다. 그에 비해 METROPOLIS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화함으로써 UCLG의 공식적인 대도시 부문(section)에 규정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UCLG가 주요 구성 주체인 도시를 대도시(metropolitan areas), 중간도시(intermediary cities, 인구 5만~100만), 기타 도시(territories, 인구 5만 이하의 지역, 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구성됨)로 유형화하여, 도시 규모별 전략과 상호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METROPOLIS의 위상은 특수하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도 METROPOLIS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

UCLG의 구성

2004년 창립총회에서 채택되어 2013년 제4차 세계총회에서 개정된 UCLG 규약(Constitution)은 전문, 배경(환기·고려·인정·강조·공약사항), 기구 명칭, 본부 및 법적 지위, 목표, 회원제도, 회원의 권리·의무, 가입·탈퇴, 대도시 및 지역정부 부문과 지역부문, 거버넌스 구조, 기타(선거, 책임, 의사규칙, 규약개

그림 1 UCLG의 제도적 통합과 관련 기구들의 설립 목적



주 IULA(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국제지방정부연합)
 UIV(Union Internationale des Villes: 국제도시연합)
 MB(Le Monde Bilingue: 이중언어세계)
 FMVJ(Fédération Mondiale de Villes Jumelées: 세계자매도시연합)
 FMCU(Fédération Mondiales des Cités Unies: 세계도시연합연맹)
 UTO(World Federation of United Towns Organisation: 도시연합기구)⁵
 METROPOLIS(World Association of Major Metropolises: 세계대도시협의회)

⁵ UTO(World Federation of United Towns Organisation)는 프랑스어 명칭인 FMCU(세계도시연합연맹)의 영어 명칭으로서 병기(併記)하여 사용하는 관례가 있음.

임무

- 지방정부 간 및 광범한 국제사회 내에서의 협력을 통해 민주적 지방정부의 통합된 목소리와 세계적 주창을 위해 지방정부의 가치·목표·이익을 증진하는 일

목표

-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민주적인 지방자치 정부의 증진
- 회원 정부들 간의 단결 및 협력의 증진
- 국제사회(특히 유엔)에서의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정치적 대표성 보장
- 지방정부와 관련된 범세계적 정보의 원천 역할
- 자유롭고 자율적인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설립·강화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학습·교류·능력 구축에서 범세계적인 원천의 역할
- 경제·사회·문화·직업·환경 개발의 증진과, 훌륭한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사회적 포용의 원칙에 기초한 대중에의 봉사
- 인종 및 젠더 평등의 증진과 국제법 및 UCLG의 가치·정책에 비추어 정당하지 못한 모든 유형의 차별과의 투쟁
- 지방 거버넌스의 다양성을 반영한 강력하고 민주적인 UCLG의 구축
- 지방정부 간 분권 및 국제협력
- 세계시민들 간 상호 학습과 우애의 수단으로서 자매결연과 파트너십의 증진
- UCLG 임무·가치·목표의 틀 내에서 정책·프로그램·구상의 개발

과업

- 적극적인 로비 및 옹호·주창
- 국제사회에서 지방정부의 핵심이슈에 대한 정책·입장의 증진
-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들과의 적극적인 협업
- 지방자치·국제협력의 원칙에 기초한 구상 및 행동프로그램의 개발 (특히 분권 및 재정기금 개발을 통한 개발)
- 교류·파트너십의 국제적 플랫폼의 구축을 통한 지방정부의 능력 강화
- 회원 지방정 간 네트워크 강화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필요에 부응하는 세계적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
- 지방정부, 지방 관련 단체, 국제적 단합, 노하우 교류에 관한 정보 원천 제공
- 전세계에 대한 UCLG 관련 정보의 확산
- UCLG의 정치적 영향력 및 재정 자율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회의·행사 활동의 개최 및 멤버십의 확대

정, 공식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UCLG의 임무·목표·과업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UCLG 2013)

회의 거버넌스 구조는 총회, 세계이사회, 집행이사회로 구성된다. 전체 회원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총회(General Assembly)는 UCLG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감독의 책임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뒤에 소개되는 세계총회(World Congress)가 이를 근거로 소집된다. 세계이사회(World Council)는 UCLG의 정책 작성을 담당하며 총회가 결정한 정책들에 대한 결정과 실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집행이사회(Executive Bureau)는 세계이사회가 제출한 제안과 결정을 실행하고 세계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기관이다. UCLG의 실질적 활동을 전개하는 12개의 위원회(Committees),⁶ 6개 실무그룹(Working Groups),⁷ 그리고 2개의 특별임무반(Taskforces)⁸이 모두 집행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다.

도시외교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개발협력·도시외교위원회(DCCD)로서, UCLG 설립 다음해인 2005년에 각각 별도로 설립되었던 ‘분권협력위원회’와 ‘도시외교위원회’가 2010년에 통합된 것이다. 동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과 도시외교에 관한 지방정부의 이슈들에 관한 정책 제안과 개발을 통해 UCLG에 조언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참고로 UCLG가 평화구축(peacebuilding)을 핵심 주제로 하는 ‘헤이그 도시외교의제’는 통합되기 이전인 2008년에 발표되었다.

또한 3개 유형의 부문(section)이 있는데, 7개 지역 부문은 아프리카(UCLG Africa)·아태지역(UCLG-ASPAC)·유라시아(UCLG Eurasia)·유럽(CEMR)⁹·중남미(FLACMA)·중동·서아시아(UCLG MEWA)·북미(FCM)이고, 대도시 부문은 METROPOLIS, 그리고 지방정부 포럼 부문은 지역의 대변자·옹호자로서 국제협력을 추구하는 ORU-FOGAR가 있다.¹⁰

UCLG의 외부 네트워크의 경우, 공식적인 제도적 관계로만 국한해도 비교적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을 다루는 C4(1992)를 들 수 있다. 이는 UCLG의 3개 기구(IULA, FMCU-UTO, METROPOLIS)와 SUMMIT¹¹가 참여하고 있으며, 1994년 다수 지역기구들을 통합하여 C4Plus로 확대되었다.¹² 이 기구가 설정한 목표는 1996년의 유엔도시정상회의(UN Cities Summit)의 개최와 함께 유엔 정주회의(Habitat II)로서, 지방 차원에서 협업을 통해 특수 의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지방정부회의(World Assembly of Cities & Local Authorities, WACLA, 1996)는 C4Plus가 주관하

여 유엔과 지방정부의 단일 접촉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유엔도 유엔지방정부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f Local Authorities, UNACLAUN, 위원장을 UCLG가 맡음)를 통해, ‘Citynet’과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주로 UCLG와 공동으로 대응적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UCLG의 도시외교 개념 그리고 수행활동 및 전략

이제 UCLG의 도시외교에 관한 개념(화)에 관해 살펴볼 차례다. UCLG의 공식적 개념은 2008년 ‘헤이그 도시외교의제’를 통해 표명되었다. 준비과정에서 몇 년간 유지되어 온 개념은 다음과 같다.

“시민들이 평화, 민주주의, 번영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창출할 목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시 대 도시 협력을 통해, 갈등 및 전쟁에 처해 있는 지방정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 및 관련 단체들의 도구.”

그러나 ‘헤이그 도시외교의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채택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시민들이 평화, 민주주의, 번영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창출할 목적으로, 사회적 결합[단결], 갈등의 예방·해결 및 갈등 후 재건(post-conflict reconstruction)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방정부 및 관련 단체들의 도구.” (UCLG, & The City of The Hague & VNG International, 2008)

위의 두 정의를 비교해보면 도시외교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도시외교의 활동 내용에는 변화가 있다. 전자의 “갈등 및 전쟁과 관련한 도시 간 협력”이라는 모호한 의미로부터 후자의 “사회적 결합, 갈등의 예방·해결, 갈등 후 재건”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명시적인 실행활동 계획에서 ‘평화구축(peacebuilding)’과 연계되고 있다. 이는 지구적 이슈에 대한 현재의 보편적인 ‘평화’ 접근법과 이의 일차적 실행주체인 유엔 ‘평화활동(peace operations)’과의 연계성을 시사한다.([표 1](#) 참조) 그러나 UCLG의 실제적인 도시외교가 평화구축 외에도 다양한 의제영역에서 전개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도시외교 개념은 이보다 더 확장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표 2](#) [표 3](#) 참조)

6 위원회는 젠더평등, 분권·지방자치, 재정·개발, 문화(지속가능개발의 제4축으로서의 문화의제2), 개발협력·도시외교, 사회적 포용·참여 민주주의·인권, 도시건강, 주변도시, 도시이동성, 디지털·지식기반도시, 도시전략기획, 지중해지역 위원회로 구성됨.

7 실무그룹은 능력·제도구축, 매개도시(i-Cities), 이주·공동발전, 관광·지속가능개발, 지방경제개발, 중동지방정부와의 협력 그룹으로 구성됨.

8 특별임무반은 재난대응과 도시혁신 공동체로 구성됨.

9 CEMR은 UCLG 이전에 설립되었다가 후에 UCLG로 편입됨.

10 ORU-FOGAR는 스페인어 La Organización de Regiones Unidas-Forum Global d'Associations de Régions의 약칭임.

11 SUMMIT(Conference of Major Cities of the World)는 도시관리와 평화유지에 있어 도시의 역할을 논의하는 포럼형식의 제도로서, 1985년 일본 도쿄에서 창설됨.

12 새로 추가된 기구는 CITYNET(1987), CEMR(1985), 및 기타 지역 기구들임.

UCLG의 도시발전 및 이를 위한 국제적 도시운동(도시외교)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세계총회에서 논의·결정된 내용이 가장 공식적인 성과로 인정될 수 있다. <표 2 참조>

가장 최근까지의 추세 및 실제활동이 집약된 것은 제5차 총회의 '보고타 행동 의제'이다. 이를 통해 UCLG가 지향하는 도시외교의 목표, 문제영역, 접근방식, 그리고 여러 차원별 행동노선 및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UCLG가 추구하는 도시외교의 목표는 도시의 내적 기반·역량의 구축을 포함하여 2010년에 제시된 12개의 미래 도시상이다. 거의 모든 지구적 이슈에 대응하고 있으나, 특히 갈등 예방·해결을 중시하는 평화구축, SDGs를 중심으로 한 개발목표의 성취(도시문제의 경우 목표 11이 해당, 특히 UN-Habitat III 강조), 파리기후협정 이행 등이 중점 사항이다. 접근방식은 지방정부 자체의 내적 시스템 및 의제 형성, 지방정부들 간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등 다양한 실천적 활동과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표 3 참조>

표1 '헤이그 도시외교의제' 구성체계와 핵심 내용

문제영역	제목	핵심 내용
출발점	상황·배경	• 폭력적 갈등에 의한 시민 안전·복지의 위협
	공동 관심사	• 갈등 예방·제거, 인권 보호, 평화·정의 성취
도시외교	도시외교 개념	• 평화·민주주의·번영, 사회적 단결, 갈등 예방·해결, 갈등후 평화구축의 도구
갈등 인식	갈등 원천	• 상호차이에 의한 공동체 간 비모용·극단주의
	갈등 성격	• 갈등의 다양한 원천과 지속가능개발 가능성
평화(구축)	여성	• 평화구축에의 적극적 여성 관여의 불가피성
	군사와 도시	• WMD의 포기과 도시의 군사목적화 반대
지방정부	인권·다양성	• 평화와 개발 기반으로서의 인권·다양성 존중
	평화구축 역할	• 효율적 분권화와 지방자치의 조건화 요청
	의무	• 평화구축 의제와 국제개발에 대한 기여
고려 사항	접근방식	• 다수준파트너십(중앙정부·국제제도·시민단체)
	지원	• 평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요청 지원
고려 사항	이해관계 주체	• 평화·정의·인간안전을 위한 다수주체의 필요
	지방정부 역할 인식	• 지방정부의 시민 최근접성에 대한 인식 전환
	도시외교의 기여	• 지방정부 리더십을 통한 평화구축에의 기여

자료 UCLA, The City of The Hague & VNG International. 2008. The Hague Agenda on City Diplomacy)의 내용을 재구성·요약함

표2 UCLG의 역대 '세계총회(World Congress)'별 주요 내용 및 결정 사항

UCLG 세계총회	회의 배경·목적(총회 모토)	주요 내용 및 결정 사항
2004. 5 제1차 세계총회 (프랑스 파리)	새로운 제도화를 위한 창립 회의 Cities, Local Governments, the Future for Development	UCLG창설 • IULA(1928)의 기반 계승 및 확대 • UTO 및 METROPOLIS와의 통합 도시·지방정부의 미래 발전 의제 • 지속가능 발전 부문(9개) • 지방 부문 및 민주주의의 부문(5개) • 협력과 외교 부문(5개)
2007. 10 제2차 세계총회 (한국 제주)	도시화의 새로운 관리 양식 Changing Cities are Driving our World	지방정부의 우선적 의제 특성화 • 기후변화, 지구환경 보호 평화·발전의 기반 구축 • 평화·인권·문화 등 도시의 다양성 증진 MDGs와 민주주의 성취 노력 • 글로벌거버넌스에서의 지방정부 위상 강화 GOLD I 채택(2008) 기반 조성¹³ • 지방분권에 관한 최초의 연구보고서
2010. 11 제3차 세계총회 (멕시코 시티)	지구화·도시화에 적합한 미래 도시상(像) 모색 Global Cities, Local Impacts	도시화에 대한 분석적 인식 • 도시화 속도, 지역·국가·도시별 다양성 등 The City of 2030: Our Manifesto 채택 • 참여·포용·안전·평화, 책임공유·파트너십 등 12개 미래 도시상 제시 GOLD II 채택
2013. 10 제4차 세계총회 (모로코 라바트)	국제도시운동(IULA) 100주년 기념 SDGs-UN-Habitat III 관련 지방정부 로드맵 규정 Imagine Society, Build Democracy	주요 4대 요청 사항 제안 • 평화 세계의 정립 • 포용·참여·단결·민주·정의 사회의 구축 • 존엄한 삶의 환경 조성 •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 주요 공약 • 평화와 개발을 UCLG 행동의 중핵화 • SDGs의 지방화를 위한 단일 글로벌 의제화 • UN-Habitat III와 개발의제의 도시외교화 GOLD III 채택
2016. 10 제5차 세계총회 (콜롬비아 보고타)	새로운 도시외교 설정 Local Voices for a Better World	The BogotáAction Agenda 채택 • 지방-국가-글로벌 차원의 UCLG 행동의제 <표 3 참조> A New Urban Agenda 채택 관련 공동선언¹⁴ • UN-Habitat III 회의 관련 GOLD IV 채택

자료 UCLG, "Our Past Congresses." <http://www.uclg.org/en/UCLG-Past-Congresses> 및 각 회의별 공식자료의 종합·요약

¹³ GOLD(Global Observatory on Local Democracy & Decentralization)에서는 지방민주주의를 위한 '분권협력'이 '도시외교'와 함께 평화와 민족들 간 이해를 위한 상보적 수단임이 강조됨. 동 보고서는 이후 3년 주기로 발행할 것을 결정함.

¹⁴ 이 의제는 UCLG 총회 직후 에콰도르 키토(Quito)에서 열린 유엔헤비타트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당시 UCLG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GTF(Global Taskforce of Local & Regional Governments)를 통해 도시외교화를 위한 외교를 수행한 바 있으며, 제7차 유엔 총회에서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 도시 및 인간 정주에 관한 키토선언"이란 명칭의 동 의제를 결의안 형식으로 채택하였음 (2016. 12. 23).

표3 UCLG의 21세기 지방정부 글로벌 의제의 행동노선 및 권고사항

차원	목표·방향	부문	권고 행동
지방 차원	새로운 도시 의제의 현장 실현화	관리 능력	• 지방정부의 전략적 관리능력 개선
		시민사회 관계	• 활력적·자율적 시민사회의 협력과 참여 촉진
		관리능력 기반	• 도시 및 지방주체들의 통합적 기획 구비
		인프라·서비스	• 질적·탄력적 인프라와 기본서비스 접근성
		경제발전	• 일자리·사회응집을 위한 경제적 기회 증진
		빈곤·불평등·인권	• 도시·지역거버넌스에서 도시권 위상 중심성
		기후변화·재난	• 저탄소 탄력성 도시·지역으로의 이행
국가 차원	새로운 다층거버넌스 체제 구축	지방 분권	• 공유거버넌스와 효율적 분권화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갱신
		지방 정책	• 지방주체들과 협의를 통한 국가의 도시·지역 정책의 일관성·통합성 구축
		지방 재정	• 지속가능하고 일관적인 국가하위 재정시스템
국제 차원	지방정부의 글로벌 위상 적정화	지방 거버넌스	• SDGs 및 NUA에의 지방정부의 관여
		글로벌 거버넌스	• 국제개발기관들 관리구조에의 지방정부 참여
		재정 메커니즘	• 지속가능 인프라·서비스 위한 재정수단 창출
국제 차원	지방정부의 글로벌 위상 적정화	분권 협력	• 분권화된 도시 간 협력 지원과 혁신을 위한 학습·지식의 공유

자료 5th UCLG Congress, 2016. The Bogotá Commitment and Action Agenda(Bogotá, Colombia, 15 October 2016) 핵심 내용을 필자가 요약·부문은 필자가 설정; New Urban Agenda(2016), 도시권(Right to the City) 참고

할 일이 많은 도시외교의 전략

UCLG의 창설 정신과 실제 행동계획 및 수행 내용을 토대로 도시외교의 전략적 의견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¹⁵ 정책의 각 요소별 구체적인 설명과 실천적 대안에 대한 권고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범주별로 기본적인 인식 제고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상황지성과 정책 지도원리 범주는 도시외교 주체들의 외교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도시외교의 정책적 접근방식을 고민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따라서 지구화·국가중심화의 흐름 속에서 지방화·도시화의 위상과 대응의 차원에서 전자의 주류세력들이 지방·도시의 정부적 성격과 이의 가능성을 인정하도

15 표4에서 제시된 도시외교의 규범적 프레임은 일부 선진국의 중앙정부형 외교혁신 내용들을 종합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임

표4 도시외교의 전략 범주와 정책 초점 및 고려 요소

전략 범주	정책 초점	정책적 고려 요소
상황지성과 정책 지도원리	지구화 추세 인식	• 글로벌 위협요인, 인간안보, 지방의제의 지구화 등
	국가적 맥락 대응	• 외교혁신의 의지와 컨텐츠, 다중외교트랙 확산
	지방화·도시화 함의	• 지구 보편이익과 서울 특수이익의 조화·결합
보편·특화형 외교 의제	정책의 지도원리	• 국가외교와의 보충성, 파트너십 협력 • 외교의 주체-영역 간 네트워크성과 투자 초점화 • 혁신적 리더십, 현장 맞춤형, 성과창출 지향성
	지구적 보편 의제	•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UN-Habitat III, 평화구축
	도시 보편 의제	• UCLG의 미래 도시상에 적합한 의제의 일상화
중층형 대외 네트워크	대도시 특화 의제	• METROPOLIS의 특화된 의제에의 접근 •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문제 공유모델의 적용
	자매결연 교류·협력	• 기존 교류·협력 시스템의 질적 혁신 추구 • 도시외교에 적합한 새로운 대상 도시 선정
	중앙정부 간 국제기구	•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 대상 (지구적 보편 의제의 수렴 및 적용 학습)
스마트 외교역량 기반	지방정부 국제기구	• UCLG-네트워크 외 국제기구 대상 (기구별 특화 의제에의 참여 확대 및 운용)
	UCLG 아키텍처	• UCLG 네트워크 국제기구에의 선별적 참여 확대
	한국 중앙정부	• 국가외교에의 지방정부 참여 조직화 • '공공외교법'에 근거한 참여 기회 활용
스마트 외교역량 기반	한국 지방자치단체	• 외교분권의 집합적 주창을 위한 선도 역할 • 지방의제의 한국화를 위한 주도
	서울 기초자치단체	• 대도시(광역도시) 외교거버넌스의 실천적 모형
	외교지식 기반	• '서울학'속 '서울국제학'(또는 '서울외교학') 연구
스마트 외교역량 기반	도시외교 계획	• 외교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서울외교 행동계획
	조직·운영 혁신	• '도시외교국 수준으로 확대(공공외교과 포함) • 임무적합형 분업 시스템 도입
	도시외교 인적자원	• 미래 도시외교 창의인재 예비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공외교 관련 '서울국제교류재단' 설립 검토) • 인력 전문화, 근무 여건 안정화, 지방정부 외교관 선발제 도입 등

록 창발적인 정책방향과 기본적인 실천 지침을 철저히 구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 중앙정부들에서 이미 착수된 외교 혁신의 방향과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거나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편·특화형 외교의제는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수행해온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국제교류·협력을 벗어나 지구적 의제 영역에 과감하게 진입하는 과제와 관련된다. 이런 점에서 UCLG가 UN과의 공식적 거버넌스를 통해 진전시켜온 지구적 보편 의제를 기반으로, 이를 도시 차원으로 내재화하는 전략을 펼친다면 중앙정부나 다른 국제기구로부터 정상적인 국제적 행위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UCLG와의 차별화 전략을 이미 논의해온 METROPOLIS의 특화된 의제와 전략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자매 결연도시 간 협력관계를 변화된 외교환경에 맞추어 고품질로 조정하고,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십 도시나 기타 기관들(UCLG 특화형 도시인 바르셀로나, 네덜란드 연구소 VNG 등)을 선정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중층형 대외 네트워크의 문제는 특정 도시의 외교 아키텍처 구성과 관련된다. 이 구도는 UCLG를 중심으로 밖으로는 국제기구들, 안으로는 한국으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엔 국제기구들 간 다양한 네트워크가 실제로 가동되어 온 상황을 고려하여 유엔의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이니셔티브를 주창해야 할 것이며, 기타 지방정부 국제기구의 경우엔 기존에 가입된 기구들과의 관계를 재구성하여 보다 성과공유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서울시가 UCLG 및 METROPOLIS에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 등이 속한다. 이 경우 한국의 대표적 광역 지방정부로서 일차적으로는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성을 통해 내적 성장을,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구조적 파워를, 그리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도시외교의 위상 강화를 위한 구성적 파워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외교역량 기반은 도시외교의 수행 기초를 위한 순수하게 특정 도시의 내적 기반과 역량과 관련된 범주이다. 현대 외교가 유력한 외교 자원(하드 및 소프트 자원)을 동원하여 성과창출형 외교정책을 추구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본질적 기반인 '지식' 기반은 여러 이유로 경시되거나 또는 아예 고려조차 안 된 경향이 있다. '지식 외교'를 향한 최근의 경향을 고려할 때, 해당 도시가 보유한 과거 역사 속의 외교 콘텐츠를 정리하여 현대적으로 해석함은 미래의 창발적인 도시외교에 보다 차원 높은 외교 추동력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기타 조직의 개편과 운영은 물론, 지방정부 외교관 특채와 같은 새로운 충원방식 등을 통해 향후 지방정부 국제기구에 전문적으로 투입하는 다양한 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W**

참고문헌

- Institute of Multi-Track Diplomacy(IMTD), Nine Tracks in the Multi-track System (<http://imtd.org/about/what-is-multi-track-diplomacy>)
- Tassilo Herrschel & Peter Newman. 2017. Cities as International Actors: Urban and Regional Governance Beyond the Nation State. Palgrave Macmillan
- UCLG. 2013. The Constitution of the World Organisation of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http://uclg.org>)
- UCLG. 2016. The Bogotá Commitment and Action Agenda. 5th UCLG Congress, Colombia, 15 October 2016 (<http://uclg.org>)
- UCLA, 2008. The City of The Hague & VNG International. The Hague Agenda on City Diplomacy (<http://uclg.org>)
- UCLG & World Bank. 2008. 1st UCLG World Report on Decentralization and local democracy in the world.
- UCLG, Our Past Congresses (<http://www.uclg.org/en/UCLG-Past-Congresses>)
- 기타 UCLG 발행 1차자료 다수

지금은 세방화(Glocalization) 한·중 시대

01

세계무대에 뛰어든 중국의 도시외교

신종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실장

02

새로운 전략을 요구받고 있는
한·중 도시외교

황태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세계무대에 뛰어난 중국의 도시외교

[글] 신중호 실장 jonghos@kinu.or.kr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중국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어제와 오늘

도시외교는 국가(중앙정부) 주도의 전통적 외교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나 도시(City)라는 행위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외교방식이다. 오늘날 각국의 도시외교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가 동시 진행되는 '세방화(glocalization)' 추세를 반영하여 갈수록 증시되고 있다.

중국의 도시외교는 세계화 추세와 개혁개방의 산물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력분산(devolution of power)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방정부가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확대되었다. 특히 31개의 성(省, Province)급 지방정부는 높은 수준의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 및 효율적인 정책 결정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외정책의 지방화(localization of foreign policy)를 주도해왔다.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교류 활동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도하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외교'라고 할 수 있고, 각급 지방정부나 도시들이 좀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대외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는 '도시외교'라 칭할 수 있다. 2014년 5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중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도시외교(城市外交)의 중요성을 공식 언급했고,¹ 그 후로 도시외교의 주제, 목적, 내용, 형식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도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외교정책과 조화를 꾀하면서 자체의 안전과 발전 및 번영에 기여하는 활동에 나서고 있다. 다만 국가 주권이나 영토 안정과 같은 상위정치(high politics) 영역보

다는 수출입 촉진이나 외자 유치 및 문화교류 등과 같은 하위정치(low politics) 영역에 집중하고, 방문·담판·교섭·조약·국제회의와 국제조직 참여 등과 같은 다양한 형식을 통해 관련 법률과 제도 및 규범을 준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지방정부의 자율성 면에서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첫째는 중국 헌법상 외교(外交, diplomacy) 업무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관리한다는 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² 중앙정부는 "대외사무, 외국과의 조약 및 협정 체결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헌법과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경제·교육·과학·문화, 도시건설·공안·사법 등의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각급 지방정부는 외사(外事 foreign affairs)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외사판공실을 두고 있고, 그 임무 역시 "중앙정부의 대외정책 방침에 부합하고, 해당 지방정부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발전 수요에도 부합하도록 업무를 추진하며, 외국 지도자와 대표단에 대한 접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의 대외교류 활동과 같은 외사(外事, foreign affairs) 업무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국무원 등)의 업무 지시 혹은 지도(領導)를 받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모든 국가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공산당이 주관하는 '당-국가(party-state)' 체제로, 지방의 각급 공산당 조직은 당 중앙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 또한 2001년 중국 국무원은 '전국 외사관리업무에 관한 약간의 결정'³을 발표하면서 "통일적 지도(統一領導), 체계적 관리(歸口管理), 등급별 책임(分級負責), 협조 안배(協調配合)" 등의 원칙을 강조한바, 각급 지방정부의 외사 부문은 상급정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이러한 체계적 특성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중국 지도부가 도시외교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고, 각급 지방정부 역시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도시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외교 전략의 유형과 사례 및 전망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¹ 习近平. 在中国国际友好大会暨中国人民对外友好协会成立60周年纪念活动上的讲话. 人民日报, 2014. 05. 16; 최근 중국의 도시외교 전략에 대한 논의는 李小林 编, 2016. 城市外交(理论与实践).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참조.

² 중국정부망(http://www.gov.cn/gongbao/content/2004/content_62714.htm).

³ 중국 국무원. 关于全国外事管理工作的若干规定, 2000.

중국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네 가지 유형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방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지방정부 외교' 혹은 '도시외교'를 추진해왔다. 첫째, 우호자매도시 관계 형성은 중국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전통적인 방식이다. 1973년 텐진(天津)시와 일본 고베(神戸)시가 맨 처음 우호도시를 맺은 이후,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대외 우호도시 체결에

표1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 우호도시 체결 현황(1973-2017.5)

연도	우호도시 체결 수	누적 합계	연도	우호도시 체결 수	누적 합계
1973	2	2	1996	43	710
1974	3	5	1997	72	782
1975	0	5	1998	64	846
1976	0	5	1999	62	908
1977	0	5	2000	75	983
1978	1	6	2001	48	1031
1979	14	20	2002	63	1094
1980	17	37	2003	50	1144
1981	22	59	2004	52	1196
1982	30	89	2005	86	1282
1983	26	115	2006	90	1372
1984	29	144	2007	99	1471
1985	54	198	2008	93	1564
1986	38	236	2009	89	1653
1987	47	283	2010	82	1735
1988	38	321	2011	109	1844
1989	17	338	2012	117	1961
1990	20	358	2013	110	2071
1991	25	383	2014	108	2179
1992	59	442	2015	128	2307
1993	67	509	2016	122	2429
1994	90	599	2017	3	2432
1995	68	667			

자료 중국국제우호도시연합회(<http://www.cifca.org.cn/Web/YouChengTongJi.aspx>).

적극 노력해왔다. 2017년 5월 말 현재 중국의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476개 도시는 전 세계 135개 국가의 508개 광역지방정부 및 1,593개 도시와 2,432쌍의 우호도시 관계를 체결한 상태다. 이 가운데 장쑤성(江蘇省) 304개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산둥성(山東省) 185개, 광둥성(廣東省) 178개, 저장성(浙江省) 101개, 광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101개, 허난성(河南省) 97개, 후베이성(湖北省) 89개 순이다.⁴ 도시 경쟁력이 뛰어난 동부 연해지역 지방정부는 여전히 활발한 도시외교를 전개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서부 내륙의 지방정부와 도시들도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외교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둘째,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는 경제통상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대외정책과 조화하는 도시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발전과 번영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발전전략이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된 이후,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비하고자 수출입 촉진과 외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 분야 역시 중국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예컨대 국제행사나 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거나, 문화·교육·체육 대표단의 해외 우호교류 및 다양한 분야의 인재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도시외교는 해당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비중이 높다.

넷째,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들의 초국경 협력 역시 도시외교의 중요한 특징이다. 예컨대 내몽골자치구 외사판공실은 러시아와 몽골 간 변경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러시아-몽골처(俄蒙處)'를 설립했고, 윈난성(雲南省) 정부는 외교부의 협조 아래 접경국가(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와의 변경선에 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중국정부가 '육상·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 전략 구상을 제시한 이후 각 지방정부는 연선(沿線)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국제회의의 참여와 국제기구 가입, 인도주의적 대외원조, 초국경 환경협력 등도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유형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분류되는 중국의 도시외교 유형 가운데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가장 많이 보장되는 방식은 우호자매도시 체결이다. 경제통상 분야의 도시외교 역시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반영되지만 국가 발전전략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조가 필수적이다. 사회문화 교류는 국가관계를 강화하거나 경색된 국가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한편 초국경 협력 유형의

⁴ 중국국제우호도시연합회 (<http://www.cifca.org.cn/Web/YouChengTongJi.aspx>).

도시외교는 대부분 국가 주권이나 영토 안정과 같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 해당하는 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연계가 매우 중시된다.

중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리인 또는 협력 파트너로 머무나

중국 지방정부는 도시외교를 통해 중앙정부의 대리인(agent) 혹은 협력 파트너(cooperative partner) 역할을 수행하면서 특정 분야에서는 해당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는 자율성의 폭에 따라 네 가지 특성을 나타내는데,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첫째, 중국 지방정부는 도시외교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정부의 외사 업무 자체가 국가 주권과 총체적인 국가 대외전략의 틀 안에서 작동되고 있고, 국제교류 활동은 중앙정부의 수권(授權) 혹은 정책적 지도 아래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국가 대외정책의 기본방침에서 벗어난 도시외교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완전한 독립성을 지닌 행위자가 아닌 '제한적인 자율성'을 지닌 채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개혁개방 이전의 외사 업무에서 가장 잘 두드러지며, 개혁 이후에는 주로 상위정치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1995년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대만 당국의 '금전외교(銀彈外交)'가 진행되었을 때 중국과 파푸아뉴기니의 관계는 경색되었다. 그러나 파푸아뉴기니 독립 25주년을 맞아 산둥성 지난(濟南)시는 외교부의 지휘 아래 자매도시인 포트모르즈비(Port Moresby)에 우호대표단을 파견하여 4회에 걸친 공연을 하였다. 이후 중국과 파푸아뉴기니 관계는 급속히 호전되었다. 2001년 상하이(上海) APEC 회의나 2010년 난징(南京)에서 개최된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 당시에 지방정부의 대표단은 중앙정부의 위탁을 받아 미수교 국가를 방문하여 국교 수립을 추진하였고, 외교관계가 경색된 국가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등 '비공식 외교'를 펼쳤다.

둘째, 중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협력 파트너'로서 도시외교 혹은 대외교류 활동에 종사한다. 즉,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과 정책 틀 안에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국가 대외정책 목표 추진에 기여하면서 해당 지방정부의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대외교류 방식으로써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협력 파트너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는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지도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동북지방과 서북지역 지방정부는 중앙아시아나 러시아와 변경무역이나 에너지외교 등에 관심을 두고 있고, 산둥성과 동북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지방정부는 한국의 각 지방정부와 공업단지 개발 및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서남 지역(광시, 윈난, 궈저우 등)은 아세안과 지역협력 및 메콩강 유역 경제협력 등과 같은 소지역 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 지도부가 주변외교(周邊外交)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 개최된 '주변외교공작좌담회'는 중앙정부 대외정책의 협력 파트너로 기능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이 주변국들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을 계기로 해양 권익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필요 및 명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점도 그러한 역할을 입증한다.

예를 들어 중국 국가해양국 류즈구이(劉賜貴) 국장은 2012년 10월 광둥성 선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선전(深圳)시와 같은 연해지역 지방정부가 해양 종합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국은 2012년 7월 필리핀·베트남과 영유권 다툼이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 군도) 등 남중국해 분쟁 도서를 담당하기 위해 하이난(海南)성 산하에 산사(三沙)시를 설립하여 일방적인 행정권 행사를 개시했고, 11월에는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가 산사시 주변에서 외국 선박의 영해 진입과 어로행위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는 도시외교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적 이익 수호자' 역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개혁시기 중국 지방정부는 경제 분야에서의 높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이익 향상에 집중해왔으며, 특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서방 선진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토대로 한 외자 도입 및 다국적기업 유치에 힘써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저장성 이우(義烏)시가 보여주었다. 현금 단위의 이우시는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 주어지는 정책적 혜택도 없었고 샤먼(廈門)이나 선전처럼 천혜의 지리적 조건도 아니었으나, 중앙정부의 경제외교 전략 방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외 경제교류와 인적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향형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개혁개방이 가속화하면서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대외무역과 국제

⁵ 신중호, 2014,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현대중국연구』, 제16집 1호, pp.1-25 내용을 수정 보완함.

경제활동을 고취하기 위해 성 소속의 대외무역회사의 활동을 촉진했다. 이에 따라 각 성은 대외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외환수입을 일부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수입을 해당 지방의 수출입 화물과 설비투자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항목을 비준했다. 이처럼 개혁개방 시기에 추진된 대외무역과 직접투자 유치는 성급 정부의 대외교류에 직접적인 동력이 되었다. 일례로, 산둥성 정부는 한국과 양자 간 무역 확대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진정함으로써 한·중 수교 정상화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다.

넷째, 중국의 도시외교는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정치적 성장기반'이었다. 중국은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하지만 중국정치에서 지도자들의 지방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5년마다 열리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지방정부 출신 지도자들이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자체적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부분과 중앙정부와의 협조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다양한 도시외교 경험은 향후 중앙정부에 진출하여 대외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다.

변화하는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는 중앙정부의 대외정책 총 방침과 기본원칙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외정책의 대리인 혹은 협력 파트너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보유한 권한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이익 추구에 집중했다. 지방정부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대외정책 결정을 위한 사전 정보수집 및 자문 과정에서 크고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해외진출 기업 가운데 20%가 지방정부 소속이라는 점은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입증한다.

국내정치의 차원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중앙정부가 발표한 정책과 지방정부의 경제이익 수요 사이에 잠재적 충돌이 존재할 때,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은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시나 정책 방침에 복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가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거나 국가 대외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형태의 대외행위는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의 헌법상 '외교' 업무는 중앙정부의 고유 영역이며, 외사 업무 역시 기본적으로 중앙의 지방에 대한 영도(領導)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외사 분야에서의 자율권과 영향력은 좀 더 다양한 형태로 강화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빠른 정책결정 시스템을 보유한 지방정부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독립적인 이익주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대외정책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기 힘든 민감한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권이나 영토문제 등과 같은 상위정치 영역에서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대리인 혹은 협력 파트너로 활용하고, 하위정치 영역인 경제·사회·문화 등의 영역에서는 지방정부에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자율권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 및 각급 지방정부의 발전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전략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은 시진핑-리커창 지도부 출범 이후 기존의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발전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지방정부 역시 이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도시외교의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나 베이징과 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대도시뿐만 아니라 제 2,3선 도시들도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도시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급 지방정부들의 도시외교 전략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의 비교우위를 발굴함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맞춤형'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력이 우위에 있는 중국 동부 연해지역 지방정부와 신흥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서부 내륙의 지방정부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경제사회의 중심지인 서울시가 갖고 있는 도시외교 '자원(resources)'을 발굴하여 맞춤형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도시 간 교류협력의 다양화를 통해 실질적인 도시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 역사·문화·관광·환경 등 분야

에 대한 다양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 중서부 내륙 지방정부가 최근 들어 도시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지방정부 및 도시들과의 이슈별·테마별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도시외교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를 총괄하는 외사관공실 담당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경제·문화·교육계 인사들과의 교류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에서 최고지도자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경험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지방정부 지도자 간 다양한 형태의 '전략 대화'를 통해 접촉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W**

새로운 전략을 요구받고 있는 한·중 도시외교

[글] 황태연 연구원 taeyeonmail@gmail.com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지금은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

가끔 TV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은 ○○○시대'라며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지금은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는 TV 속에서 등장하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동의하는 세계화 속에서 살고 있으며 중앙집권화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성장과 함께 지방분권화 속에서 살고 있다.¹ 바로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의 두 가지 특징이 함께 나타나는 '세방화'라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국제교류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외교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다국적기업, 비정부기구(NGO)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간 국제교류, 즉 도시외교의 중요한 행위자가 되고 그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국가의 도시들과 국제교류를 맺어왔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과는 더 많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중국인들을 목격할 수 있다. 이제 중국 관광객이나 우리나라로 일자리를 찾아온 조선족 교포들,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디서나 마주치게 되는 한·중 교류 증가의 실체이다. 얼마나 인적 교류가

¹ 세방화(Glocalization)와 관련된 어원, 개념 등 자세한 내용은 안상욱, 2009, 세계화와 세방화 구현-수렴성과 다양성의 선택, 인문연구, 제 57호, pp.291-316 참고.

참고문헌

- 신중호, 2014,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현대중국연구, 제16집 1호, pp.1-25.
- 중국국무원, 关于全国外事管理工作的若干规定, 2000.
- 중국정부망, 中華人民共和國憲法(http://www.gov.cn/gongbao/content/2004/content_62714.htm).
- 중국국제우호도시연합회 홈페이지(http://www.cifca.org.cn/Web/YouChengTongJi.aspx).
- 高尚涛 等, 2010, 国际关系中的城市行为体,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pp.201-208.
- 李小林 编, 2016, 城市外交(理论与实践),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习近平, 让命运共同体意识在周边国家落地生根, 新华网, 2013.10.25.
- 习近平, 在中国国际友好大会暨中国人民对外友好协会成立60周年纪念活动上的讲话, 人民日报, 2014.05.16.
- 祁怀高, 2010, 中国地方政府对中韩建交的影响: 以山东省的作用为例, 当代韩国, pp.65-78.
- Chung Jae Ho 1993, The Political Economy of South Korea-China Bilateralism: Origins, Progress and Prospects, Ilpyong Kim and Hong Pyo Lee(eds.), Korea and China in A New World: Beyond Normalization, Seoul: The Sejong Institute, pp.257-309.
- Hsing You-tien, 1998, Making Capitalism in China: The Taiwan Conne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5-7.
- Linda Jakobson and Knox Dean, 1998, New Foreign Policy Actors in China, SIPRI Policy Paper, No. 26.

많으면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중국어로 관광객을 의미하는 ‘유커(遊客)’가 ‘중국인 관광객’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을까.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국 도시와 활발한 교류 활동을 전개해왔다. 자매·우호결연² 체결을 통해 행정·경제·문화예술·관광·체육·위생·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력사업을 펼쳤으며,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수교를 맺은 1992년 11월, 전라남도 목포시와 중국 장쑤성(江蘇省) 렘윈강시(連雲港市)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도시 간 교류는 점점 증가하여 매년 20건 이상의 교류협력이 추진되어 왔다.³ 그간 다른 국가와 체결한 수치를 비교해볼 때 한·중 도시외교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바야흐로 ‘지금의 세방화 한·중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중 수교 25년의 역사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한 한·중 국제교류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과 한국의 도시 간 교류, 어떤 길을 걸어왔나

중국과의 자매·우호결연이 가장 많은 이유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외국도시와 자매교류를 맺은 도시는 경상남도 진주시로, 1961년 미국 오리건(Oregon)주의 유진(Eugene)시와 체결했다.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전 세계 79개국 1,189개의 도시와 총 1,593건의 자매·우호결연을 체결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중국, 일본, 미국으로, 이들 상위 3개국과의 교류 건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1 참조> 그 중에서 중국 도시들과의 체결 건수는 총 640건으로, 전체의 4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 통계만 봐도 국내 도시들이 가장 빈번하게 교류하는 국가가 중국임을 알 수 있다. 한편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4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베트남이 7.3%, 미국은 6.8%, 그리고 태국인과 필리핀 등의 순서였다.⁴ 이렇듯 교류협력을 많이 맺은 국가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비중이 일치하는 통계를 통해 우리는 교류협력과 인적 교류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과 중국 도시 간의 국제교류는 한·중 수교를 맺은

표1 자매·우호결연 체결 국가 현황

순위	국가	결연 건수	순위	국가	결연 건수	순위	국가	결연 건수
1	중국	640	4	베트남	57	7	몽골	39
2	일본	215	5	러시아	53	8	호주	28
3	미국	176	6	필리핀	41	기타	터키 외 70개국	344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http://www.gaok.or.kr) 내용 재구성(2017.04)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중국의 도시들과는 보통 해마다 20건 이상의 교류 체결을 맺어왔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과 중국 도시가 맺은 자매·우호결연은 얼마나 될까? 먼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총 17개의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 이하 총 228개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총 21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중국의 도시들과 한 개 이상의 자매·우호결연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별로 자매·우호결연 체결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현재 총 82건의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경기도가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총 71건으로 2위를 차지하였고, 전라남도가 57건, 강원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51건으로 중국 각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체결 건수는 광역자치단체 본청을 포함하여 각 광역자치단체 내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맺은 체결 건수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서해안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체로 더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그림1 참조>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가장 국제화된 서울의 국제교류 상황을 살펴보자. 서울은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자매·우호결연을 맺고 있다. 서울을 권역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운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체결 건수에서는 서남권 7개의 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동북권 8개의 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한편 권역별로 구의 개수로 그 권역의 체결수를 나누어 계산해서 평균값을 구하면 동남권이 구별 평균 4건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실제적으로 동남권의 구들이 가장 많은 교류체결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통계들을 종합해볼 때 서울 내에서도 지리적 위치와 지역별 격차에 따라 교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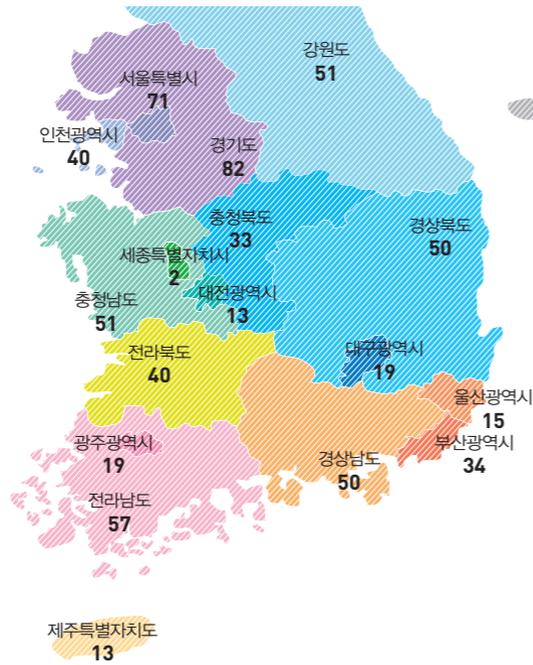
² 국제교류의 유형으로 자매결연(sisterhood relationship)과 우호협력(friendship) 또는 우호결연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매결연은 두 도시 간 상호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공동발전을 위해 교류협력을 약속하는 것이며,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의 전 단계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교류의 의미를 논하고 있어 두 가지를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고 자매·우호결연이라고 하였다.

³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http://www.gaok.or.kr)

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7년 4월호 (https://www.immigration.go.kr)

그림1 지방자치단체별 대(對)중국 자매·우호결연 체결 현황

(단위: 건)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http://www.gaok.or.kr>) 내용 재구성(2017.04)

그림2 서울특별시 권역별 대(對)중국 자매·우호결연 체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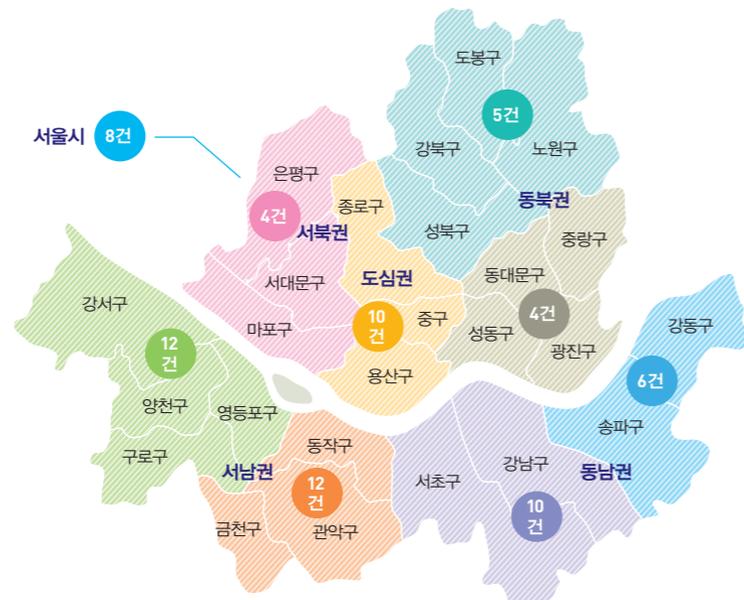


그림3 대(對)중국 지방정부별 자매·우호결연 체결 현황

(단위: 건)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http://www.gaok.or.kr>) 내용 정리(2017.04)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중국의 어떤 도시들과 자매·우호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을까? 먼저 중국의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대만, 홍콩,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를 제외할 때 22개의 성(省)과 4개의 직할시(直轄市)로 구성되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구분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은 직할시에 속한다.) 그리고 소수민족 자치구가 5개가 있다. 이들 행정구역을 모두 합하면 총 31개가 된다. 따라서 중국의 성, 직할시, 자치구가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중국의 지역별 자매·우호결연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118건을 체결한 산둥성(山東省)이 가장 많고, 76건을 체결한 랴오닝성(遼寧省)이 그 뒤를 잇는다. 이후로는 장쑤성(江蘇省), 지린성(吉林省) 순이다. <그림 3 참조>

이 통계에서 체결 건수가 많은 중국 도시들은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마주한 위치에 있다. 중국 동부 연안의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거나 우리나라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의 서북쪽에 있는 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나 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등은 대체로 한국과 거리

가 매우 멀고 비교적 낙후한 지역들이다.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국의 도시들과 추진해온 교류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살펴볼 차례다.

교류 프로그램은 대체로 행정 교류, 인적 교류, 문화예술 교류, 청소년 교류, 관광 교류, 스포츠 교류, 기술·학술 교류, 경제 교류, 민간단체 교류, 상징사업 등으로 나눈다.⁵ 이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각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한 교류행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행정 교류에서는 서울시와 베이징시가 자매도시 20주년 기념식을 통해 상호 방문하는 식의, 자치단체대표단의 상호 친선방문이 주를 이룬다. 예컨대 베이징시의 동청구(東城區)에서 개최한 ‘왕푸징(王府井)축제’에 여러 지역 대표단이 초청되었던 바, 행사에 초청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인적 교류로, 사람이 오고가지 않으면 교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인적 교류는 다방면에서 추진되는데, 공무원 연수나 파견 근무가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다. 청소년 교류나 예술단 및 체육대표단 등도 인적 교류에 포함된다. 한편 문화예술 교류는 대체로 교류도시의 예술단 축하공연이나 전시회, 교류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컨대 성동구의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베이징시의 화이러우구(北京市懷柔區)를 방문하여 공연을 했고, 화이러우구의 어린이 합창단도 성동구를 방문하여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언젠가부터 한국 관광하면 ‘유커(遊客)’를 떠올릴 정도로 중국 관광객이 많다. 최근 사드(THAAD) 문제로 찬바람이 불고 있긴 하지만, 교류 차원에서 추진되는 중국인들의 방문은 계속되고 있다. 도시 간 관광 교류는 대체로 교류도시의 축제 행사에 참여하거나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으로 추진되곤 한다. 또한 양천구가 베이징시의 차오양구(北京市朝陽區)와 의료관광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의료관광도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해 교류 성과가 높은 편이다. 특히 한·중 청소년들의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가정문화를 체험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넓히는 계기로 활용된다.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등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교류는 문화예술 교류나 스포츠 교류 행사와 함께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스포츠 교류는 각 종목별 상호 친선대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강서구나 성동구처럼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축구, 탁구, 마라톤 등 다양한 종목에서 정기적으로

친선경기를 벌이고 있다.

경제 교류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반영하듯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분야로, 투자무역박람회나 예술품산업박람회가 있을 때 지역 기업체 대표단이 상호 참가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곤 한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단 교류,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한 경제교류 협력사업이 추진되기도 한다.

끝으로 민간단체 교류는 주로 문화예술 분야의 단체나 체육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의 교류활동으로 전개되며, 상징사업의 경우 자매·우호도시 전시관 개장이나 자매·우호도시 거리 명명식과 공원 조성 등이 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도시들은 다차원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비록 각각 분야를 나누어 교류 내용을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곤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도시 대표단의 축하방문은 행정 교류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소년 공연단과 스포츠대표팀이 함께 방문하여 축하공연과 친선 경기를 하고 관광을 즐기는 등 인적·행정·청소년·문화예술·민간단체·관광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對)중국 국제교류 협력의 발전 전략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도시 간의 교류사를 되짚어볼 때, 그간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일구어왔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사드(THAAD) 문제나 미세먼지 등의 갈등이 불거질 때면 도시 관계도 경색되고 만다. 그동안 빈번한 왕래가 있었고 수많은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가 발생하면 양국 국민들의 감정은 단번에 서늘해지고 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모든 행위자들은 이러한 국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요구받고 있다. ‘세방화’의 국제환경 속에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직시할 때 중국과의 국제교류 협력, 즉 도시외교는 과거와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큰 것이 아닌 작은 것, 중앙이 아닌 지방, 집단이 아닌 개인, 하드파워(hard power)가 아닌 소프트파워(soft power)라는 개념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국토면적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대한 나라로, 중국과 한국의 시민들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간 도시외교를 돌아볼

⁵ 교류분야 분류 및 내용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http://www.gaok.or.kr)의 자료 및 백우열 외, 2017, 한중 공공 외교백서(2010-2016), 외교부 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pp.403-628 내용을 참고.

필요가 있다. 혹시 가장 값싼 비용을 들여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치장만 화려한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닐까. 사실 앞에서 살펴본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위치상 가까운 도시들과 교류해온 경향은 편의성에 의존해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향후 교류는 좀 더 실용적이고 장기적이며, 참여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어 내실 있는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 내 다양한 도시들로 교류영역을 확대한다면 한국과 중국의 시민들은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상호 호혜적이고 동반자적인 협력을 구축하여 지속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외교라 할 수 있다. 좀 더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겉으로는 좀 덜 화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비용이 더 들기도 하고, 진행이 더디기도 하고, 덜 화려한 행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장기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서울시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의 생활권계획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지역의 자연적, 물리적 생활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연령·계층·문화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생활권의 발전방향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는 계획’⁶이라는 개념적 정의는 중국 도시외교를 추진하는 데 딱 알맞은 표현일 것 같다. 중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는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교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펼쳐온 도시외교에 비추어볼 때 중국은 가깝고 친근한 관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멀고 불편한 관계였을 수 있다. 이는 폭넓은 교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쌓기보다는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교류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는 권역별로 중국 도시와의 교류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류 내용도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단순한 베끼기이거나 성과 위주의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많았다. ‘2030 서울플랜’의 계획처럼 자치구들의 특징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국 도시와의 교류에 대한 발전방향과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 도시외교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자치구의 특징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전 방향과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자치구들과의 유기적 협력 플랫폼을 강화하고 제도화하여 도시

외교 활동의 최적화와 다변화⁷를 꾀해야 한다. 교류도시를 다양하게 넓히고 교류 프로그램에서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다른 지방 도시의 국제교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나라도 서울이 한·중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교류 협력에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울, 도쿄, 베이징 한·중·일 수도를 잇는 도시 간 협의체계 ‘새로운 베세토(new BSESTO)’ 트라이앵글을 구축하는 도시외교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W**

참고문헌

- 백우열 외, 2017, 한중 공공 외교백서(2010-2016), 외교부 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담당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서울시 對중국도시 교류 전략에 관한 연구.
- 안상욱, 2009, 세계화와 세방화 구현-수렴성과 다양성의 선택, 인문연구, 제57호, pp.291-316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http://www.gaok.or.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7년 4월호 (https://www.immigration.go.kr)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본보고서 (http://urban.seoul.go.kr/4DUPIS/sub3/sub3_1.jsp)

6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본보고서, p.160 (http://urban.seoul.go.kr/4DUPIS/sub3/sub3_1.jsp)

7
서울특별시 국제교류담당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서울시 對중국도시 교류 전략에 관한 연구.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 1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지역의 스마트시티 선도국을 꿈꾼다
- 2 필리핀**
필리핀의 고품폐기물 자원화 기술
- 3 방글라데시**
태동하는 방글라데시 하수처리시장 조망
- 4 중국**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환경 감독 본격 가동
- 5 러시아**
러시아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동향
- 6 러시아**
일본, 블라디보스토크시 개발 마스터플랜 콘셉트 발표
- 7 러시아**
매립지 포화로 쓰레기 소각과 재활용 확대하는 러시아
- 8 인도**
인도 첸나이, 최초 지하철 구간 개통
- 9 인도**
남인도 144년 만의 가뭄과 인도 물산업 동향
- 10 칠레**
칠레 수도권 시내버스 대규모 입찰
- 11 페루**
페루의 최초 산업 신도시 'Macropolis'
- 12 페루**
페루 Oxl(세금공제 공공사업제도) 활용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
- 13 페루**
페루 PPP(민관협력 파트너십) 활용 투자 활성화 방안
- 14 루마니아**
루마니아 프로젝트 발주처에서 듣는 지하철 차량 시장정보
- 15 터키**
터키, 차나칼레 대교 건설계약 대림-SK건설 컨소시엄과 체결
- 16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건설기자재 시장을 주목하라

말레이시아, 동남아지역의 스마트시티 선도국을 꿈꾼다

말레이시아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하고는 가장 도시화된 동남아 국가로, 현재 인구의 74.5%가 도시에 살고 있고 2050년에는 90%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구는 시간당 21명꼴로 1년에 18만 4,000명이 증가 중이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는 도시인구 집중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공해, 그리고 각종 도시서비스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스마트시티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스마트시티는 에너지·수자원·대기·폐기물 등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인 관리와 교통 서비스, 범죄예방 서비스의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교통 서비스 개선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브로드밴드망과 센서 네트워크 및 응용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연계와 통합도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통신멀티미디어부에서는 이를 위해 '스마트 도시생활'이라는 개념까지 도입하고 있으며, 디지털통합이니셔티브(Digital Inclusion Initiative)를 통해 ICT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하위 40% 계층에 대한 ICT 교육과 사업연계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말레이시아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지역별 스마트시티 사례로는 사이버자야(Cyberjaya)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조호르(Johor)주의 이스칸다르 특구(Iskandar Malaysia)와 말라카(Malacca)도 스마트시티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주인 슬랑오르(Selangor)주와 페낭(Penang)주에서도 스마트 시티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1) 사이버자야(Cyberjaya)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PutraJaya) 바로 옆에 위치한 사이버자야는 현대적 도시계획으로 개발된 7,000ac 규모의 신도시로, 사이버시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전인 1997년부터 건설된 IT 도시다. MSC(Multi-media Super Corridor)라 불리는 정보통신 산업단지형 콤플렉스로 개발돼 사이버뷰(Cyberview)라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슬랑오르주(Selangor)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둘러싸고 있는 슬랑오르주 역시 'SMART Selangor'를 표방하여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를 넘어선 'SMART State'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예산 가운데 스마트 디지털환경 구축에 2200만 링깃, 빅데이터 지휘통제센터 및 스마트앱 개발플랫폼 사업에 1200만 링깃을 투자하고, 사물인터넷(IoT)과 주내 WiFi망(Selangorku)에 800만 링깃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3) 조호르주(Johor)

싱가포르에 인접한 조호르주의 주도인 조호르바루 내 신규 개발지역인 이스칸다르 푸테리에 세계적인 스마트시티인 암스테르담을 벤치마킹한 스마트시티로 '메디니 이스칸타르'를 조성 중이다. 편리한 운송수단, 공공안전,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통근시간을 단축시켜 가족과의 생활에 기여하고, 레저공간을 확충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30acre의 복합개발공간에 채무·여가·주거·건강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총 개발가치(GDV) 200억 달러 이상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4) 말라카주(Malacca)

말라카주는 지난 2016년 9월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 주정부 자회사인 말라카 ICT홀딩스와 말레이시아 국립ICT연구개발센터 MIMOS 간 MOU를 체결

하고, 본격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집행을 추진 중이다. MIMOS에 따르면, 말라카 스마트시티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산업 주체들에게 '개방형 혁신 프레임워크'를 플랫폼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5) 페낭주(Penang)

지난 2016년 8월 말레이시아의 국영 통신기업인 Telekom Malaysia Berhad(TM)은 Aspen Group과 페낭주 바투카완(Batu Kawan) 지역에 'Aspen Vision City'라는 스마트시티 건설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영 통신기업 TM의 스마트서비스 부문 ICT 역량을 부동산 개발에 접목하는 시범사례인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적극 전개될 예정이다.

제2페낭대교에 인접한 245acre의 바투카완 지역 중심지에 추진되는 Aspen Vision City는 IKEA와 대형쇼핑몰 그리고 4성급 호텔 등이 입주하여 북부지역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시장은 초기 진입단계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성공사례는 아직 거두지 못한 상태다. 또한 스마트시티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막대한 재정 대비 전략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좀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성공모델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 쿠알라룸푸르 남부 지역의 '테크놀로지파크 말레이시아(Technology Park Malaysia, TPM)'에 스마트시티 시범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가와이파이(GiGa Wi-Fi), 태양광발전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 IoT 스마트홈 등 스마트시티 관련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먼저 채택해 기존 프로젝트들보다 적은 범위에서 시범 실시하

여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어낸 후 시장을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기존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기업 또는 기관들과의 접촉과 마케팅을 통해 관심도를 체크해보고, 관심이 있을 경우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의 시범 실시를 추진해보는 것도 중소기업들의 현지 시장진출 전략이 될 수 있다.

자료원 : 말레이시아 11차 경제개발계획, 언론사 기사,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의견 종합
작성자 : 복덕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

2017-04-11

필리핀의 고품폐기물 자원화 기술

현재 필리핀 정부는 고품폐기물 관리를 위해 대통령실 직속으로 국가고형물관리위원회(National Solid Waste Management Commission, NSWC)를 두고 있으며 환경천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주로 불법 쓰레기장이나 쓰레기 매립지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재활용 가능한 유기폐기물의 경우 재활용 및 퇴비화를 실행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관리법(Clean Air Act)에 의해 소각장 시설의 이용은 금지되어 있다.

필리핀은 최근 5년간 쓰레기 발생량이 30%가량 증가하여, 일일 쓰레기 발생량이 평균 3만 5,000톤, 연간 1,280만 톤이다. 2017년에는 일일 발생량이 4만 5,000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고품폐기물의 일일 평균 수집량은 12톤(40m³)/일 수준이며 연간 1만 3,400m³에 불과하다. 폐기물 처리 인프라 부족과 낮은 시민의식으로 마닐라 도심 지역에서 발생한 고품폐기물 총량의 50% 정도만이 시정부에 의해 수집되고 있고, 하루 약 1,500톤의 쓰레기가 해안이나 하천에 무

단 투기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이처럼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고품폐기물을 관리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0년에 생태적고형폐기물관리법(Ecological Solid Waste Management Act, R.A. 9003)을 발효하였다. 또한 고품폐기물관리이사회(Solid Waste Management Board, SWMB)를 창설하여 고품폐기물관리계획 준비 및 관리 감찰, 계획의 유효성 향상과 환경시스템 보존 관련 제안, 고품폐기물 관련 프랜차이즈 및 BOT(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양도)사업 제안 등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 밖에도 폐기물 관리를 위해 바랑가이(Barangay)와 시 단위의 자원회생시설(Material Recovery Facilities, MRF) 설립, 지방 단위의 쓰레기 매립지를 건설, 생분해성 폐기물 분리수거 및 퇴비화, 비분해성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방안, 가정 단위의 분리수거 장려 캠페인, 공익광고 및 교육 활동 지원, 덤프트럭·트라이시클(Tricycle)·페디캡(Pedicap)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분리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법 등을 고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필리핀의 폐기물 관리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2004년에 109개 도시 중 103개 도시에서 고품폐기물관리이사회가 발족되었는데, 이 중 49개 도시에서만 유효한 SWMB 이사회를 운영 중이다. 또한 10개년 고품폐기물관리계획(SWMP)을 수립한 91개 도시 중 67개 도시만이 생태적고형폐기물관리법(R.A. 9003)의 최소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있다. 대부분 지방정부기관은 기술력과 전문 엔지니어링의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고품폐기물관리이사회 및 계획을 운영해나갈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익광고나 캠페인, 공공교육 등의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미흡하며 환경과

공익을 생각하는 정치적 의지도 부족하다. 쓰레기 매립지 건설도 재정 부족으로 전체 도시 중 2%만 달성한 상태이다.

반면 일부 민간기업들은 해외에서 도입한 몇 가지 재활용 및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자원화하는데 성공하여 민간부문 혹은 민관협력(PPP)으로 추진하는 수많은 이니셔티브들이 반향을 올리고 있다. San Miguel Corporation는 생태적고형폐기물관리법(R.A. 9003)에 따라 PET병 재활용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발포 폴리스티렌 생산업체에서 상당 규모의 재활용을 실시하고 있다. 팜팡가산페르난도(Pampanga San Fernando)시는 시멘트 공장의 석탄을 대신할 폐기물 고품연료 생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최초의 민관협력(PPP)을 체결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필리핀의 폐기물 시장 환경과 국민인식을 고려한 전략적 시장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분리수거 시스템 정착 움직임과 플라스틱이 많은 지역의 폐기물 성상을 고려하여, 재활용 선별시설의 설치 운영, 처리기술 전수와 폐기물 매립장 건설 시장에 초점을 맞춘 진출이 필요하다. 또한 폐기물 처리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작업자들은 유해물질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유해물질이 포함된 보관 및 처리기술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 있는 현지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BOT사업 참여 타진,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및 KOICA 지원금 등 ODA 확대를 통한 진출 기회도 모색 가능하다.

자료원 : 바이완(Bayawan)시 Research of Solid Waste Management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국가고형폐기물관리위원회(NSWM),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현성룡(필리핀 마닐라무역관)

2017-03-20

태동하는 방글라데시 하수처리 시장 조망

지난 몇 년 동안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프랑스가발청(AFD) 등 국제원조기구 재원으로 많은 상수도 프로젝트가 방글라데시에서 진행되었다.

관련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최근부터는 하수처리 관련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30년까지 유엔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부합하면서 방글라데시 오염의(특히 수질오염) 최대 원인이 되는 하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도시별 하수처리 현황을 보면, 다카(Dhaka) 시에는 1978년 나라야간지(Narayangonj) 지역 파글라(Pagla)에 설치된 하수처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다카시에서 유일한 하수처리시설인 탓에 처리 용량이 극히 제한적이다. 민간에서 제공한 정화조가 나머지 하수를 처리하고 있지만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하수가 무분별하게 강이나 호수 등으로 버려지고 있다. 그 외 치타공(Chittagong), 쿨나(Khulna) 등 다

른 지역에는 하수처리 시설이 전무하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3년 세계은행 재원으로 다카 지역 하수처리 시설 관련 마스터플랜(덴마크 Grontmij A/S 수행)을 작성, 다카시를 12개 구역으로 나누어 하수처리시설을 도입할 계획 수립했다. 현재 세계은행은 Pagla, Mirpur, Uttara, Daserkandi, Rayerbazar 5 곳을 우선 설치 지역으로 선정하고, Pagla와 Uttara 지역에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방글라

표1 최근 진행 중인 주요 상수처리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재원 (공사규모)	발주처	진행현황
Dhaka Environmentally sustainable water supply	ADB, AFD (US\$ 674 M)	DWASA	프랑스 Degremont사, 발주처와 Contract 계약 추진 중
Karnafully water supply (phase 2)	JICA (US\$ 605 M)	CWASA	코오롱·구보타 컨소시엄 수주, 공사 진행 중
Madunaghat water treatment plant	WB (US\$ 50 M)	CWASA	태영 수주, 공사 진행 중
Kunlna Water supply	JICA (US\$ 200 M)	CWASA	중국 Harbour Engineering 수주

자료 Dhaka Water Supply and Sewerage Authority(DWASA), Chittagong Water Supply and Sewerage Authority(CWASA), Khulna Water Supply and Sewerage Authority(KWASA)

표2 방글라데시 주요 하수처리 프로젝트 계획

프로젝트명	재원 (공사규모/추정)	발주처	지역	현황	입찰 스케줄(예정)	상태
Dhaka Sanitation Improvement Project	WB (US\$ 550M)	DWASA	Pagla, Uttara	F/S완료	• 2017년 6월 - consultancy 입찰 • 2017년 4분기 - contract 입찰	협의 중
Modernize Khulna city sewerage System	ADB (US\$ 170M)	KWASA	Labanchara, Aronghata, Doulatpuri	F/S완료	• 2017년 3분기 - contract 입찰	협의 중
Construction of the sewerage system and treatment plant in Chittagong	WB, JICA (US\$ 300M)	CWASA	치타공시내 6개 지역 (추후확정)	F/S추진예정	• 2017년 7월 - F/S 예정	초기단계 추진 중

자료 Dhaka Water Supply and Sewerage Authority(DWASA), Chittagong Water Supply and Sewerage Authority(CWASA), Khulna Water Supply and Sewerage Authority(KWASA)

데시 정부와 협의 중이다. 다서칸디 지역의 하수처리 시설 설치에는 중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다른 도시 중 쿨나는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시내 세 곳에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방정부와 협의 중이며, 치타공 지역은 세계은행과 일본국제협력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치사업이 초기단계라고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는 방글라데시 하수처리 시장에 지속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 업체들도 이미 방글라데시 하수처리 시장 F/S에 진출하고 있지만,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원 : DWASA, CWASA, KWASA, 관련 업체 면담 및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 등
작성자 : 정재호(방글라데시 다카무역관)

2017-04-17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환경감독 본격 가동

현재 중국은 역대 최대 규모, 최고 강도의 환경 감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보호 감찰'은 지난해 1, 2차에 걸쳐 16개 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올해는 15개 성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조사를 실시하여 올해까지 총 31개 성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앙 환경감찰조는 해당 지역에 1개월간 체류하며, 환경 점검을 수행(고발 접수, 정책 수행 여부, 환경 문제 해결 상황 등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2017~2018년 징진지 지역 및 주변 지역 대기오염방지 업무 방안'에 따라 지난 4월 5일부터 징진지(베이징시, 텐진시, 허베이성) 지역 '2+26'개 도시에 대한 환경감독도 실시 중이다. 올해 1년간 전개되는 이 환경 점검을 위해 5,600명의 인력을 28개 도시에 연간 25회 순차적으로 파견(1개 도시당 8명의 인

원 파견)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점검 및 단속이 시행되자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기업이 늘고 있다. 2016년 중국 환경 당국의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8억 위안을 초과했으며, 공장 폐쇄는 1만여 곳에 달하며, 영업정지 조치는 5,600건을 넘었다. 매달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4월 이후로 처분 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 1~3월의 각 처분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많게는 2배에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5월 12일까지 징진지 지역의 9,937개 기업을 조사했으며 6,634개 기업이 적발(조사 기업의 67.06%를 차지)되었다. 이 중 소규모 오염기업(散亂汚)은 2,249개, 오염물처리시설 미비 기업은 636개, 오염처리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는 기업 604개, VOCs 문제기업 242개였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징진지 지역에만 소규모 오염기업이 5만 6,000여 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환경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감독관리는 상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중 우리 기업들 중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은 환경설비 투자 등 환경규제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편으로, 환경 규제에 대한 리스크 관

표3 징진지 '2+26' 환경 점검 지역

• 직할시 베이징, 텐진 등 2개 직할시
• 허베이성 스톤(石家庄), 탕산(唐山), 랑팡(廊坊), 바오딩(保定), 창저우(沧州), 헝수이(衡水), 싱타이(邢台), 한단(邯郸) 등 8개시
• 산시성 타이위안(太原), 양취안(阳泉), 창즈(长治), 진청(晋城) 등 4개시
• 산둥성 지난(济南), 쑤보(淄博), 지닝(济宁), 더저우(德州), 라오청(聊城), 빈저우(滨州), 허저(菏泽) 등 7개시
• 허난성 정저우(郑州), 카이펑(开封), 안양(安阳), 허비(鹤壁), 신상(新乡), 자오쥘(焦作), 푸양(濮阳) 등 7개시

리와 준법 경영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환경 규제와 점점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며, 임시휴업 등의 단기적인 대처보다는 장기적인 경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기업 차원에서는 환경보호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환경 규제를 대비하고 환경설비를 구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원 : 중국 현지 언론 종합, 진출기업 인터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작성자 : 김윤희(중국 베이징무역관)

2017-05-22

러시아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동향

러시아 정부는 극동러시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선도개발구역(Territory of Accelerated Development, 이하 러시아 약어 TOR)', 2015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을 각각 입안하였다. TOR는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사회발전 도모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제공 및 행정지원 등을 법으로 보장한 구역이다. 개념상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s, FEZ)과 유사하다. 러시아에 TOR로 지정된 지역은 러시아 연방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기업활동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특혜가 부여되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지역을 포함하여 총 15곳이 지정되어 있다. 자유항법은 우리나라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FTZ)와 비슷한 개념으로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화물의 통관을 간소화하고, 자유항 지역 내에 일정 기간 무비자로 입국해 있을 수 있으며, 그 외 기업 활동을 위한 세제 혜택,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러시아 정부로부터 자유항 지위를 인정받는 극동 러시아 항구는 총 5곳—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바니노(Vanino), 코르사코프(Korsakov), 페벡(Pevek), 페트로파블롭스크(Petropavlovsk), 캄차카(Kamchatka) 등 5개 항만—이다.

2017년 3월 초 TOR과 자유항에 입주업체로 등록된 외국기업은 25개로, 총 투자예정액은 2,053억 루블(약 34억 8,000만 달러)이다. 외국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입주기업 수는 선도개발구역 118개, 자유항 143개 등 261개사이며 총 투자예정액은 7,286억 루블(123억 달러) 규모이다. 세부적으로 15개 TOR에 등록된 외국계 입주기업은 중국 8개, 일본 및 호주 각 2개, 한국, 싱가포르, 리투아니아 각 1개 등 총 15개사, 국내 입주기업은 2016년 9월, 제2차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수산물 가공으로 캄차트카 TOR에 등록한 KTI이며, 그 외 2개 국내업체가 하바롭스크 및 발쇼이 카멘 TOR에 입주신청을 한 상태이다. 자유항에 등록된 외국계 입주기업

은 중국 7개, 한국 2개, 일본 1개사이다. 국내 기업은 블라디보스토크시 교통카드 구축사업 추진 및 생활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2개 업체가 자유항 입주업체로 공식 승인되었다.

지난 3월 3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8차 극동개발 러·일 실무자 그룹 회의에서 일본 업체는 '블라디보스토크 개발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을 논의했다. '블라디보스토크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건은 지난 2016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차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러·일 정상회담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이후 같은 해 12월,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러시아주택보증공사는 일본 니켄 세케이사(Nikken Sekkei Ltd.)와 '블라디보스토크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일본 도쿄에 소재한 종합건축설계회사인 니켄 세케이사는 1900년 설립 이후 설계 분야에서 세계 5위 안에 드는 회사이다. 러시아 시장에는 2008년 진출한 이래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 니즈니노브고로드(Nizhni Novgorod) 등에서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 이번에 작성되는 마스터플랜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발전을 위한 전략 콘셉트뿐 아니라,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포괄한다. 그 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도시 구성도, 도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제안 등도 포함된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연해주도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연방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받고 있다. 연해주 정부에 따르면 2017년 러시아 연방정부가 해당 주거개선 프로그램에 배정한 예산은 200억 루블로, 그 중 3억 8,000만 루블이 연해주에 배정되었으며, 주 정부 예산으로 8,000만 루블 정도가 더 투입될 계획이다. '국민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은 노후화된 주택 리모델링, 신규 주택분양 시 대출 등이 포함된다. 러시아

일본, 블라디보스토크시 개발 마스터플랜 콘셉트 발표

지난 3월 3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8차 극동개발 러·일 실무자 그룹 회의에서 일본 업체는 '블라디보스토크 개발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을 논의했다. '블라디보스토크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건은 지난 2016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차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러·일 정상회담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이후 같은 해 12월,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러시아주택보증공사는 일본 니켄 세케이사(Nikken Sekkei Ltd.)와 '블라디보스토크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일본 도쿄에 소재한 종합건축설계회사인 니켄 세케이사는 1900년 설립 이후 설계 분야에서 세계 5위 안에 드는 회사이다. 러시아 시장에는 2008년 진출한 이래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 니즈니노브고로드(Nizhni Novgorod) 등에서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 이번에 작성되는 마스터플랜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발전을 위한 전략 콘셉트뿐 아니라,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포괄한다. 그 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도시 구성도, 도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제안 등도 포함된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연해주도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연방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받고 있다. 연해주 정부에 따르면 2017년 러시아 연방정부가 해당 주거개선 프로그램에 배정한 예산은 200억 루블로, 그 중 3억 8,000만 루블이 연해주에 배정되었으며, 주 정부 예산으로 8,000만 루블 정도가 더 투입될 계획이다. '국민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은 노후화된 주택 리모델링, 신규 주택분양 시 대출 등이 포함된다. 러시아

표4 중국 중앙 환경 감찰 현황

구분	파견시기	성시 수	감찰 대상(성)	추진상황
시범	2016년 1월	1개 성	허베이성	완료
1차	2016년 7월	8개 성	네이멍구(內蒙古), 헤이룽장(黑龍江), 장쑤(江蘇), 장시(江西), 허난(河南), 광시(廣西), 윈난(雲南), 닝샤(寧夏) 등	2017년 4월 개선방안 공개
2차	2016년 11월	7개 성	베이징, 상하이, 후베이(湖北), 광둥(廣東), 충칭(重慶), 산시(陝西), 간쑤(甘肅) 등	2017년 3~4월 감찰결과 발표
3차	2017년 4월	7개 성	텐진, 산시(山西), 랴오닝(遼寧),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후난(湖南), 구이저우(貴州) 등	2017년 4월 감찰 개시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비싼 주택비라고 판단, 이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주택개발뿐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약점인 교통체증·도시환경 등과도 연계되며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 구축, 쓰레기 처리장 현대화, 주택단지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도 맞물리는 사안이다. 이에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도 현지 상황 및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극동개발의 최우선 대상지역은 블라디보스토크와 루스키섬이다. 그렇기에 정부 간, 기업 간 협력에서 블라디보스토크와 루스키섬 개발은 빼놓을 수 없는 분야로, 우리 기업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장이다.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은 2016년, 블라디보스토크 시청의 ‘블라디보스토크시 순환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사전 타당성 조사사업을 지원하는 등 현지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자료원 : 극동개발부, 연해주 정부 홈페이지,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신지현(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2017-05-08

매립지 포화로 쓰레기 소각과 재활용 확대하는 러시아

폐기물 처리 관련 전시회 ‘WasteTech’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연간 약 350억 톤이며, 그 중 54%가 에너지 폐기물, 17%가 비철금속 폐기물, 16%가 도시고형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나머지 13%가 철금속 폐기물이다. 최근 수년간 러시아에서 발생한 일반 고형폐기물의 양은 연간 4,000만~6,000만 톤 혹은 인구 1인당 400kg 정도이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모스크바에서만 매년

2,500만 톤의 도시고형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 고형폐기물 양은 연간 약 1,400만 톤으로, 전체 고형폐기물 중 7%만이 재활용되고 3%가 소각된다. 현재 러시아에는 240개의 폐기물 처리공장, 50개의 폐기물 분류공장, 10개의 소각공장이 운영되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약 250개의 폐기물 재활용공장, 50개의 폐기물 분류공장, 11개의 소각 공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쓰레기의 분리, 재활용, 소각 전 사 이클이 가능한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도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모스크바 인근 주요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 경우가 많아, 최근 폐쇄되거나 추가로 매립지를 확보해 건설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재활용 대상 쓰레기의 매립 금지 법조항이 크게 강화되는 추세이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러시아 법인 ‘연방 폐기물 생산 및 소비법(Feder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Waste Law #89-FZ, June 24, 1998)’이 2016년 12월에 개정되면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철스크랩, 수은 포함 제품 등의 폐기물 매립이 금지되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종이, 타이어, 유리 등의 매립이 금지된다.

러시아 정부는 2014년 환경설비 현대화, 매연 감축 등을 위해 ‘2012-2020 환경보호’ 국가계획을 채택하고 총 2,890억 루블 예산을 배정했으며, 배기가스 제어, 환경 품질 규제, 생물 다양성, 환경 모니터링, 북극과 바이칼호수 보호 등을 주요 목표로 각종 지표를 설정,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는 2017년을 환경의 해로 지정하고 1,940억 루블(약 25억 유로)을 폐기물 재활용 및 각종 환경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국가 프로젝트로는 2016년

12월 21일에 정부에서 채택된 ‘Clean Country’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시범적으로 모스크바 지역과 카잔에 각각 3개와 1개의 친환경 폐기물 처리(소각 및 발전)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4개의 공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다른 지방 도시들도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4개 공장에서는 열 중화기술(Thermal Neutralization Technologies)을 도입해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인데, 2025년까지 모스크바의 고형폐기물 비중을 현재의 95%에서 65%까지 낮출 계획이다. 현재 러시아 환경보호연구원(the Russian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Environmental Protection)이 프로젝트를 총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 카잔에서 폐기물 관리 비즈니스를 하는 RT-Invest사가 프로젝트 기본 계획을 작성하였다. RT-Invest사는 러시아 첨단산업 설비 및 군수 제조사인 Rostec사와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1,500억 루블을 투자할 뜻도 밝히고 있다. 이밖에 Mosenergo사와 Fortum사도 프로젝트 참여 의향을 표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당초 소각장 발전 용량을 위한 가격규정이 2016년 12월 30일에 승인되면 순차적으로 정부입찰 및 장소 선정(2017년 4월 예정), 공장 설계 완료 및 건축허가 획득(2017년 10월)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가격규정 승인이 늦어지면서 장소 선정과 공장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장 설립은 2019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2월 러시아 자연자원및환경부(Ministry Natural Resources and Ecology)는 ‘Clean Country’ 프로젝트와 관련해 러시아 주요 지방 대표들과 협의를 가졌으며, 소각장 및 발전소 건립이 각 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rkhangelsk, Volgograd, Kaliningrad, Nizhny Novgorod, Smolensk, Tula

as well as Karachaevo-Cherkessiya, Chechnya, Chuvashia, Kabardino-Balkaria, Udmurtia 등의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공장 설립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최대 폐기물 관련 전시회로는 ‘Waste-Tech(The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Waste Management, Recycling, Environmental Technologies and Renewable Energy)’이 있으며, 2017년에는 6월 6~8일에 모스크바 크로커스 엑스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자료원 : 러시아 산업무역부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김하민(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2017-05-16

인도 첸나이, 최초 지하철 구간 개통

5월 14일, 첸나이 지역 최초의 지하철 운행 시작되었다. 2007년 타밀나두(Tamil Nadu) 주정부의 추진으로 시작된 첸나이(Chennai) 메트로 프로젝트(Phase1: 1호선, 2호선)는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의 자금(2008년 인도와 일본 정부의 차관협정)으로 2009년 인도정부의 승인을 받아 첫발을 내디뎠다. 2009년 시작된 공사는 6년이 걸려 1호선 지상철 구간(St. Thomas mount metro-Koyambedu)가 2015년 7월 개통됐으며, 2016년 9월 2호선 지상철 구간(Chennai International Airport-Little Mount)가 개통되었다. 1호선의 완공 목표는 2015년, 2호선은 2013년이었으나, 시내 외곽 지상철을 제외한 도심 지하철은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2호선 7개 역의 지하철 구간이 올해 5월 14일 최초로 운행을 시작하였다.

현지 언론은 지하철 개통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용객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가동 4일 만에 승강장 스크린도어 작동

이상으로 열차가 지연되고, 혼잡한 시간대의 배차간격을 잘못 운영하는 등의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Chennai Metro Rail Limited(CMRL) 측은 관련 문제를 조속히 수정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첸나이 메트로프로젝트의 경우 Phase 2까지 총 7개의 노선이 운영될 예정이지만, 2015년 완공을 예상했던 Phase 1의 노선도 예정보다 2년이 경과한 현재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 개통된 상황이다.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일본은 관련 차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2008년 이후 4차례 늘려 현재 13억 6,000만 달러) 일각에서는 프로젝트 자체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 1호선 구간 역시 최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018년까지는 Phase 1의 1호선과 2호선 공사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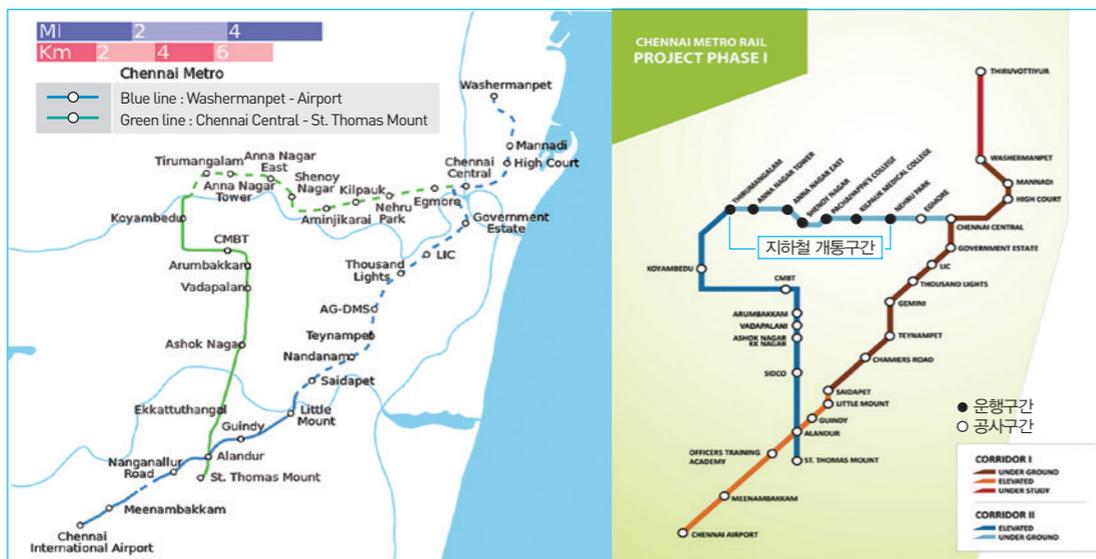
첸나이의 지하철 도입은 단순히 출퇴근 수단의 변

화를 넘어 생활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짧아진 통근 시간에 따른 여가 확대, 대중교통 이용확대에 따른 매연 등 도심환경 개선과 대중교통망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등장(현재 첸나이에는 Grofers, Swiggy 등 배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각종 온라인 쇼핑물을 통한 배송 서비스도 지하철 등을 활용할 경우 더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지하철역 내부에는 매표소, 충전소, 개찰구,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최소한의 기능과 편의시설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IoT 기술을 활용한 물품보관함을 비롯한 광고판, 지하 역사 내 통신 설비 등 관련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원 : CMRL, 현지 언론(The Hindu), NUMBEO, KOTRA 첸나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작성자 : 김태룡(인도 첸나이무역관)

2017-05-19

그림1 첸나이 메트로 프로젝트



자료 Chennai Metro Rail Limited(CMRL), Wikipedia 자료 편집

남인도 144년 만의 가뭄과 인도 물산업 동향

남인도 지역은 2015년 첸나이(Chennai) 대홍수, 2016년 사이클론 '바르다(Vardah)'에 이은 2017년 남인도 큰 가뭄으로 피해를 앓고 있다.

남인도는 몬순기간 내린 비를 저수지에 모아 다음 몬순이 올 때까지 사용하는데, 2016년 몬순기간에 적정량의 비가 내리지 않아 첸나이 등 주요 도시에 물을 공급하던 수원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남인도 주요 도시인 첸나이의 식수원은 최대 저수량의 13%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현지 언론과 인도 당국에 따르면 남인도 타밀나두 지역(Salem, Namakkal, Dharmapuri, Karur 등)의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메투르담(Mettur Dam: 1700m 길이의 인도 최대 댐 중 하나)의 경우, 1934년 건설 이래 최저수량을 기록하며 바다를 드러냈다.

그뿐만 아니라 4월 중순 인도 전역을 덮친 열파(熱波)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다. 첸나이의 경우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낮 최고기온 42.2도를 기록하며 4월 기온으로는 근 100년 이래 최고기온을 기록하였다. 현재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았으나, 현재 저수량으로는 다음 몬순 시기까지 충분한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인도 당국은 인근 다른 지역의 수원을 끌어오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단수조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인도 정부는 주요 투자 인프라사업 중 물 공급 분야에 845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급격한 도시화(2001년 28.53%→2011년 31.16%→2030년 40.76% 전망, UNDP)와 인구 성장(연평균 1.3%)에 힘입어 관련 정부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유로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수처리 산업규모는 2010년 2150억 루피에서 2015년 3,953억 루피로 83.8%의 고성장

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인도 1인당 GDP 상승[연평균 상승률 7.7%(2008~2015)]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은 관련 산업 수요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부족 현상과 함께 도시에 공급되는 생활용수에 대한 불신, 지하수질의 악화로 인도의 생수시장도 급격한 성장세(2016년 전년대비 판매량 22%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의 열악한 정수처리 시설과 상하수도망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물의 질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첸나이의 경우, 가정에 공급되는 일반적 인 수도물의 TDS(총 용존 고형물)는 200~800ppm로 WHO(600 이하), 미국 EPA(500 이하)에서 권장하는 수치를 상회하고 있다. 인도 생수시장 규모는 2016년 704억 루피(약 1조 2,397억 원)에 달하며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까지 1,508억 루피(약 2조 6,555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유통은 지역보급소의 배달과 대형마트를 통해 주로 공급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현지 브랜드인 Bisleri가 24.6%, 코카콜라의 Kinley 17.2%에 이어 펍시콜라의 Aquafina가 10.1%로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인도의 물 산업 수요는 관련 재해들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더욱 주목받고 있다. 모디 정부의 스마트시티 계획과 'Make in India' 정책은 모두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과 효율적인 사용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므로 관련 산업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도는 2013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법제화하였다. 해당 법에서는 순자산 규모가 50억 루피(약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100억 루

피(약 2,000억 원) 이상 또는 순이익 5,000만 루피(약 1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연간 순이익 2% 이상을 CSR 활동에 지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관리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구체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단순기부를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량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CSR 프로젝트만을 CSR 활동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자원 관련 CSR 활동의 경우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타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량적인 성과(마을 공동 저수지 확장(저수량 확대), 수질개선(오염도 하락) 등)을 제시하기 유리하므로 관련 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

자료원 : IEBF, Euromonitor, 현지 언론 및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김태룡(인도 첸나이무역관)

2017-05-16

칠레 수도권 시내버스 대규모 입찰

2007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수도권 교통 시스템(Transantiago)은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2000~2006년)이 칠레 건국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한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시내버스 시스템은 노선 및 비용 분석이 결여되어 교통 혼잡, 30%가 넘는 무임승차, 환경오염, 지원금 낭발 등으로 칠레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도 대표적인 대중교통 정책 실패 사례로 손꼽힌다.

하지만 수도권 시내버스 운영회사 6개사 가운데 4개사의 계약이 2018년 10월 만료되므로(나머지 3개사는 2020~2021년 만료 예정) 이번 5월 중 대규모 공공 입찰이 공고될 예정이다. 칠레 교통통신부(Ministerio de Transportes y Telecomunicaciones, MTT) 산

표5 트란산티아고(Transantiago) 입찰 반영 예정 주요 내용

연번	분류	내용
1	운영회사 수	현재 7개 운영회사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참여회사 수를 늘리며 동시에 각 회사 규모를 줄임으로써 위험을 최대한으로 분산
2	서비스망	• 시민의 요구를 토대로 광역지하철로 개통예정인 지하철 3, 6호선 등을 고려해 버스노선 재편 • 총 운행거리를 500km로 확대, 19개 정류장 신설, 17개 정류장 개편, 신규 차량 435대 도입
3	지원금 구조	• 지원금 내역 중 서비스 품질과 직접 연계된 항목을 도입해 운영회사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유도 • 차량에 대한 투자 지원금과 승객 1인당 운영지원금을 구분해 지급
4	정부 영향력	• 정부는 운영회사의 운행 프로그램 세부내역 결정 및 변경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
5	운영시간	• 심야 및 주말 운행시간 및 요금 개선
6	이행지표	• 서비스 품질 향상 특히, 규칙적인 배차를 위해 다양한 지표 수정 및 개발 • 배차, 좌석이해지수, 차량품질지수, 승객서비스품질지수 등
7	신규 서비스	• 신규 서비스는 좌석, 운행길이,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운영회사를 선정 후 할당
8	차량 규제	• 승객의 안전과 안락함을 개선코자 패드가 부착된 좌석, CCTV, 운전석 보호막 설치 등 새로운 규제 도입 • 차량 사용연한 주행거리 기준 20% 감축, 연식 기준 15% 감축
9	친환경 차량	• 차량 배출기준은 최소 EURO VI-EPA 2010이며, 운영회사별로 최소 1대씩 저탄소 차량 의무 도입
10	지원금 제도	• 매년 운영회사의 요청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현행 지원금 조정 제도 폐지 •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무임승차 감축에 대한 운영회사의 책임 증가
11	인프라	• 운영회사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인프라(정류장, 터미널 등) 의무 사용

자료원 수도권대중교통위원회 보고서 재구성

하 수도권대중교통위원회(Directorio de Transporte Público Metropolitano, DTP)는 최근 일반 시민 및 다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입찰에 반영할 주요 내용을 11가지로 나누어 정리했다.

위 표에 나타난 제언을 토대로 칠레 교통통신부는 현재 입찰 세부내역을 조정하고 있으며 5월 중 감사원 심의를 거쳐 공고될 예정이다. 본 입찰은 현행 수도권 시내버스 시스템에 대해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이며, 동시에 산티아고를 중남미 최고의 '친환경 스마트시티'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과 안정된 재정기반을 갖춘 우리 기업에 칠레 기업 혹은 유럽 기업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가 더해진다면 입찰과정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 교통카드 시스템(Tarjeta Bip)도 2019년 2월 계약이 만료돼 2017년 하반기 중 새로운 입찰이 공고될 예정이므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자료원 : 수도권대중교통위원회(DTP) 보고서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작성자 : 조윤후(칠레 산티아고무역관)

2017-05-12

페루의 최초 산업 신도시 'MacrOpolis'

MacrOpolis 산업단지 프로젝트는 1997년 당시 Chorrillos 지역과 Av. Argentina를 따라 형성된 공장 밀집지역이 포화단계에 이르고 산발적 개발 및 도시 외연 확산으로 리마 수도권 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발생한 도심 혼란의 해결방안으로 추진된 페루 최초로 계획 산업도시이다.

MacrOpolis 산업단지는 페루 수도 리마의 금융 중

심지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25km, 40분 거리의 루린(Lurín)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Panamerica 남부도로, Av. Portillo 및 Av. Industrial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리마 수도권에는 약 84만 2,533개 기업체가 있으며, 그 중 약 12%가 MacrOpolis 산업단지가 소재한 리마 남부 지역에 위치한다. 또한 최근에는 MacrOpolis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페루 리마 남부지역(Villa el Salvador, Villa María del Triunfo, San Juan de Miraflores, Lurín)에 각종 백화점, 금융기관, 대학교 등이 들어서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리마 남부지역 아파트 공급 등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각종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MacrOpolis 산업단지의 규모는 약 980헥타르에 달하며 3단계에 걸쳐 개발과 분양이 실시될 계획 예정이다. 2017년에는 약 284헥타르 면적의 산업부지 개발이 진행될 계획이며 단지 개발 및 기획조사를 위해 1억 6,000만 누에보 솔(약 5,000만 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4월 27일 특수목적 기업을 위한 소규모 산업부지 분양을 시작했으며, 1단계 산업부지의 약 70%가 분양을 마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림2 MacrOpolis 위치도



자료 Centenario

그림3 MacrOpolis 산업단지 개발 구상도



자료 El Comercio

MacrOpolis 산업단지 프로젝트는 향후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약 60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MacrOpolis 산업단지는 수도 리마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남미 간 최단거리 항공인 카야오(Callao)항구와 근접해 있어 한국 기업이 입주할 경우 무역과 생산을 위한 원료 수급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페루 일간지 Gestion, El Comercio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김은지(페루 리마무역관)

2017-05-12

페루 OxI 활용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

올해 여름 발생한 페루 연안 자연재해로 인해 페루의 인프라 시설 피해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태다. 피해 복구사업이 주로 인프라 재건에 집중된 점을 고려, 관련 프로젝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OxI(Obras por Impuestos: 공공사업 세금공제 제도)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OxI 제도는 민간기업이 공공사업 참여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고 사업 완료 이후 최대 10년까지 정부로부터 무이자 자금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민간 감리가 투

입되어 사업 운영 및 행정적 투명성 확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다.

2009년 이 제도가 출범한 이후 인프라 사업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OxI 프로젝트의 누적건수는 256건으로 그 투자액이 27억 3,800만 누에보솔(약 8억 4,400만 달러)에 달한다. 올해에도 7,900만 누에보솔(약 2,400만 달러) 규모의 총 7건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2017년 2월 기준). OxI 프로젝트는 페루 전국 24개 주 중 17개 주에서 진행되며, 주요 투자 지역으로는 Arequipa주(약 1억 4,600만 달러), Piura주(약 1억 1,100만 달러), Ancash주(약 1억 600만 달러) 및 Tacna(약 7,600만 달러)가 있다. 한편 지난 2013~2016년까지는 5개주(La Libertad주, Pasco주, Cusco주, Lima주, Junín주)에서만 OxI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된다.

대부분의 민간협력 투자 개발형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 손실 및 사업 폐지의 리스크 분담에 대한 사전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경우 단독적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 재정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자료원 : 페루 일간지 Gestion, La Camara, Proinversion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김은지(페루 리마무역관)

2017-05-11

페루 PPP(민관협력 파트너십) 활용 투자 활성화 방안

페루 경제경영연구소(Instituto de Educación Digital del Estado de Puebla, IEDEP)에 따르면, 지

난 3년 동안 페루 국내 투자 총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GDP의 20%를 차지하는 민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 이에 페루 정부는 최근 공공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PPP(민관협력 파트너십)을 적극 검토 중이다. 2008~2016년 약 287억 7,3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총 86건의 PPP 사업이 진행되었다. 당기 PPP 사업 투자총액의 89.8%가 교통(76억 8,000만 달러), 전기(70억 6,900만 달러), 통신(40억 달러) 및 탄화수소(39억 800만 달러) 부문에 집중되었다. 한편 지난 2015~2016년까지 PPP 사업 투자 역동성이 둔화하며 추진 프로젝트가 10건에 머물며 투자규모는 18억 7,8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올해 여름 페루 연안에서 발생한 엘니뇨 현상으로 페루 국토 약 20%가 유실되고 교량 150여 개가 파손되는 등 피해 규모가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피해지역의 인프라 재건 중심의 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방안으로 PPP와 OxI 등이 고려되고 있어 앞으로 PPP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아직 페루 내 한국 기업의 인프라 및 건설사업 부문 인지도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PPP 투자를 위해 정부 차원의 해외 인프라 건설 지원방안 및 인프라 기술 홍보 등 다각도에서의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PPP 투자개발형 프로젝트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어 사업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자원 확보가 다소 어렵다는 점이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관심 기업의 경우 PPP를 통한 사업협력에 앞서 투자 관련 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 및 연구가 요구된다.

자료원 : 일간지 Gestion, La Camara, Proinversion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김은지(페루 리마무역관)

2017-05-11

루마니아 프로젝트 발주처에서 듣는 지하철 차량 시장정보

루마니아 지하철은 1979년 11월 첫 운영을 개시해 현재 총 연장 6,925km의 복선으로, 노선 4개와 지하철역 51개 및 지하철 차량 498대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 도입한 신규 차량은 2015년 루마니아 기업인 Intreprinderea de Vagoane Arad(IVA) '로부터 전기 지하철차량 2대, 스웨덴 Bombardier Transportation에서 제조한 BM2 및 BM21 차량 및 Construcciones y Auxiliar de Ferrocarriles(CAF)가 제조한 신규 BM3 차량 6대이다.

현재 부쿠레슈티 지하철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 ① Romanian ASTRA IVA: 열차 15대(차량 90대 보유), 1976년과 1992년 사이에 제조
- ② Bombardier Movia 346: 열차 44대(차량 264대 보유), 2002년과 2008년 사이에 제조
- ③ CAF: 열차 24대(차량 144대 보유), 2013년과 2016년 사이에 제조

METROREX는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총 30대의 열차를 구매할 계획이다. 먼저 총 예산 9,000만 유로 규모로 열차 13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2차로 1억 9,000만 유로 규모로 17대를 발주할 계획이다. 1차 발주의 공식적인 입찰정보는 2017년 상반기 중에 공개될 예정이나, 주요 사양 등은 KOTRA 프로젝트 조달정보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료원 : METROREX 면담, 홍보 자료 및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LiviuVasile TOMA(루마니아 부쿠레슈티무역관)

2017-05-17

터키, 차나칼레 대교 건설계약 대립-SK건설 컨소시엄과 체결

올 3월 16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아흐멧 아르슬란(Ahmet Arslan) 터키 교통해양통신부 장관은 교량과 연결도로를 포함 총 3.7km 구간을 건설하는 차나칼레 대교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은 3월 17일 터키 국영통신사 Anadolu Agency 등 현지 언론에 의해 일제히 발표되었다. 지난 1월 26일 차나칼레 대교 건설 입찰 결과에서 한국 대립·SK건설(SK E&C)과 터키 Limak·Yapi Merkezi사 총 4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16년 2개월 12일의 최단기간 건설기간을 제시해 일본계 및 중국계 등 여타 경쟁 입찰자들을 물리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번 양국 교통부 장관의 서명으로 차나칼레(Çanakkale) 대교 건설사가 대립·SK 건설·터키 2개사의 컨소시엄으로 확정된 것이다.

차나칼레 대교 사업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있었던 1915년 갈리폴리 전투를 기리는 뜻에서 '1915년 차나칼레 대교'로 명명되었으며, 터키 공화국 100주년이 되는 2023년을 기념하기 위해 양 주탑 간 거리가 2,023m로 계획되고 주탑의 높이는 318m로 정해졌다. 한·터키 컨소시엄 4개사는 향후 5년 6개월간의 공사로 2023년 완공하고, 운영기간을 포함해 총 16년 2개월 후 교량을 터키 정부에 양도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103억 5,000만 터키 리라(약 28억 달러 상당)로 한화로 환산할 경우 3조 2,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BOT(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양도) 방식에 따라 일정기간 도로·교량 운영권을 받아 통행료 수익으로 건설비를 회수하게 될 것이다.

차나칼레 대교는 위치상 터키 이스탄불의 남쪽 마르마라해가 지중해로 연결되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넘

어 건설됨으로써 유럽과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을 직접 연결하게 되며, 터키의 교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나칼레 대교 건설프로젝트는 지난 2016년 12월 개통된 유라시아 터널, 2016년 8월 개통된 보스포러스 제3대교 등에 이어 한국과 터키 간의 협력관계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메가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단순 도급형이 아닌 투자·금융·운영 등을 포함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수주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으로 양국의 건설인력과 자재가 대거 투입돼 양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터키 정부는 첨단 현수교 건설과 관련된 기술 이전 효과를 얻게 되어 기대가 크다.

자료원: Anadolu Agency, 주요 현지 일간지(2017년 3월 17일 재, SK건설 관계자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 권오룡(터키 이스탄불무역관)

2017-03-21

코트디부아르 건설기자재 시장을 주목하라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는 내전 이후 해외투자자 유입 증가 등으로 극심한 주택난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2016년 기준 주택 수요가 40만 가구로 나타났고 경제 수도인 아비장(Abidjan)에만도 20만 가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동안 주택 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불과 6,000가구만 완공돼, 수요에 비해 공급이 극히 미달한 상태이다. 한편 건설 원부자재 수요가 급증해 연간 290만 톤의 시멘트 증산을 위한 새로운 시멘트 공장 4개가 추가로 건설 중이다. 건설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2020년 신흥국 진입 목표에 따라 코트디부아르 건설 붐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잠재력도 점차 확대돼 각종 건설장비, 건축자재, 주택가구 및 가전용품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건설 분야는 오랜 내전을 겪은 코트디부아르 경제 발전에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고속도로·교량·수력 발전소·화력 발전소 건설, 항구·항공 확충 공사, 건물 리모델링, 지방도로 개축공사 등 코트디부아르 전 지역에서 재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도시에서도 각종 중장비 및 건설 장비들의 소음이 밤낮으로 들려와 코트디부아르 건설 붐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최근 경제부처 발표에 따르면, 건설업 GDP 비중이 2010~2014년 1.7~2.4%에서 2016년 2.8%로 상승하고, 코트디부아르 건설기업연합회(Groupement Ivoirien du Bâtiment et des Travaux Publics, GIBTP)도 코트디부아르의 전체 건설기업 연평균 매출 총액이 2004~2010년 2570억 CFA 프랑¹에서 2011~2014년 5250억 CFA 프랑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국세청에 납부된 건설 부문 세금이 2,300억 CFA프랑, 분담금 2,050억 CFA 프랑으로 코트디부아르 경제 활성화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아비장은 남북 12km, 동서 10km의 면적의 도시로, 서아프리카에서 라고스(나이지리아의 경제 수도)에 이어 인구밀도가 두 번째로 높은 도시(2016년 기준, 500만 명)이다. 10여 년간의 긴 내전을 치르는 동안 주변국으로 이주했던 기업·국제기구·해외투자자들이 아비장으로 다시 복귀 중이며, 고용 기회를 찾아 코트디부아르에 진출하는 이민자들까지 감안하면 저가 주택·고가 주택·사무실 건축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건축 분야에서 사용되는 건축자재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코트디부아르에서 생산되지 않는 배관도구(파이프), 전기·기계 공구, 타일 등은 수입되며 대개 저가의 중국제품이 주를 이룬다. 코트디부아르로 수입되는 건축자재 중에서는 시멘트가 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7.9% 벽용타일, 6.4% 알루미늄판 등이다. 코트디부아르 건축자재 주요 수입국으로는 시멘트의 경우 모로코(33.8%), 스페인(18.8%), 일본(12.8%) 순이다. 타일의 경우 중국(65.7%), 이탈리아(16.3%), 프랑스(3.7%)임. 알루미늄판의 경우 중국(60.2%), 인도(17.5%), 홍콩(9.6%) 등이다. 구리 등의 철물 가격 상승이 건축자재 및 건축 철물 수입에 큰 영향을 주어, 가격이 저렴한 중국 제품과 품질 좋은 미국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상류층의 레저용 주택 수요 증가와 서민층의 주택난으로 코트디부아르 건설업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건축자재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코트디부아르는 2020년 신흥국 진입을 목표로 모든 분야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어, 새롭고 혁신된 건축자재에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금속타일 등 기술과 현대적 멋을 가미한 한국 제품도 전망이 밝다. 지금까지는 품질 좋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제품이 인기이며, 중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에 진출 중이다. 현지 건축계 현지 바이어들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는 수입선이 유럽과 중국에 편중돼 있으나 수입국을 다변화하면서 우리 기업에게도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료원: 코트디부아르 관세청, 현지 바이어 인터뷰, KOTRA 아비장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 장예량(코트디부아르 아비장무역관)

2017-03-13

¹ Coopération Financière en Afrique Centrale Franc: 옛 프랑스령 아프리카 나라 12곳과 기니비사우(전 포르투갈 식민지)와 적도 기니(전 스페인 식민지)의 통화

세계 ODA사업 동향

세계은행 신규 승인 사업 2017년 3월~2017년 5월



세계은행에서 승인되는 최신 도시 및 인프라 건설 관련 프로젝트 소개

사업명	국가	지역	차용금액 (100만 달러)	승인날짜
01 베트남 도시환경 개선 확대 프로젝트 Vietnam Scaling up Urban Upgrading Project	베트남	동아시아 태평양	240.0	2017-5-30
02 다낭 지속가능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가금융 Additional Financing for Danang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Project	베트남	동아시아 태평양	72.52	2017-5-26
03 다카르 BRT 시범사업 Dakar Bus Rapid Transit Pilot Project	세네갈	아프리카	300.0	2017-5-25
04 베트남 연안도시의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프로젝트 Vietnam Coastal Cities Sustainable Environment Project	베트남	동아시아 태평양	236.2	2017-5-5
05 도시개발프로젝트 추가금융 DRC - Urban Development Project Additional Financing	콩고공화국	아프리카	90.0	2017-5-4
06 포르탈레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프로젝트 Fortaleza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roject	브라질	중남미	73.3	2017-4-28
07 세계환경기금(GEF) 지속가능 도시 추가금융 - 세네갈 폭풍우 관리와 CCA 프로젝트 GEF sustainable cities AF to the Senegal Stormwater management and CCA project	세네갈	아프리카	5.50	2017-4-13
08 도시개발 프로젝트 Madhya Pradesh Urban Development Project	인도	남아시아	116.20	2017-4-12
09 제2차 에티오피아 도시 상수 공급과 위생 프로젝트 Second Ethiopia Urban Water Supply and Sanitation Project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445.00	2017-3-31
10 도시서비스 개선 과정에서 시민참여 Citizen Involvement in Municipal Service Improvement (CIMS)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0.70	2017-3-23
11 인도네시아 저렴한주택 프로그램 National Affordable Housing Program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태평양	450.0	2017-3-17
12 메트로 마닐라 BRT 1호선 프로젝트 Metro Manila BRT Line 1 Project	필리핀	동아시아 태평양	40.70	2017-3-16
13 포양 호수 바신 지역 상수환경 관리 프로젝트 Poyang Lake Basin Town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	중국	동아시아 태평양	150.00	2017-3-16
14 다르에스살람 도시교통 개선 프로젝트 Dar es Salaam Urban Transport Improvement Project	탄자니아	아프리카	425.00	2017-3-8
15 도시와 농촌 연계성 개선 프로젝트 Rural and Urban Access Improvement Project	니카라과	중남미	96.80	2017-3-6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신규 승인 사업 2016년 12월~2017년 2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서 승인되는 최신 도시 인프라 건설 관련 프로젝트 소개

사업명	국가	지역	차용금액 (100만 달러)	승인날짜
01 지역 인프라 개발 펀드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태평양	100.0	2017-3-22
02 댐과 수자원 관리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태평양	125.0	2017-3-22

01

베트남 도시환경 개선 확대 프로젝트 Vietnam Scaling up Urban Upgrading Project

사업 승인	2017. 5. 30
사업비	• 총 사업비 : 3억 3,000만 달러 • 차용 금액 : 2억 4,000만 달러 • 차용 기관 : 베트남 정부
금융 제공방식	IDA 용자
사업 실행기관	떤안(Tanan), 벤째(Bentre), 비잉 롱(Vinh Long), 롱 쉘엔(Long Xuyen), 비 타잉(Vi Thanh), 썩 쩡(Soc Trang), 박 리에우(Bac Lieu) 지역의 건설투자 및 관리 부서
사업 완료 예정일	2023. 12. 31

사업 목적

- 베트남 남부지역 주요 도시의 인프라 접근성 및 도시계획 개선

사업 분야

- 에너지 송전 및 배전, 사회적 보호, 도시교통, 기타 상수공급, 위생 및 폐기물 관리, 지방정부 행정

사업 구성

- 저소득거주지역의 3차 도시기반시설 환경개선: 1) 도로, 배수, 공공하수 및 정화조 건설 및 관리 서비스 제공, 2) 상수공급 및 전기·공공조명 설치 증대 3) 학교, 시장, 공공시설 및 공공 공간 등의 사회적 기반시설 환경 개선
- 우선적인 1, 2차 도시기반시설 구축: 1) 저소득 지역의 사회적 기반시설 구축, 2) 수리모형 도입 및 저수지 건설을 통해 홍수, 염분 침입 예방, 3) 도로 및 배수 처리 증대
- 재정착 지원: 재정착 지역의 인프라 및 공공시설 건설 (7개 도시에 걸쳐 총 1,200 가구 규모로 재정착 예정)
- 사업관리 지원: 사업시행에 필요한 투자설계, 통합적 도시계획 마련 등의 기술지원

사업대상지역(베트남 남부의 7개 도시)



02

다낭 지속가능 도시개발 프로젝트 - 추가금융 Additional Financing for Danang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Project

사업 승인	2017. 5. 26
사업비	• 총 사업비 : 8,612만 달러 • 차용 금액 : 72.52만 달러 • 차용 기관 : 베트남 정부
금융 제공방식	IDA 용자
사업 실행기관	다낭위원회
사업 완료 예정일	N/A

사업 목적

- 배수시설, 하수도망 및 하수처리시설 확대
- 간선도로 네트워크 및 대중교통 확대

사업 분야

- 위생, 교통, 지방정부 행정

사업 구성

- 배수시설, 하수 수집 및 처리시스템 개선: 미안-미케(MyAn-MyKhe) 해안 관광지역 가정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하수도망 구축
- 대중교통을 위한 ITS 시스템과 BRT 시스템 도입
- 도시 내 전략도로 개선: 호아논-호아손(Hoa Nhon-Hoa Son) 도로(DH2) 개선
- 기술지원 및 역량 강화
- 다낭 우선 인프라 투자지원 프로젝트 관련 활동도 본 사업에서 시행 지속

03

다카르 BRT 시범사업
Dakar Bus Rapid Transit Pilot Project

사업 승인	2017. 5. 25
사업비	• 총 사업비 : 4억 3,630만 달러 • 차용 금액 : 3억 달러 (유럽투자은행 3,150만 달러, 녹색기후기금 3,000만 달러, 해외 민간기업 5,400만 달러) • 차용 기관 : 세네갈 경제재정계획부
금융 제공방식	IDA 신용
사업 실행기관	다카르도시교통집행위원회
사업 완료 예정일	2023. 6. 30

사업 목적

- 다카와 구에디아와예(Guediawaye) 지역간 BRT 회랑 건설을 통해 도시 이동성 향상

사업 분야

- 교통 및 ICT

사업 구성

- BRT 인프라 건설, 차량 및 시스템 도입: 1) 도로, 배수시스템, 조경, 차량보관소, 터미널, 정류장, 교차로 등 BRT 인프라 설계, 건설 및 관리 감독 지원, 2) BRT 교통관리 시스템 도입, 3) 보행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일부 지역) 계획 및 도입, 3) 민간 운영자를 PPP를 통해 선정하여 150인승 굴절버스를 도입하도록 추진
- 대중교통 네트워크 재구조화, 도로작업: 1) 지선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BRT 도입에 필요한 각종 도로사업 및 사업홍보 지원
-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운영비 지원 및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BRT 운영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신탁 및 이익보호, 모니터링, 평가, 재무감사 관련 지원
- 도로안전: 도로안전 관련 기술, 교육, 지역홍보, 장비, 등 지원 (특히 BRT 도입지역 내 도로사고 매핑 시스템(road accident mapping system)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과 장비 지원 예정)

04

베트남 연안도시의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프로젝트
Vietnam Coastal Cities Sustainable Environment Project

사업 승인	2017. 5. 5
사업비	• 총 사업비 : 2억 7,360만 달러 • 차용 금액 : 2억 3,620만 달러 • 차용 기관 : 베트남 정부
금융 제공방식	IBRD 용자(4,600만 달러), IDA 신용(1억 9,020만 달러)
사업 실행기관	광빈성(Quang Binh), 빈딘성(Binh Dinh), 카인호아(Khanh Hoa)성
사업 완료 예정일	2022. 12. 31

사업 목적

- 대상도시의 환경 개선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 대상 도시는 2007~2014년 사이에 진행된 동명의 사업 대상지 4곳과 나짱(Nha Trang)과 인접한 탐짬(Thap Cham) 지역이며, 사업 추진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대상지역: 동하이(Dong Hoi), 나짱(Nha Trang), 퀴논(Quy Nhon), 반랑(Phan Rang), 탐짬(Thap Cham)

사업 분야

- 기타 상수공급, 위생 및 폐기물 관리, 폐기물 관리, 위생, 도시교통

사업 구성

- 위생 인프라 확대: 1) 홍수저감 사업, 2) 배수 시설 및 하수도 네트워크 확대, 3) 하수처리시설 3곳 추가 건립, 감시통제 시스템 및 데이터 수집 장치 도입, 4) 학교 위생시설 30곳, 공중화장실 10곳 설치, 5) 반랑(Phan Rang), 탐짬(Thap Cham) 지역에서 가정에서 하수배관 연결에 필요한 자금을 리빙빙펀드로 지원, 6) 고체 폐기물 수집 및 처리를 위한 장비 구입, 신규 매립지 건설, 침출수 처리시설 업그레이드, 7) 설계 및 감독 지원
- 도시연결성 개선: 1)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도로(전략도로 약 7km) 개선 및 신규 건설, 운하, 배수시설, 강변의 다리 건설(7곳)을 통해 도시 전반의 도로네트워크 개선, 2) 설계, 건설감독, 재무감사, 환경 및 사회영향 관리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 보상 및 부지정리: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비용은 반랑(Phan Rang) 지역의 재정착지 마련을 위해서만 활용(보상, 공지화, 재정착을 위한 인프라 등 사업전반을 지원 예정)
- 사업 시행 지원 및 제도 개혁

05

콩고공화국 도시개발프로젝트 추가금융
DRC - Urban Development Project Additional Financing

사업 승인	2017. 5. 4
사업비	• 총 사업비 : 9,000만 달러 • 차용 금액 : 9,000만 달러 • 차용 기관 : 콩고공화국 재정부
금융 제공방식	IDA 신용
사업 실행기관	N/A
사업 완료 예정일	2022. 11. 30

사업 목적

- 특정 도시의 기본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도시 및 도시정부의 관리를 강화
대상도시: Bukavu, Kikwit, Kalemie, Kindu, Matadi, Mbandaka, Goma, Kisangani, Kolwezi

사업 분야

- 하위정부 행정 50%, 도시교통 30%, 일반 물, 위생 및 홍수예방 20%

사업 구성

-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 모사업 대상도시 6곳—Bukavu, Kikwit, Kalemie, Kindu, Matadi, Mbandaka-과 새로운 3개 도시—Goma, Kisangani, Kolwezi-의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에 투자
- 도시 거버넌스: 1) 성과 기반의 투자, 2) 도시 수준에서의 역량강화 지원, 3) 중앙 및 지방정부 기관 지원, 4) 특정 전략 연구 지원, 5) 사업 운영, 조정 및 모니터링

06

포르탈레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프로젝트
Fortaleza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roject

사업 승인	2017. 4. 28
사업비	• 총 사업비 : 1억 4,660만 달러 • 차용 금액 : 7,330만 달러 • 차용 기관 : 포르탈레자 시정부
금융 제공방식	포르탈레자시 도시계획 · 환경본부 (SEUMA)
사업 실행기관	IBRD 용자
사업 완료 예정일	2024. 3. 31

사업 목적

- 포르탈레자 도시정부의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 기반의 파이낸싱 역량 강화
- 베르텐테 마리티마 해안가(Vertente Marítima Basin)와 레이첼 데 퀘이로즈 공원(Rachel de Queiroz Park)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공공 공간 재활성화

사업 분야

- N/A

사업 구성

- 도시 및 환경 복원: 레이첼 데 퀘이로즈 공원과 베르텐테 마리티마 해안가 인근 주거지와 도심지 개선, 기본적인 위생시설 도입 및 민간개발 장려
- 계획강화 및 토지 기반의 금융제공: 1) 지적도 업그레이드 및 공간정보 플랫폼 개발, 2) 도시 및 환경관리 관련 서비스 제공과 절차 최적화, 3) 레이첼 데 퀘이로즈 공원 인근 도시운영(OUC)의 디자인과 구조화, 4) 도시개발 장려를 위하여 포르탈레자시 도시개발 및 환경사무국의 역량 강화
- 사업 관리: 1) 사업의 기술 및 행정관리, 모니터링과 평가, 2) 사업 금융관리 및 조달 조건 마련, 3) 사업과 연계된 인도적 지원,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교육 제공, 5) 차용기관의 감시, 재무통제 및 조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대상지역



— 레이첼 데 퀘이로즈 공원과 주변지역
● 베르텐테 마리티마 해안가와 주변지역

07

**세계환경기금(GEF) 지속가능 도시 추가금융
- 세네갈 폭풍우 관리와 CCA 프로젝트**

GEF sustainable cities AF to the Senegal Stormwater management and CCA project

사업 승인	2017. 4. 13
사업비	• 총 사업비 : 550만 달러 • 차용 금액 : 550만 달러 • 차용 기관 : 세네갈 경제·재정·계획부
금융 제공방식	세계환경기금-공동자금조달
사업 실행기관	도시개발청
사업 완료 예정일	2019. 12. 31

사업 목적

- 다카 주변 지역의 홍수 위기를 경감하고 특정 도시지역에 환경대응 등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계획 및 실행 역량을 개선하고자 함
- 추가금융은 특히 디암니아디오(Diamniadio)와 세인트루이스(Saint-Louis) 지역에 지속가능한 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경험을 확대하는 데 집중될 예정임
- *디암니아디오는 다카시에서 30km 떨어진 도시로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 중심지
- *세인트 루이스(Saint-Louis)는 세네갈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전국인구의 60%가 살고, 전국 GDP의 68%가 생산되지만, 다카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해안도시로서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

사업 분야

- 일반 물, 위생 및 홍수 예방 부문 60%, 공공 행정-물, 위생 및 폐기물 관리 40%

사업 구성

- 도시계획 및 관리 체계 내에 기후 위기대응 통합: 1) 도시계획 및 관리체계 강화 2)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의 제도 강화 3) 기후 변화 대응체계가 통합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을 디암니아디오 및 세인트루이스에서 시행하고, 이 사업 경험을 공유 및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과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 배수투자 및 관리(추가금융 제공 없음): 배수 설치에 투자, 배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체계 마련
- 도시홍수 경감 및 적응을 위한 커뮤니티 참여(추가금융 제공 없음): 홍수 대응에 대한 경각심 향상, 소통 및 커뮤니티 역량 강화
- 프로젝트 조정,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 사업구성은 모사업과 동일하나, 지속가능한 도시 관련 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을 추가 지원

08

마디아프라데시주 도시개발 프로젝트

Madhya Pradesh Urban Development Project

사업 승인	2017. 4. 12
사업비	• 총 사업비 : 1억 6,600만 달러 • 차용 금액 : 1억 1,620만 달러 • 차용 기관 : 인도 정부
금융 제공방식	IBRD 융자
사업 실행기관	인도 경제부
사업 완료 예정일	2022. 12. 31

사업 목적

- 주요 도시 서비스 제공범위 및 참여 도시지역 기관의 수익 확대
- 마디아프라데시 도시개발공사(MPUDC) 역량강화

사업 분야

- 지방정부 행정 30%, 고체폐기물 관리 20%, 일반 물, 위생 및 홍수 예방 50%

사업 구성

- 제도발전: 1) 지방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실행력 향상을 위한 도시정책과 지방정부의 개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내 지방개혁 조직의 도시정책개혁(토지세, 서비스 요금, 회계, 예산, 신용개선 등) 역량 확대(총 51개 도시정부 참여 예정), 2) 마디아프라데시 도시개발공사의 제도 강화(기술지원, 사업관리 지원, 사업시행 관리 역량 강화, 지역/도시/경제개발 계획 마련, BISCO(Bhopal Indore Super Corridor) 지역 투자제안서 마련 등
- 도시투자: 참여 도시정부의 하위 서비스제공 사업 금융지원 (사업지원 분야: 상수공급, 하수 및 정화조 관리, 배수 시스템, 고체폐기물 관리)

09

제2차 에티오피아 도시 상수 공급과 위생 프로젝트

Turkey Sustainable Cities

사업 승인	2017. 3. 31
사업비	• 총 사업비 : 5억 500만 달러 • 차용 금액 : 4억 4,500만 달러 • 차용 기관 : 에티오피아 정부
금융 제공방식	IBRD 신용
사업 실행기관	수자원관계에너지부(MoWIE), 지역상수국 (Regional Water Bureau)
사업 완료 예정일	2023. 7. 7

사업 목적

- 아디스아바바와 주요 2선 도시를 대상으로 상수공급 및 위생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을 효율적으로 향상

사업 분야

- 위생 65%, 상수관리 30%, 공공행정-상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5%

사업 구성

- 아디스아바바시 위생 및 상수공급 서비스 개선: 위생서비스 개선, 운영 효율성 향상, 사업관리와 제도 강화
- 2선 도시의 위생 및 상수공급 서비스 개선: 22개 도시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향상, 상수공급 확대, 운영 효율성 향상, 사업관리와 제도 강화
- 사업관리와 제도 강화: 중앙정부 및 지자체 관계 부서를 대상으로 1) 단기 훈련, 답사 제공, 관련 사무기기 및 차량 구매, 2)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 성과 기반의 계약, 수자원 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기관 설립 검토 등 여러 가지 연구 지원

10

도시서비스 개선 과정에서 시민참여

Citizen Involvement in Municipal Service Improvement (CIMSI)

사업 승인	2017. 3. 23
사업비	• 총 사업비 : 7,000만 달러 • 차용 금액 : 7,000만 달러 • 차용 기관 : SAHA
금융 제공방식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Social Accountability)
사업 실행기관	SAHA
사업 완료 예정일	2020. 1. 31

사업 목적

- 배참여형 계획과 예산을 도입하여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투명성과 책임 향상
- 총 46개 지방정부(도시 4곳, 농촌 42곳)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 예정

사업 분야

- 지방정부

사업 구성

- 시민참여형 계획 및 예산을 시행하는 지역 확대
- 지역별로 컨설팅 조직(Municipal Consultation Organs, MCOs) 설립을 확대하여 건강, 교육, 토지등록 분야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역량 강화

11

인도네시아 저렴주택 프로그램
National Affordable Housing Program

사업 승인	2017. 3. 17
사업비	• 총 사업비 : 9억 6,000만 달러 • 차용 금액 : 4억 5,000만 달러 • 차용 기관 : 인도네시아 정부
금융 제공방식	IBRD 융자
사업 실행기관	인도네시아 건설주택부
사업 완료 예정일	2017. 3. 21

사업 목적

- 저소득층 대상 저렴주택 접근성 향상

사업 분야

- 주택건설 96%, 공공행정-산업, 무역 및 서비스 4%

사업 구성

- 주택대출과 연계하여 계약금 지원: 정부지원 없이는 주택대출을 받지 못하는 하위 중산층을 대상으로 지원
- 주택개선 지원: 주택구매보다 기존 주택 개선을 필요로 하는 하위 40%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주택정책 개혁 관련 기술 지원: 1) 주택금융 확대, 2) 공공주택 및 저소득 주택 제공에 제약요소 제거-공공주택 프로그램 개혁 및 발전, 지방정부 주택정책 역량 강화, 공공 저렴주택 개발자들의 역량 강화

12

메트로 마닐라 BRT 1호선 프로젝트
Metro Manila BRT Line 1 Project

사업 승인	2017. 3. 16
사업비	• 총 사업비 : 1억 941만 달러 • 차용 금액 : 4,070만 달러 (청정기술펀드 2,390만 달러) • 차용 기관 : 필리핀 정부
금융 제공방식	IBRD 융자, 청정기술펀드 융자
사업 실행기관	필리핀 교통부
사업 완료 예정일	2022. 11. 30

사업 목적

- 메트로 마닐라의 BRT 시스템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사업 분야

- 도시교통 79%, 공공행정-교통 21%

사업 구성

- BRT 인프라: 대상지역에 신규 BRT 인프라 제공(버스 정류소, 분리 차로, 분리벽, 보도 및 보행로, 도로 재건, 교차로 개선, 조경설계, 안내판 설치 등)
- 시스템 관리: 1) 교통기술 및 관리 지원(교차로 최적화, 주차 관리, 유턴길 마련, 신호 개선 등), 2) 지능형 버스 운영 지원 및 관리 시스템 도입, 3) BRT 시스템 관리에서 IT 및 홍보기능 강화, 4) BRT 계획, 디자인, 시행 및 홍보 관련 기술지원
- 역량 강화와 콘셉트 개발 및 확산: 1) BRT 도입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F/S), 2) 중앙정부, 메트로 마닐라 및 주변지역 정부 대상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3) 대시민 홍보 및 인식 확대
- 접근성 및 도시기능 향상: BRT 대상지역과 주변부 간 물리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BRT 사업과 주변지역 토지개발사업 연계
- 사업결과 모니터링: 1)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수집, 보고 및 분석, 2) 필리핀 교통부에 향후 계획 및 관리를 위한 교통데이터 베이스 제공
- 사업시행 관리: 사업시행 관리, 조정, 감독, 조달, 재무관리, 환경/사회영향 관리, 이주, 및 소통 관련 업무 지원

13

포양호수 바신 지역 상수환경 관리 프로젝트
Poyang Lake Basin Town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

사업 승인	2017. 3. 16
사업비	• 총 사업비 : 2억 1,993만 달러 • 차용 금액 : 1억 5,000만 달러 • 차용 기관 : 중국 정부
금융 제공방식	IBRD 융자
사업 실행기관	장시성 개발개혁위원회
사업 완료 예정일	2022. 12. 31

사업 목적

- 특정 수로에 오염물질이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시성 포양호수 인근 지역의 수질 관리 체계 개선

사업 분야

- 위생 80%, 상수공급 20%

사업 구성

- 상수관리제도 강화: 1) 호수관리 플랫폼 설계, 2) 수원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3) 포양호수 보호를 위한 생태연구 준비, 4) 포양호수의 민감도 분석, 5) 포양호수 관리의 지속성을 위한 참여 확대
- 호수와 강 재건 및 하수관리 개선: 1) 주후(Zhuhu) 호수, 피파(Pipa) 호수, 주지아주이(Zoujiazui) 호수 및 주변 개천의 환경 복원, 2) 하수관리개선-하수조집기 및 수거기 설치; 폭풍우 파이프라인 설치; 핑신(Fengxin)현, 두창(Duchang)현, 징안(Jing'an)구, 지수이(Jishui)현 도로변 하수 수집 시스템 개선; 포양현 지역 가정에 하수배관 직접 연결; 농촌지역에 소규모 폐수 수집 및 처리시설 건설
- 고체폐기물 관리 개선: 두창(Duchang)현, 위강(Yugan)현, 징안(Jing'an)구, 상리(shangli)현의 폐기물 수집 및 수거 시스템 개선
- 사업시행 지원: 사업시행 기관이 사업의 조정·관리·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전반적인 역량강화 지원

14

다르에스살람 도시교통 개선 프로젝트
Dar es Salaam Urban Transport Improvement Project

사업 승인	2017. 3. 8
사업비	• 총 사업비 : 4억 5,800만 달러 • 차용 금액 : 4억 2,500만 달러 • 차용 기관 : 탄자니아 정부
금융 제공방식	IDA 신용
사업 실행기관	탄자니아 국가도로청(TANROADS)
사업 완료 예정일	2023. 12. 31

사업 목적

- 다르에스살람 사업대상 구간의 이동성, 접근성, 안전 및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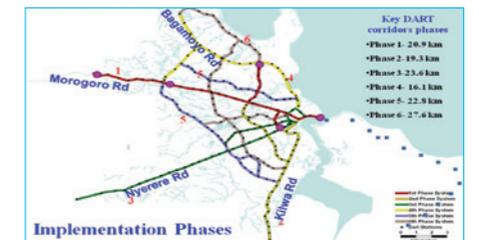
사업 분야

- 도시교통 100%

사업 구성

- 다르에스살람의 3, 4단계 BRT 사업 추진: 1) BRT 운영 준비, 2) 요금수납 시스템 개선, 3) BRT 구간의 교통관리 개선, 4) 통합적 대중교통중심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시행
- 우봉고(Ubungo) 교차로 개선 및 1단계 BRT 사업구간의 도로안전 인프라 보완: 1) 우봉고 사거리의 안전성 향상, 2) BRT 노선 정류장과 우봉고(Ubungo) 상향선 버스터미널 통합, 3) BRT 구간 인근 도로 안전 향상(Kimara-Mbezi 구간)
- 제도강화 및 개혁, ICT 혁신, 안전망 구축, 교통연구 수행: 1) 사업시행 관계 부서의 제도 강화, 2) 다르고속교통청(Dar Rapid Transit Agency, DART) 개편 및 다르에스살람도심교통청(Dar es Salaam Urban Transport Authority, DUTA) 신설, 4) 안전망과 영향평가 시범 도입, 5) 대중교통시스템의 ICT 혁신 및 오픈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6) 탄자니아 건설교통통신부(MoWTC) 관리감독 역량 강화, 7) 교통연구, BRT 통신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 지원

다르에스살람 BRT 네트워크



15

도시와 농촌 연계성 개선 프로젝트

Rural and Urban Access Improvement Project

사업 승인	2017. 3. 6
사업비	• 총 사업비 : 9,680만 달러 • 차용 금액 : 9,680만 달러 • 차용 기관 : 니카라과 정부
금융 제공방식	IDA 신용
사업 실행기관	니카라과 교통인프라부, 도로관리기금(FOMAV)
사업 완료 예정일	2022. 6. 30

사업 목적

- 주요지방의 시장과 상업지와 도시 중심지 간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연결성 확대
-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사업 분야

- 지방 및 도시간 도로 및 고속도로 88%, 공고행정-교통 3%, 도시교통 9%

사업 구성

- 도로인프라 개선: 1) 마나구아와의 도시연결성 개선-약 19.8km 구간의 도로개선, 대상지역 범위는 마나구아, 티피타파, 시우다드, 산이노, 마티에르 시장부, 2) 지방도로 개선-전 계절 이용, 홍수 등 기후문제에 회복력 강화. (특히 여성을 위한) 단기 일자리 창출과 기술훈련 기회로 빈곤 감소, 3) 도로 자원 관리-지방과 연결성을 지속가능하게 개선하여 교통비 부담을 감소, 4) 도로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기후변화야 취약한 30개 사이트 중 5 곳을 선정하여 사업수행
- 도로안전: 1) 사고위험지점 감소-개선사업이 미추진된 25개 지점 중 12곳의 개선 사업 수행, 2) 도로안전관리 역량강화-니카라과 도로안전 전략 2013-2018 시행 지원, 도로안전관리 역량강화
- 제도강화 및 사업시행 지원: 교통인프라부와 도로관리기금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운영, 사전 영향평가, 모니터링, 사업결과 평가, 감사, 여성 일자리 활동 지원 등을 위한 기술 및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와 기술연구 강화
- 즉각적 대응체계: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고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니카라과 정부가 위기발생 시 본 사업 예산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 설정

01

지역 인프라 개발 펀드 프로젝트

Reg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 Project

사업 승인	2017. 3. 22
사업비	• 총 사업비 : 4억 600만 달러 • 차용 금액 : 1억 달러 (세계은행 1억 300만 달러, 스위스경제부(SECO) 300만 달러) • 차용 기관 : 인도네시아 정부
금융 제공방식	AIIB 융자
사업 실행기관	PT. Sarana Multi Infrastruktur(PT. SMI)
사업 완료 예정일	2020. 12

사업 목적

- 주지방정부가 기본 인프라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AIIB, 세계은행 및 중앙정부의 기금을 연계하는 체계로서 지역인프라개발펀드(Red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 RIDF)를 마련하고 운영을 지원
- RIDF는 PT. SMI(정부 소유의 인프라 금융제공 기업, 2009년 설립)에서 운영하며, 지방정부가 직접 금융을 융자받을 수 있어 중요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사업 분야

- ① 도시교통, ② 도시 상수 공급 및 위생 ③ 배수, 홍수 및 위험 요소 관리, ④ 고품폐기물 관리, ⑤ 빈민가 개선 및 저렴한 주택 공급

사업 구성

- PT.SMI에 RIDF 자금 지원: 초기에는 구 단위(kota 혹은 kabupaten)의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승인 및 금융지원 역량을 높이면서 점차 시나 도 규모의 지역적 혹은 지역간 사업으로 확대 예정
- RIDF 프로젝트개발시설(Project Development Facility, PDF) 설립: 1) RIDF 하위 프로젝트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하위 프로젝트 발굴, 계획 및 준비를 지원, 2) 기술, 금융, 경제, 사회 및 환경 측면에서 하위 프로젝트 승인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지원, 3) 지방정부 대상 교육훈련 제공

02

댐 운영개선 및 안전프로젝트 II

Dam Operational Improvement and Safety Project Phase II

사업 승인	2017. 3. 22
사업비	• 총 사업비 : 3억 달러 • 차용 금액 : 1.25억 달러 (세계은행 1.25억 달러) • 차용 기관 : 인도네시아 정부
금융 제공방식	AIIB 융자
사업 실행기관	인도네시아 공무주택부(MPWH), 15개 지역 관청(Balai)의 수자원 부서
사업 완료 예정일	2022. 11

사업 목적

- 댐 안전프로젝트(1994-2003), 댐 운영개선 및 안전프로젝트 (2009-2016)의 후속 사업으로 댐과 수원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의 연속

사업 분야

- 수자원 관리, 안전

사업 구성

- 댐 운영 개선과 안전 관련 작업 및 연구: 총 140개 댐 재건을 지원하여 본래의 기능을 되찾고 국내외 설계기준에 적합한 정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며 1)수문(水文) 관련 특수연구, 2) 재건사업 관련 사전조사와 설계, 관리감독과 품질관리, 3) 토목이나 유체역학 등 댐의 안전작업 추진, 4) 기본적인 댐안전 시설을 설치 혹은 재건하여 안전 모니터링, 홍수 예측 및 대응 강화, 5) 수문(水文)-기상학적 모니터링 운영을 위한 시설 설치, 재건 혹은 업그레이드 등 수행
- 운영관리 개선 및 역량강화: 댐의 활용과 안전 등 운영과 관련한 요소를 지원하며 1)자원관리 시스템 마련, 수요 중심의 예산 편성 등 각종 전략연구, 2) 운영관리 계획 수립, 3) 서비스 기준 마련을 위한 계획연구 마련, 4) 위기대응계획 마련, 5) 시민 참여 프로그램 수행, 6) 인적 자원 개발 및 댐안전 제도 역량강화 등 수행
- 저수지 침전작용 완화: 종합적인 침전작용관리 프로그램 향상을 위하여 1) 저수지 침전작용에 대한 연구 조사, 2) 시정조치 작업, 3) 예방조치 작업
- 댐 안전제도 개선: 수자원 관련 제도구축 및 혁신을 위한 정부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1) MPWH의 전국 대규모 댐 규제 및 관리역량 강화, 2) 저수지 생태환경과 재건작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3) 국가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4) 감사 및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저수지의 안전 향상, 5) 댐기술센터 개발 지원
- 사업관리: 1) 공무부 내 사업관리 부서에서 사업실행, 모니터링, 평가, 조달, 재정, 안전 모니터링 관련 지원을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제공, 2) 댐안전 부서에 감독과 효과적인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3) 유역에 위치한 기관들에게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4) 환경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 국가댐안전 검토위원회, 국가수자원추진위원회 운영, 5) 사업 시행 과정에서 증가할 중앙사업 관리 부서와 사업시행부서의 운영비 지원

떠오르는 인도의 스마트 도시

자이푸르 · 수라트

[글] 임재빈 책임연구원 jb.lim@lh.or.kr
LH 토지주택연구원

1. 자이푸르(Jaipur)

개요

- 인도 최초의 계획도시로, 라자스탄 주의 주도이자 관광도시
 - 라자스탄주의 주도 자이푸르는 인구 약 305만 명(2011년), 면적 484km² (서울면적의 80%)이며 주요 산업은 관광, 무역, 생활용품과 공예품, 아세틸렌 가스 등
 - 1인당 GDP는 7,868달러이며, 라자스탄 주 GDP의 24.5%를 생산함
 - 18세기 인도 최초의 계획도시로 건설되었으며,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 시가지 안에 옛 천문대, 고궁 등 유적이 많아 관광지로 유명함

그림1 자이푸르의 위치



자료 구글맵

그림2 자이푸르 전경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그림3 핑크색으로 도색한 하와마할



자료 자이푸르 도시공사 홈페이지

그림4 수중궁전



자료 <https://tourpackagesforgoldentriangle.wordpress.com/tag/golden-triangle-trip>

- 2006년 인구 232만 명이 5년 만에 305만 명으로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임
- 철도와 고속도로 뿐 아니라 BRT, 도시철도가 운영되어 교통 인프라 수준이 높음

역사 · 기후와 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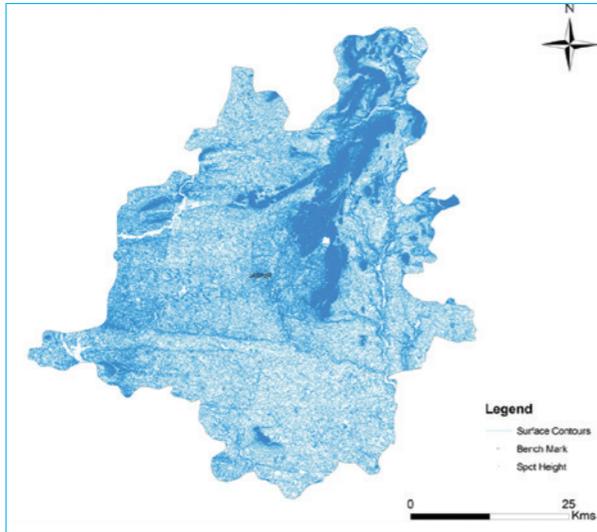
■ 역사와 기후

- 1726년 초 제후국 국왕 마하라자 자이싱에 의해 성벽도시가 계획도시로 건설됨
- 1876년 영국 왕자(훗날의 에드워드7세) 방문을 계기로 건물들을 핑크색으로 도색한 후 핑크 시티로 불리게 됨. 현재도 규제를 유지하는 중
- 1956년 라자스탄주의 주도가 되었으며 관광지로서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의 요지로 성장함
- 평균기온은 섭씨 36도로, 고온기(5월~10월)은 30도 후반을 유지하며 저온기(12월~1월)에도 10도~24도를 정도임
- 연강수량은 약 635mm로 적은 편인데 변동이 심하고, 7월~8월에 몬순으로 400mm 이상이 내림

■ 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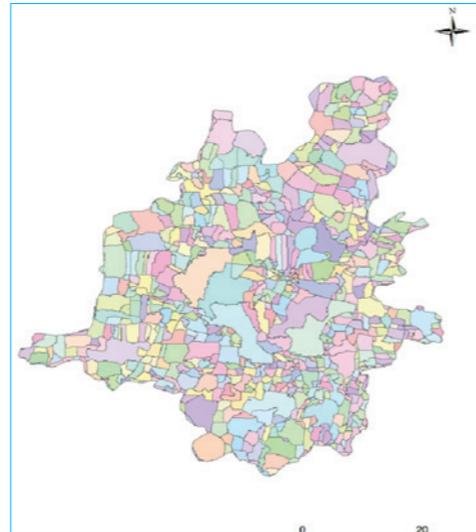
- 남북으로 뻗은 산맥이 도시 중심까지 연결되며, 산맥 남쪽 기슭에 최초의 도시였던 성벽도시가 입지함
 - 자이푸르 시가지 북쪽과 동쪽에 아라발리 산맥이 있으며, 남쪽과 서쪽은 넓은 평원을 이루고 있어 시가지가 서남쪽으로 확대하고 있음
 - 하천은 산맥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흐르다가 동남쪽으로 흘러나가나 큰 하천은 없음

그림5 자이푸르 도시권의 지형



자료 자이푸르 스마트도시 제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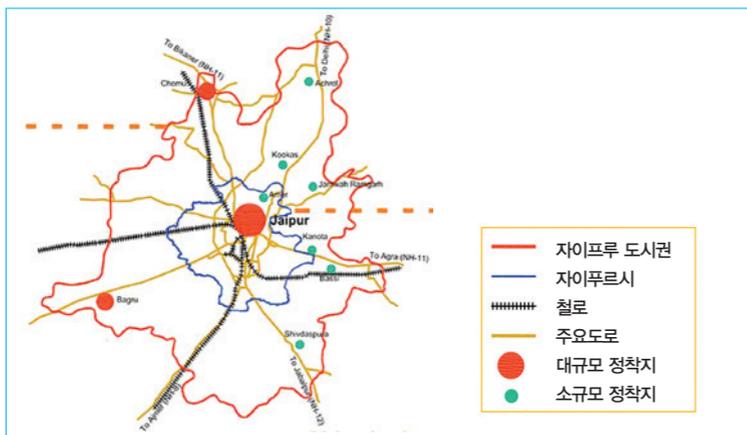
그림6 자이푸르 도시권의 91개 구



자료 자이푸르 스마트도시 제안서

- 자이푸르 도시권¹ 전체는 91개의 구(Ward)로 구성되어 있으며, 68개 구가 자이푸르 도시지역(Municipal Zone)에 속함
- 5개 방향으로 뻗은 고속도로와 4개 방향으로 뻗은 철도가 있으며, 자이푸르 외에 초무(Chomu)와 배그루(Bagru)가 자이푸르 도시권을 이루고 있음

그림7 자이푸르 도시권의 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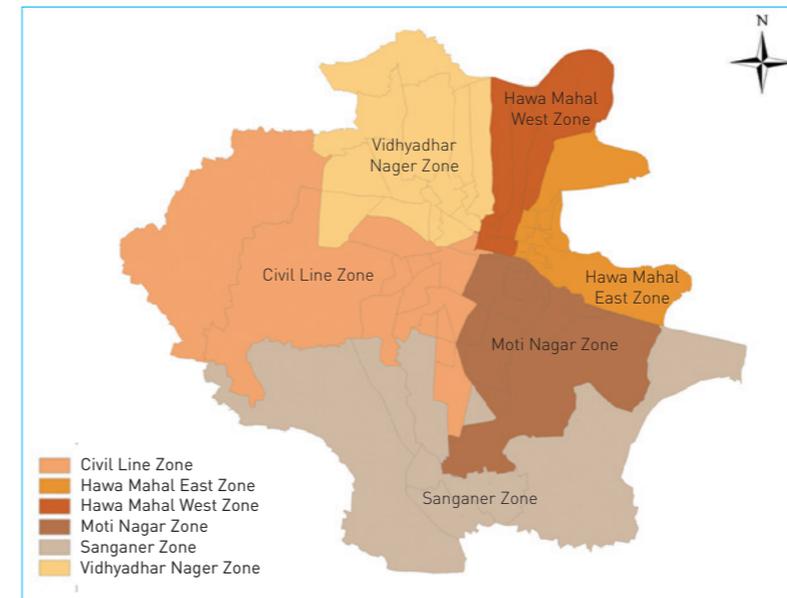


자료 자이푸르 스마트도시 제안서

1 자이푸르의 행정경계는 여러 자료에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선, 라자스탄 주 내의 경계로 자이푸르 지역(도시권) 경계가 있으며, 도시권 내에 자이푸르 시가지지역이 있다. 여기에 자이푸르 개발공사가 관할하는 경계, 사실상의 자이푸르 시청인 자이푸르 도시공사가 관할하는 경계가 모두 다르다. 다만 시가지지역과 개발공사 경계, 도시공사 경계는 면적이나 범위에 큰 차이는 없으므로 분고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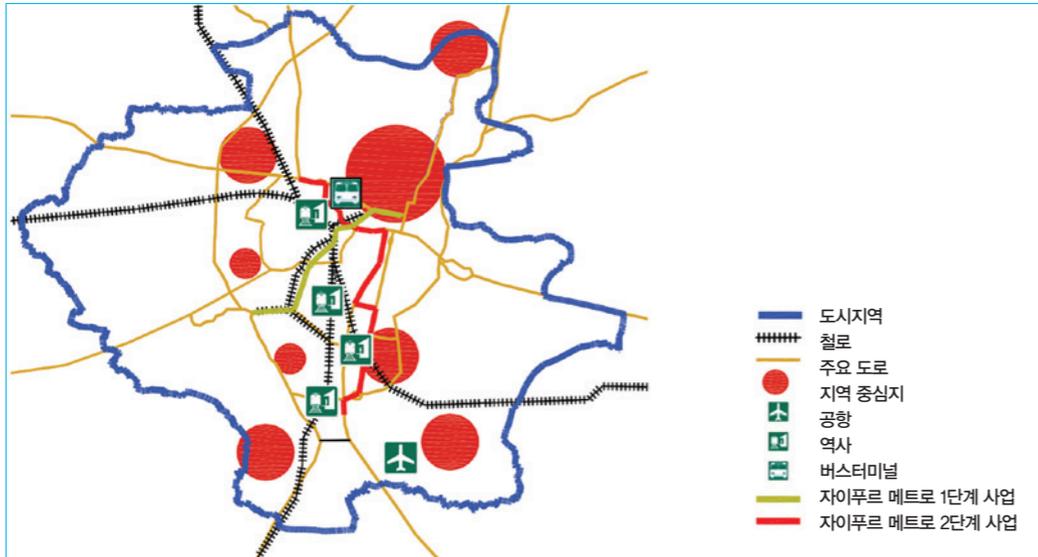
- 자이푸르 도시지역은 자이푸르 개발공사(Jaipur Municipal Corporation, JMC)가 관리하며, 6개 구역(Zone), 68개 구로 구성
 - 시빌라인 구역(15개 구), 하와마할 이스트 구역(11개 구), 하와마할 웨스트 구역(9개 구), 모티 나가르 구역(11개 구), 상가네르 구역(7개 구), 비다다르 나가르 구역(15개 구)
- 도시지역은 1개 도심과 7개 부도심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철로를 따라 남북으로 놓여있음
 - 동편의 도심과 부도심은 델리 우회도로를 통해 연결되며, 서편의 부도심들은 서로간에 C-우회도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음
- 도시철도와 BRT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개통하여 운영 중
 - 도시철도는 4량 1편성 중전철이며 향후 6량 1편성으로 변경 가능함. 2010년부터 Phase 1A(9.6km, 9개역)가 건설되어 현재 운영 중이며, Phase1B(2.3km)는 2018년 개통 예정, Phase2는 2021년 개통 예정임
 - BRT는 전용도로 및 전용 승차장, 입체 교차로 등을 갖추고 있는 상급 시스템임. 2006년부터 건설되어 2010년 1단계 일부 구간이 개통됨. 현재 추가 건설 중임

그림8 자이푸르 도시지역의 구역 구분



자료 자이푸르 스마트도시 제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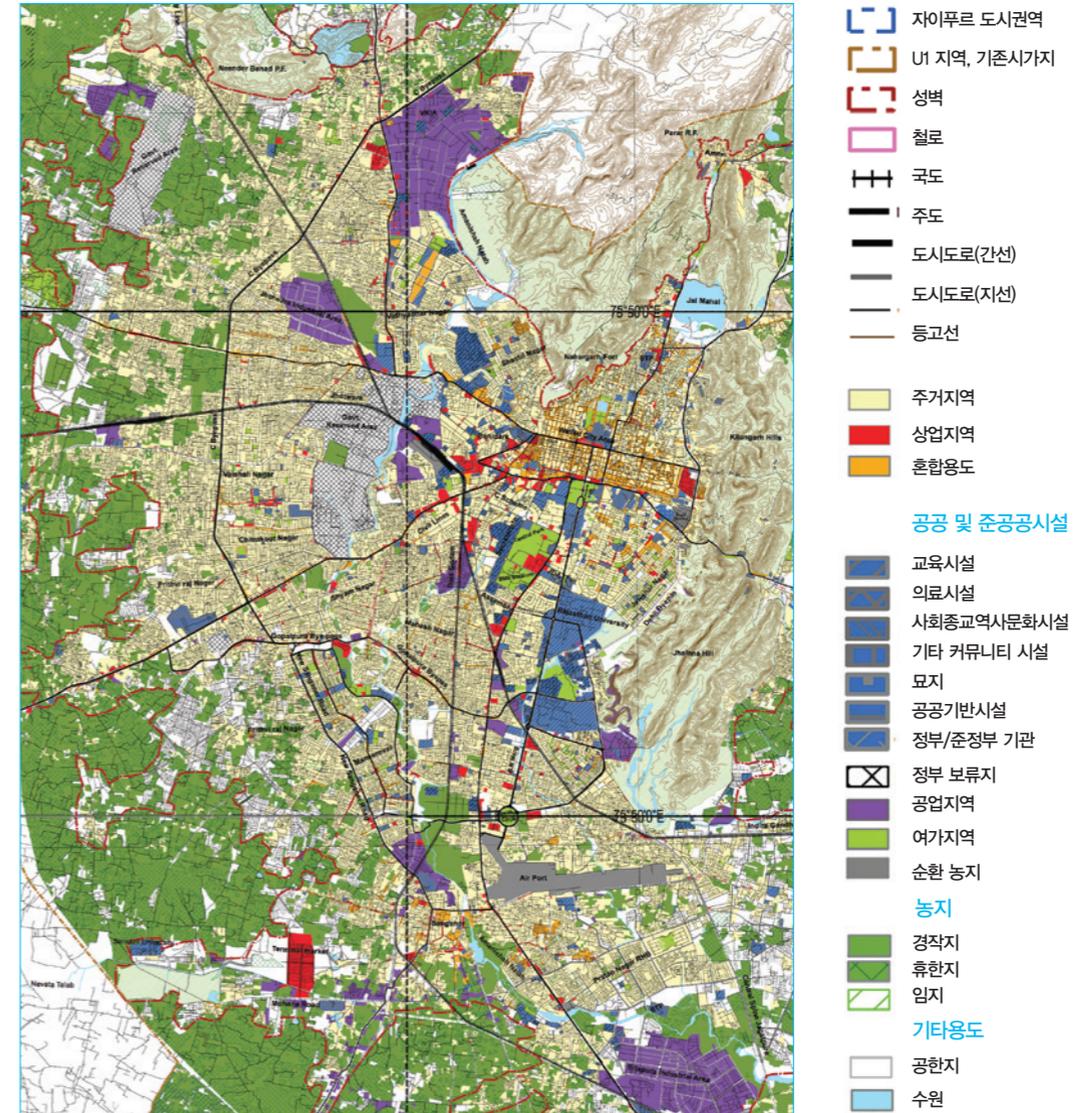
그림9 자이푸르 도시지역의 공간구성



자료 자이푸르 스마트도시 제안서

- 도시지역 남단 상가네르 구역에는 공항이 입지하며 향후 도시철도로 연결될 계획임
- 주요 시가지지역은 동쪽의 성벽도시로부터 남쪽과 서쪽으로 시가지가 확장하고 있음
 - 하와마알 웨스트 구역 남단에 위치한 성벽도시는 유적, 관광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격자형 도로망을 따라 혼합용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성벽도시 남쪽 모티 나가르 구역에서 대형 공원과 라자스탄 대학으로 녹지축을 이룸
 - 성벽도시 서쪽 시빌라인 구역에 기차역(자이푸르 역)이 입지하고 상업지역이 집중하고 있으며, 그보다 서쪽으로는 정부 유보지(군 주둔지)가 넓게 펼쳐져 있음
 - 기차역을 중심으로 북에서 남으로 비쉬와카르마(VKIA), 조트와라, 시타푸라 등 5~6개의 산업단지가 축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음
 - 도시 남쪽에 공항과 버스터미널이 있으며, 터미널을 중심으로 시장이 넓게 형성되어 있음
 - 기타 지역은 주거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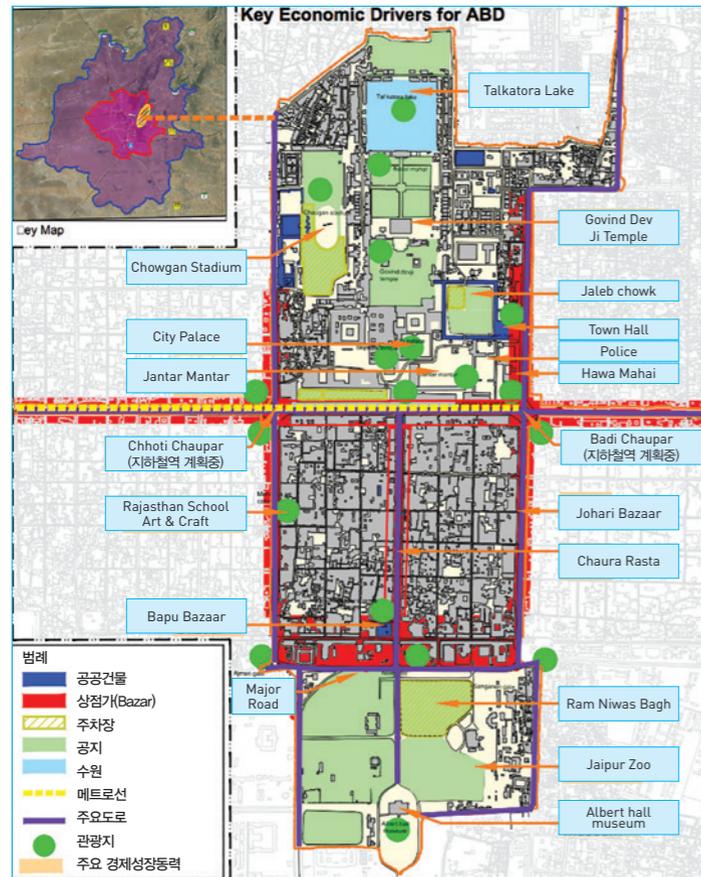
그림10 자이푸르 시가지지역 토지이용 현황도



자료 자이푸르 개발공사 홈페이지

- 하와마할 웨스트 구역 남단에 CBD인 성벽도시가 위치함
 - 자이푸르 인구의 5.5%가 거주하며, 면적은 자이푸르의 0.5%를 차지함. 도시의 관광중심지로서 상업 활동의 60%를 차지함
 - 세 개의 구로서, 북측은 궁전과 호수, 중앙은 구시가지, 남측은 공원으로 구성됨
 - 인구밀도는 597명/ha (자이푸르 전체는 67명/ha)

그림11 성벽도시의 내부 구조



자료 자이푸르 스마트도시 제안서

그림12 성벽도시 내 모습



자료 자이푸르 스마트도시 제안서

개발 프로젝트

■ 도시철도

- 4량 1편성 중전철로 Phase1B(2.3km)와 Phase2(23km)가 추가 건설 중임
- 자이푸르 도시철도공사는 향후 자이푸르 도시권의 인구를 2021년 640만 명, 2031년 930만 명으로 예상하고 Phase2를 지속 추진
- 지하철간보다는 고가 중심으로 건설하며, 도로 중심에 고가는 3m 지름의 기둥을 세워 토지 소모를 최소화함

그림13 도시철도 운행모습



자료 자이푸르 도시철도 공사 홈페이지

그림14 도시철도 승하차 모습



자료 자이푸르 도시철도 공사 홈페이지

그림15 자이푸르 도시철도 노선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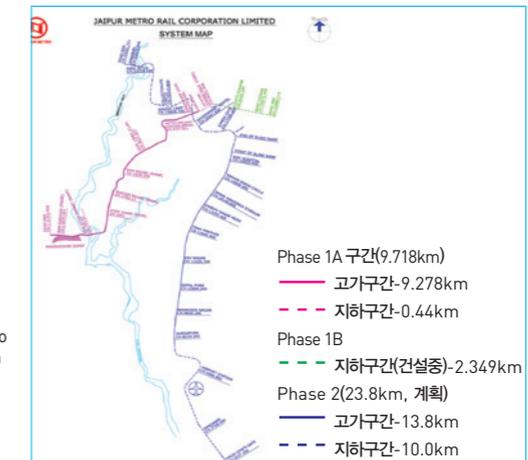


노선 1
[SITAPURA IND. AREA to AMBABADI] = 23.099km

노선 2
[MANSAROVER to BADI CHOPAR] = 12.067km

자료 DMRC, 2012, Detailed Project Report Jaipur Metro (Phase 2)

그림16 자이푸르 도시철도 노선 구성도



자료 DMRC, 2012, Detailed Project Report Jaipur Metro (Phase 2)

표1 자이푸르 도시철도 노선계획

구성	지하구간	고가구간	총연장
Phase1-동서회랑	2.849km	9.13km	11.979km
Phase2-남북회랑	5.095km	18.004km	23.099km
합계	7.944	27.134km	35.078km
역개수	8	23	31

자료 자이푸르 도시철도 공사 홈페이지

■ BRT

- 2006년부터 42km 길이의 1단계 사업 착수
 - 1단계는 2개의 노선으로 시카르(Sikar)-통크(Tonk) 도로간 남북회랑과 아즈메르(Ajmer)-델리(Delhi) 도로간 동서 회랑으로 구성됨
- 남북회랑은 총연장 26km로 두 개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음
 - Package IB는 C-우회도로에서 파니 페크(Pani Pech)간을 연결하며 2010년 7월 개통하였음
 - Package II는 파니 페크-락스미 맨디르간, 사카르 바완-상가네르간 및 램 바흐 환상선 및 통크 도로에 설치되며, 일부 구간이 BRT 전용 고가도로로 건설될 계획
- 동서회랑은 한 개의 패키지로 구성됨
 - Package III은 알렛 나가르-가버먼트 호스텔간 및 C-우회도로, 퀸스로드, 소달라에 설치되며 일부 구간이 BRT 전용 고가도로로 건설될 계획

그림17 자이푸르 BRT



자료 자이푸르 개발 공사 홈페이지

그림18 자이푸르 B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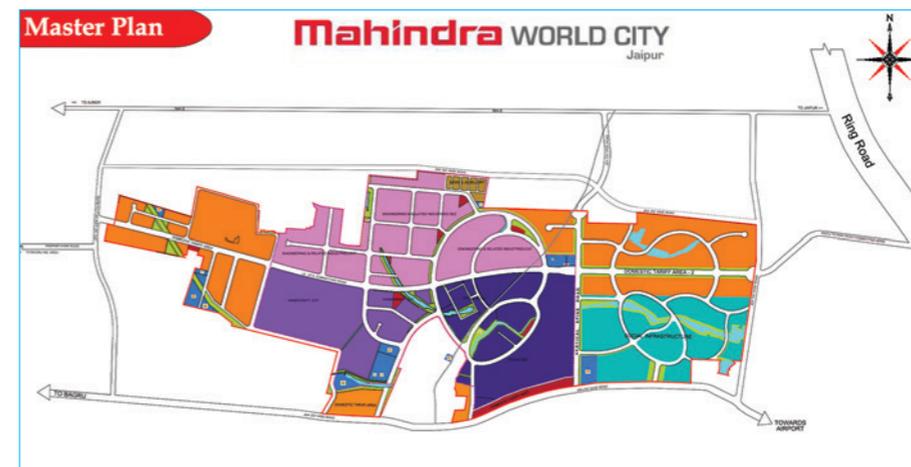


자료 자이푸르 개발 공사 홈페이지

■ 마힌드라 월드시티 자이푸르

- 인도 유수 기업인 마힌드라그룹과 라자스탄 주정부 출자회사 RIICO (Rajasthan State Industrial and Investment Corporation)가 PPP 방식을 통해 2007년부터 개발을 추진한 신도시
- 자이푸르 열차역에서 서남쪽 21km 지점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12km²로, 이 중 8km²는 경제자유구역(SEZ)으로 지정됨
- 2015년 아시아 최초로 C40²인증을 받은 프로젝트로 저탄소 도시로 계획되었음

그림19 마힌드라 월드시티 자이푸르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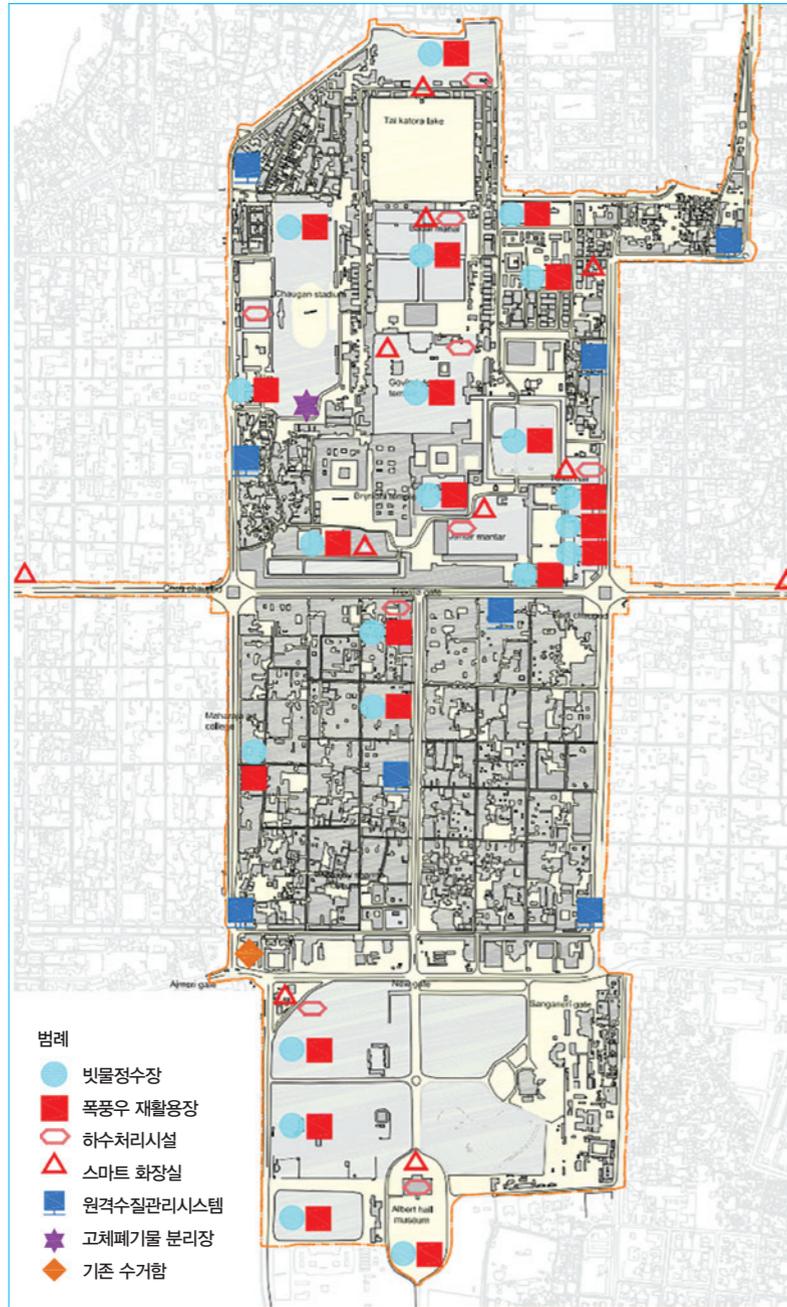
자료 마힌드라 월드시티 홈페이지

자이푸르 스마트도시 계획

- 핵심 제안은 성벽도시 정비로, 관광시설 정비, 교통인프라 개선, 물순환 시스템, 에너지 소비절감 체계 등을 설치할 계획임
 - 물 순환을 위한 하수와 빗물재활용, 스마트미터, 원격수질관리시스템, 스마트 화장실 등 도입
 -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해 태양광패널 설치, 기온저감 녹지회랑, 지하보도 네트워크 등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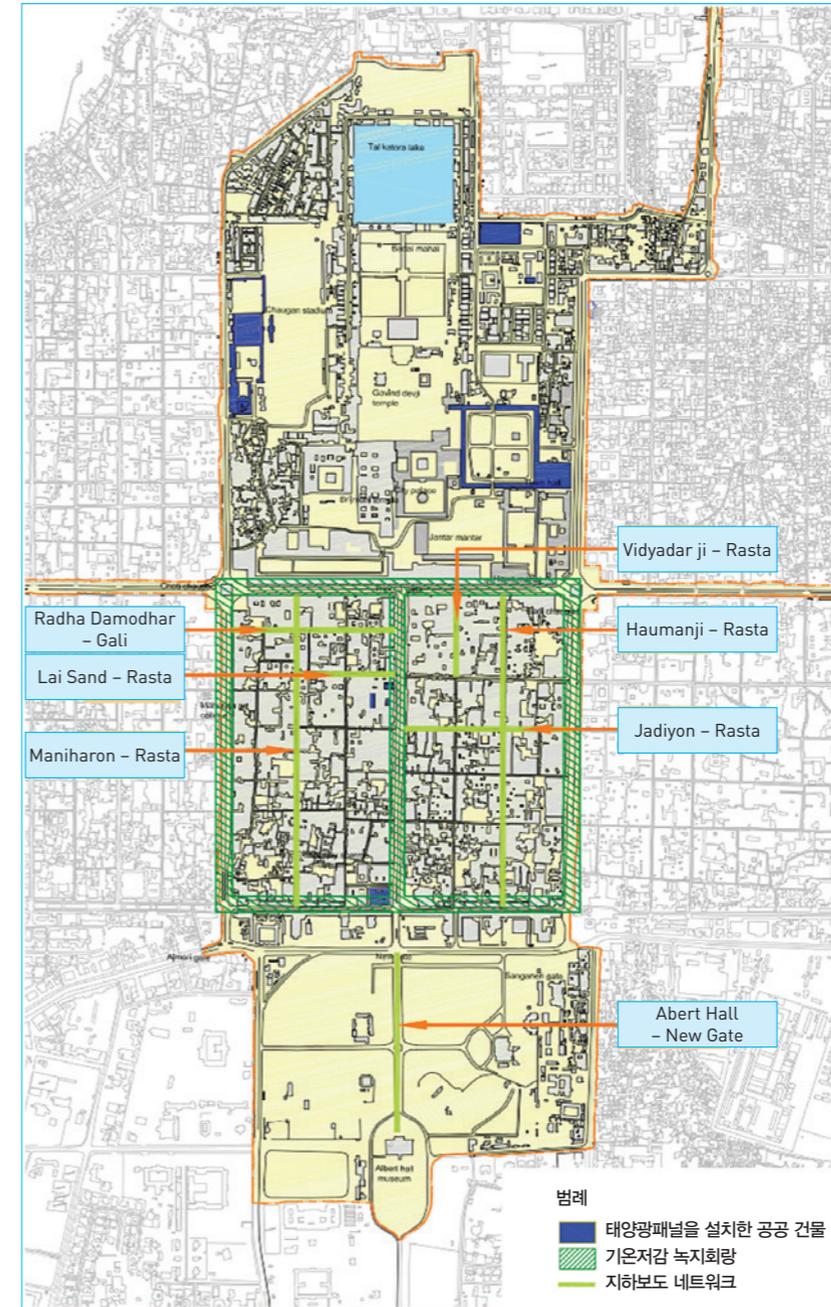
² C40는 전세계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는 도시들이 2005년 발족한 세계 대도시 협의체임

그림20 스마트도시 물순환시스템 계획



자료 자이푸르 스마트도시 제안서

그림21 스마트도시 에너지절감시스템 계획



자료 자이푸르 스마트도시 제안서

주요 강점과 약점

■ 강점

- 세계 최대의 보석 가공지로 세계 에메랄드의 90% 생산하며 인도 보석 수출의 80%를 차지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Jantar Mantar, Amer Fort)하고 있으며, 델리-아그라-자이푸르 황금삼각 관광지대를 이루고 있음
- 바라나시와 함께 인도 최초의 유네스코 지정 창조도시 네트워크 지정
- DMIC 노선의 39%를 차지하는 라자스탄주의 주도로써 델리와 250km 거리
- 정치적 안정성에 기반을 두고 3년 연속 GDP 성장 12% 초과(인도 평균 7%)
- 도시 인프라의 적극적 투자
 - 쓰레기 에너지 및 퇴비화 시설, BRT(138km), MRT(44.16km), 전기인력거 등
- CISCO, CII, C40 네트워크, 노팅햄(Nottingham) 등과 협력하여 스마트 도시 추진

■ 약점

- 극서의 여름 날씨(섭씨 47~48)로 인해 국내외 관광객 불편
- 여전히 전통산업이 도시 경제에서 지배적이고, 지식기반산업은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
- 화석연료에 100% 의존하고 있으며 근처 하천의 수자원이 결여되어 있음
- 행정 위계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지방 행정이 복잡한 구조를 나타냄
- 폐기물 수집 및 수송시스템의 부족, 기준치의 3배 가까이 되는 미세먼지
- 도심지의 교통 체증(성벽도시내 평균 속도 16km/h), 보행시설의 부족, 배리어 프리 미적용, 장거리 통근, 주차장 부족, 장시간의 버스 대기시간

인프라 현황

지표	자이푸르(JMC구역)	라자스탄주(도시지역)	인도(도시지역 평균)
상수도 보급률(%)	88.85	75.40	84.14
전기 보급률(%)	97.82	93.88	92.68
화장실 보급률(%)	89.45	73.67	72.57
인터넷연결컴퓨터 소유 가구비율(%)	12.42	6.09	8.27
인터넷미연결컴퓨터 소유 가구비율(%)	13.84	9.75	10.40
핸드폰보급률(%)	66.12	66.20	64.33
주택 자가율(%)	77.87	80.86	69.16

주 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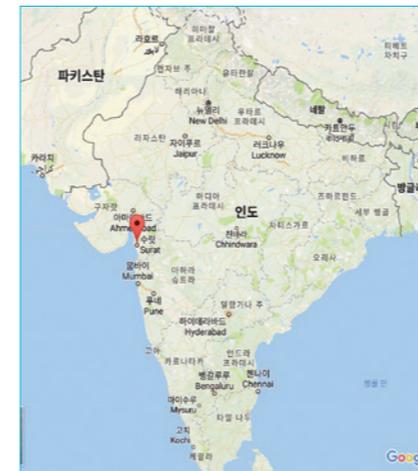
2. 수라트(Surat)

개요

■ 인도 8대 도시이자, 구자라트주 2번째 대도시로, 다이아몬드 산업 중심도시

- 인구는 약 447만 명(2011년), 면적은 327km²(서울의 54%)
 - 인구 기준으로 인도 내 8위이며, 구자라트내 아메다바드에 이어 2위의 거대 도시
 - 내륙 깊숙이 연결된 파피강이 아라비아해로 흘러나오는 지점에 위치하며, 과거 84개국 이상의 선박이 기항하는 국제항으로 유명했음
 - 주요 산업은 다이아몬드 세공업, 섬유,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 인도 다이아몬드 세공의 90%를 차지하며, 다이아몬드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신도시인 드림시티(Dream City)를 건설중 임
 - 마이크로소프트 시티넥스트(CityNext), IBM Smarter Cities 등 세계 우수 IT 기업에 의한 스마트도시 사업대상으로 선정됨
- 최상위급의 행정서비스와 청결도를 자랑
 - 도시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도시행정의 질적 수준이 높음
 - 인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며, 최근까지도 각종 도시청결 순위 조사에서 꾸준히 5위 안에 랭크됨(2017년 5월 인도 도시개발부 조사결과 4위)

그림22 수라트의 위치



자료 구글맵

그림23 구자라트주 내의 수라트



자료 <http://www.mapsofindia.com/india/where-is-surat.html>

역사 · 기후와 공간구조

■ 역사와 기후

- 1500년대 초반 힌두인들에 의해 수라푸르라는 이름으로 건설되어 무역중심지로 발전
- 서양인들이 유입한 후에도 무역항으로 번성하였으나 1668년 봄베이(뭄바이)를 양도받은 영국이 동인도회사 본사를 옮겨간 후 쇠퇴하기 시작, 한때 80만 명이던 인구가 8만 명으로 감소함
- 1759 영국이 무굴제국으로부터 도시 통치권을 획득하여 영국 보호령이 되었으며, 1842년 영국 식민지로서의 인도에 병합됨
- 1994년 폭우로 크게 범람하고 페스트가 유행해 수천 명이 감염, 100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40여만 명의 주민이 탈출함. 이후 도시 청결화 운동이 추진되어 인도 내 최상급의 청결도시가 됨
- 고온기(3월~6월)는 섭씨 37~44도를 보이며 저온기(12월~2월)에는 23도 정도임
- 연강수량은 약 1,143mm로 적지 않은 편임. 6월~9월에 몬순으로 1,100mm 가량이 집중됨

■ 공간구조

- 따피강이 남서 방향 아라비아해로 흘러나가는 평탄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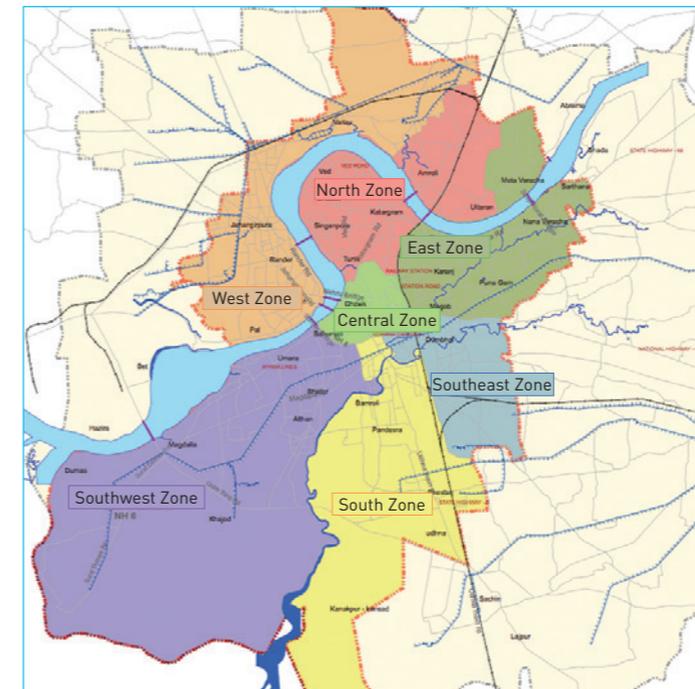
그림24 수라트와 주변지역



자료 수라트 도시개발공사

- 강 하구로부터 약 25km지점까지의 구간에 수라트 시가지가 형성되어 수라트 도시공사(SMC: Surat Municipal Corporation)에 의해 관리
- 도시공사 관리지역 327km²를 포함하여, 주변까지 총 1,300km²의 지역이 수라트 도시개발공사(Surat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에 의해 관리
- 행정구역은 7개 구역(Zone), 33개 구로 구성되며 중앙 구역(Central Zone)을 중심으로 북 구역, 동 구역, 남동 구역, 남 구역, 남서 구역, 서 구역으로 구분됨
- 중앙 구역에는 성벽도시(Walled City)가 존재하여 수라트 도시공사 및 전통적인 주요 시설들이 입지함
- 성벽도시 동편에는 기차역이 입지하며 경찰서, 병원, 공항, 대학 등의 현대적 주요시설은 남서 구역에 입지
- 인구는 절대다수가 중앙구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 밀도 측면에서는 중앙구역과 동 구역에 집중되어 있음

그림25 수라트 행정구역 등 현황도



자료 수라트 도시 공사

그림26 수라트 주요 시설 및 인프라



자료 수라트 도시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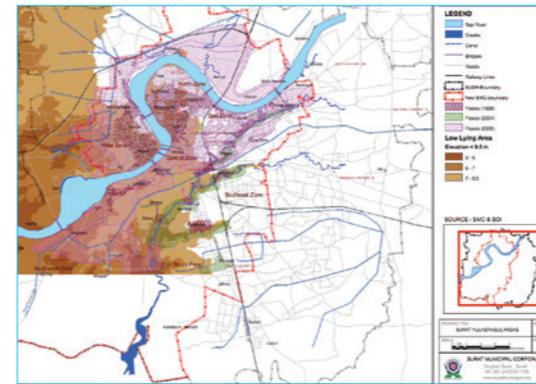
- 토지이용은 중앙 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역이 60~70%가 농지이며, 주거용지는 5~10%, 산업용지는 1~3%에 불과함. 상업용지는 1% 미만
- 중앙 구역은 주거용지 40%, 산업용지 4%, 상업용지 3%이며 농지는 12%
- 북쪽의 환상도로를 따라 산업회랑이 설정되어 있으며, 서쪽 바닷가와 중앙구역 남쪽의 남 구역에 넓은 산업지역이 계획되어 있음(그림 27) 보라색 지역 참조)
- 시 전역의 해발고도가 13미터 이하이며, 시가지의 절반이 10미터 이하로, 2006년 대홍수로 시가지 대부분이 수해를 입기도 하였음
- 특히 중앙구역 북쪽과 서북쪽 지역은 인구 집중지역이면서 홍수도 잦음
- 방사환상형 도로망, X자형 철도와 운하가 건설되어 있음
- 시가지 동쪽에 남북으로 뻗은 8번 고속도로, 서쪽에 서남쪽으로 뻗은 6번 고속도로가 있으며, 도시 내도 45미터 광로가 다수 분포하고 있음
- 대중교통 교통망으로 시영버스(27개 노선)와 BRT가 운영 중이며, 시영버스가 동서방향, BRT가 남북 방향을 담당함. BRT는 Route 1만 개통한 상태로 추후 Route 2 및 Route 3이 개통예정

그림27 수라트 도시개발공사 개발계획 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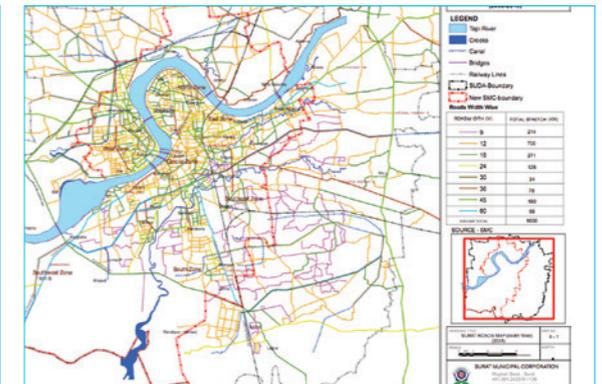
자료 수라트 도시개발공사

그림28 수라트 지반고 및 홍수 피해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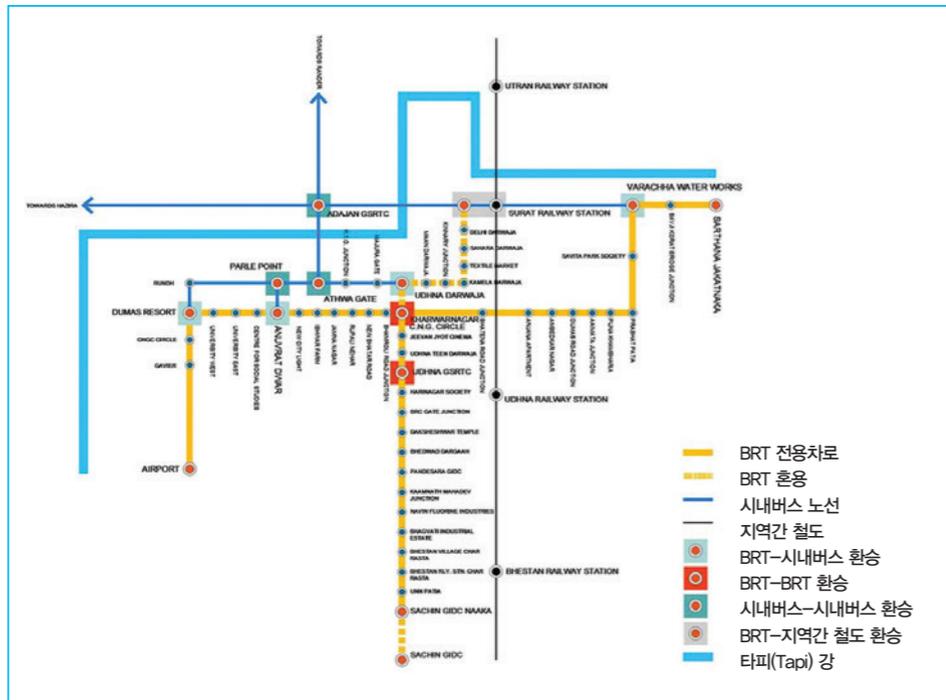
주 밤색은 해발고도 9.5m 이하인 곳이며, 사선표기는 홍수 발생지역 (보라-2008, 녹색 2004, 진보라-1998)
자료 수라트 도시개발계획, 2008-2013

그림29 수라트 도로망(2001)



자료 수라트 도시개발계획, 2008-2013

그림30 대중교통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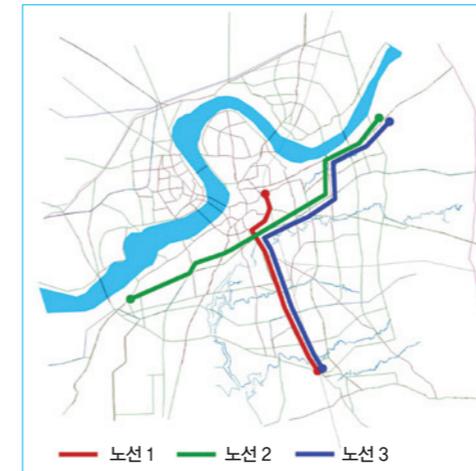
자료 수라트 도시 공사

개발 프로젝트

■ BRT(Sitilink)

- 2014년 1월 Phase 1 (Route 1, 29.7km) 개통 이후, Phase 2 (58km) 추진 중
- Phase 2는 기존의 운하(Citylight Canal) 좌우 변에 각각 18미터 너비로 전용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며, 도시전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Phase 3 및 Phase 4도 제안하고 있음
- 신설 도로를 통해 Route 2와 Route 3이 운영예정임

그림31 BRT 노선도



자료 수라트 도시 공사

그림32 Phase 2 예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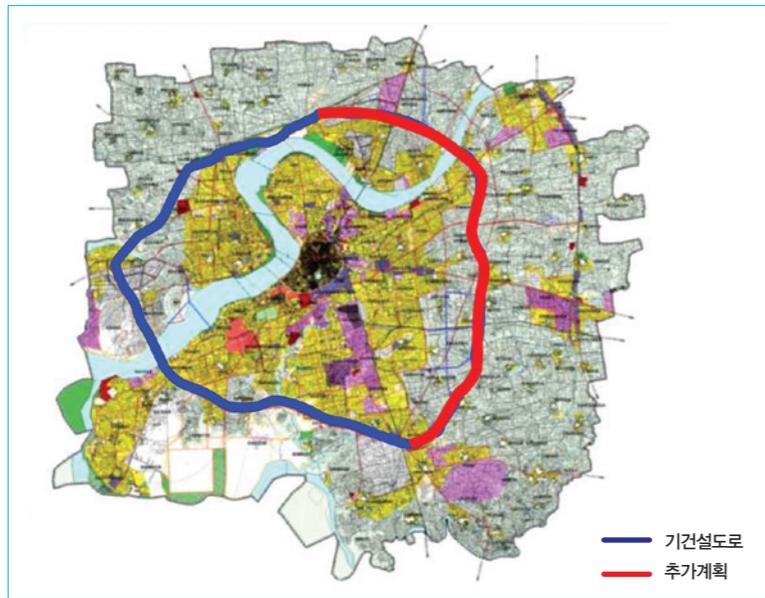


자료 수라트 도시개발공사

■ 환상도로

- 기존의 시가지 서편 고속도로를 연장해 총 연장 66km의 환상도로로 전환하며, 기존 고속도로도 함께 확장해 완성하는 계획임
- 기존 고속도로는 총 연장 37km로, 고속국도인 NH6번과 주 고속도로, 수라트도시공사 건설도로가 연결된 것임
- 1단계로 총 연장 29km의 고속도로를 신설하며, 수라트도시공사와 수라트 도시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함
- 2단계로 기존 37km 구간을 확장하는 한편, 전체 66km 구간 좌우에 폭 7.5미터 서비스 도로 등을 신설함
- 건설비는 도로 좌우로 500미터 너비 주거지역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업필지를 판매하여 충당함
- 고속도로, 서비스도로 건설 외에 용적률을 400%로, 고도제한을 70m로 상향함

그림33 환상도로 현황 및 계획



주 파란색: 기건설도로, 붉은색: 추가계획
 자료 수라트 도시개발공사

그림34 환상도로 구성 계획(단위: 밀리미터)



자료 수라트 도시개발공사

■ 수라트 스마트 도시계획

- 스마트도시 1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라트 도시공사가 추진하며, 동 구역과 동남 구역의 경계지역 8.7km²를 대상으로 스마트도시를 구축함
- 기존 섬유산업 중심지의 재개발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물류센터, 창업센터, 바이오가스 시설, 자동차금지구역, 스카이워크 등임

그림35 사업지역



자료 수라트 스마트도시제안서

그림36 스마트 도시 제안 내용



자료 수라트 스마트도시제안서

■ 드림 시티(Diamond Research and Mercantile City, DREAM City)

- 수라트 서남부 해안가에 8.1km² 크기의 업무지구로 계획되었으며, 구자라트주가 추진하는 3번째 스마트 도시임
- 핵심시설은 다이아몬드 거래소와 섬유대학이며, 업무 및 주거시설, 병원, 호텔 등이 건설됨
 - 기존 뭄바이의 다이아몬드 거래소에 이어 두 번째이며, 거래뿐 아니라 다이아몬드 बैं킹 및 보험 기능을 수행함

주요 특징(SWOT)

■ **강점**

- GDP 성장률이 12~13%를 꾸준히 유지
- 석유, 천연가스 처리 등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여 ONGC, Reliance, ESSAR, Shell 등이 활동
- 인도 최대의 수제 섬유 중심지로 연간 8,200만 달러의 매출. 매년 900만 미터의 직물을 생산하여 인도 폴리에스터 의류 생산의 60%에 기여하며, 800개 이상의 의류도매 기업이 입지
 - 인도 수제 직물의 40%, 전체 직물의 12%, 수제 섬유의 28%를 차지
- 다이아몬드 가공의 허브 지역으로, 세계 다이아몬드 세공의 42%, 인도의 70%를 차지하며, 인도 다이아몬드 수출의 40% 담당
- 상하수도,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GIS 등 인프라가 높은 품질로 제공됨

■ **약점**

- 구자라트 주 내에서 홍수에 가장 취약한 지역
- 섬유와 다이아몬드 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 저숙련 노동 비율이 높고, 소득불균형이 심각
- 취약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부족한 보행 인프라
- 항공 연결성이 미약
- 지식, 연구개발 기능이 약함

인프라 현황

지표	수라트(SMC구역)	라자스탄주(도시지역)	인도(도시지역 평균)
상수도 보급률(%)	80.50	68.78	84.14
전기 보급률(%)	98.88	97.19	92.68
화장실 보급률(%)	93.55	85.17	72.57
인터넷연결컴퓨터 소유 가구비율(%)	5.07	6.38	8.27
인터넷미연결컴퓨터 소유 가구비율(%)	8.12	9.25	10.40
핸드폰보급률(%)	71.42	65.92	64.33
주택 자가율(%)	54.60	72.52	69.16

주 2011년 기준

참고문헌

- DMRC, 2012, Detailed Project Report Jaipur Metro (Phase 2)
- JMC, 2016, 자이푸르 스마트도시 제안서(SCP)
- SMC, 2016, 수라트 스마트도시 제안서(SCP)
- SMC&SUDC, 2008, 수라트 개발계획 2008-2013
- SMC&SUDC, Outer Ring Road Surat PPT
- SUDA, 2013, Initiating Preparation of Revised Development Plan of SUDA-2035 PPT
- 자이푸르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http://transport.rajasthan.gov.in]
- 마힌드라 월드시티 홈페이지[http://www.mahindraworldcity.com]

주목할 도시자료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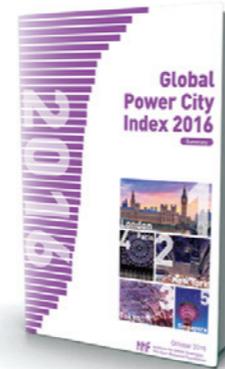
강력하고도 지속가능한 도시가 된다는 것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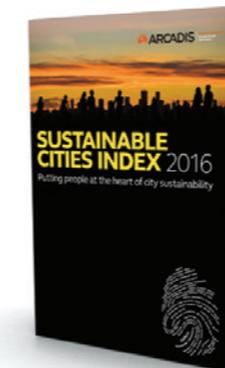
보고서

강력하고도 지속가능한 도시가 된다는 것

[글] 김묵한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Global Power City Index 2016, Institute for Urban Strategies, The Mori Memorial Foundation



Sustainable Cities Index 2016, Arcadis

언제부터인지 세계도시들의 이런저런 면을 놓고 순위를 매기는 지표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통합 지표를 토대로 한 도시 순위는 다소 빛을 잃은 느낌입니다. 그보다는 바람직한 도시 상(象)을 상징하고, 이에 상응하는 분석들에 부합하는 도시들을 확인하는 방식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화의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제 소개해드릴 ‘글로벌 파워도시’ 지표와 ‘지속가능한 도시’ 지표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전자는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 후자는 환경 친화적 측면에서 분석한 지표들입니다.

통합 지표가 아닌 특화 지표는 하나의 이상적인 도시를 상정한다기보다는 대표하는 가치에 따라 서로 다른 도시의 이상들을 가늠해본다는 점에서 통합 지표와 다르게 서로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지표들에서 나타나는 도시들의 순위는 같기보다는 다르기 일쑤입니다. 예컨대 기업하기 좋은 혹은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도시의 순위와 환경 친화적이고 깨끗한 도시의 순위와 일치하기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 말이지요.

흥미로운 점은 서울이 이런 ‘예외’에 속한다는 사실

그림1 글로벌 파워 도시 To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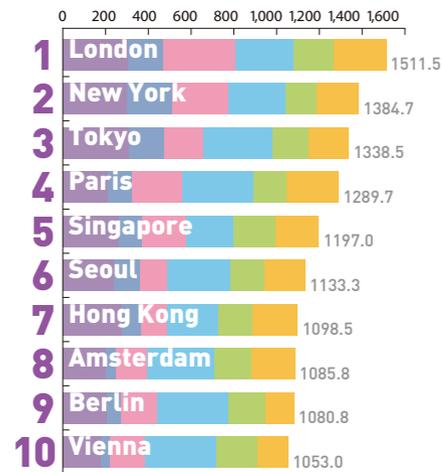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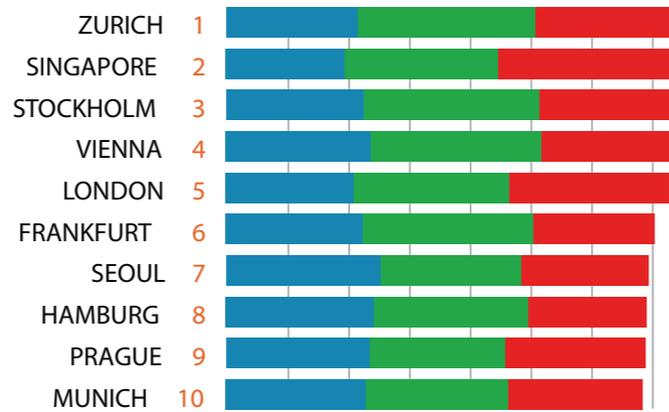


그림2 지속가능한 도시 Top 10



입니다. 글로벌파워도시 지표에서 서울은 42개 도시 중 6위, 지속가능한 도시 지표에서는 100개 도시 중 7위로 모두 10위권 안에 드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지표는 이전 순위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글로벌파워도시 지표는 이전 순위를 제공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13위였으나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줄곧 6위를 고수하고 있지요.

두 지표가 가늠해보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할 때 꽤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지표가 나타내고 있는 10위까지의 순위를 보면 양쪽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도시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뉴욕, 동경, 파리 등 대표적인 세계도시들조차 글로벌파워도시 지표에서 10위권 안에 들었지만 지속가능한 도시 지표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반면 취리히, 스톡홀름, 프랑크푸르트 등의 소규모 유럽 도시들은 지속가능한 도시 지표에서 10위권 안에 들었지만 글로벌파워도시 지표에서는 그렇지 못했지요. 양쪽에서 상위 10위권 안에 든 도시는 런던, 싱가포르, 비엔나, 그리고 서울이었습니다. 적어도 지표만 놓고 볼

때 서울은 세계적으로 강력(powerful)한 도시이자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인 셈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만 두 지표가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를 일일이 뜯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통합 지표를 구성하는 개별 지표들은 같은 것들도 많습디만, 개별 지표나 자료가 비슷한가 하는 것보다는 지표를 통해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또 그런 목표를 위해 세부 지표를 어떤 논리에 의해 조합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세부 지표들을 일일이 따져보기보다는 각 지표의 분석틀을 간략하게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분석틀에 따라 각 통합 지표를 구성하는 부분 지표의 순위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지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강력하고도 지속가능한' 서울에 대해 풍성한 시각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이 힘써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모리 재단의 글로벌파워도시 지표는 도시의

장점을 읽어내는 경제, 연구개발, 문화적 상호작용, 적주성(livability), 환경, 그리고 접근성(accessibility) 등 6개의 주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적주성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경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생활비·안전·작업환경·생활환경 등의 항목으로써 생활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접근성이란 주로 국제교통 혹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을 말하는 기준이구요.

글로벌파워도시 지표상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5개 도시는 런던, 뉴욕, 동경, 파리, 싱가포르 순이었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이들 도시가 주로 어떤 기능에 힘입어 높은 순위에 올랐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은 문화적 상호작용에서 타 도시를 능가합니다. 그와 더불어 접근성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동경은 경제와 연구개발에서 우위를 다투고 있고, 파리는 가장 적주성이 높은 도시이자 문화적 상호작용과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환경 면에서 이 도시들은 비교적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는 4위까지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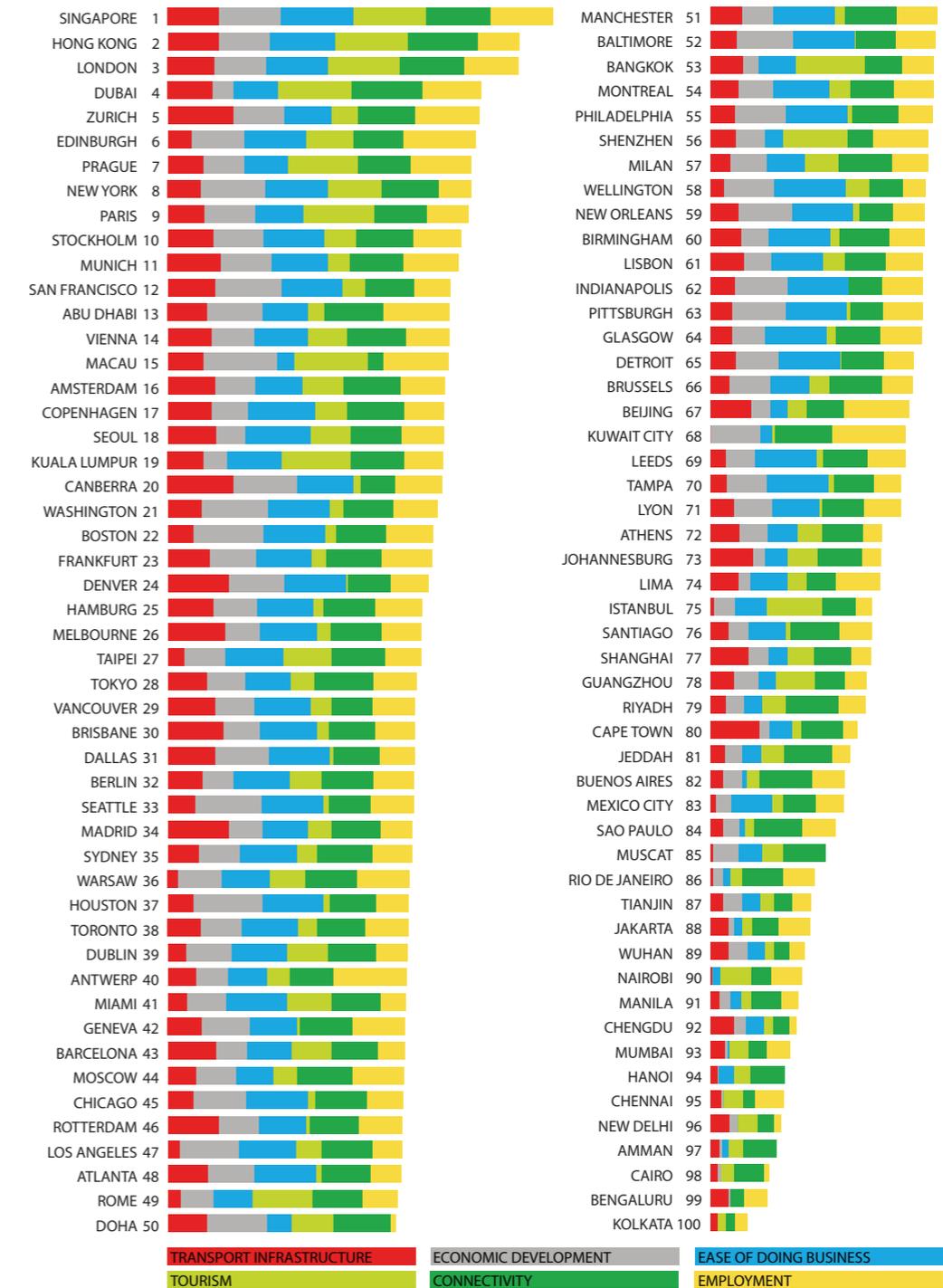
연구개발에서 서울은 통합 지표보다 높은 42개 도시 중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9위, 접근성에서는 10위를 기록했죠. 반면 문화적 상호작용에서 16위, 적주성에서 17위, 환경에서 20위를 나타내어 중상위 정도의 순위권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6위'라는 글로벌 파워 도시 지표는 연구개발, 경제, 접

그림3 글로벌 파워 도시 지표 기능별 도시 순위

Function-Specific Ranking											
Rank	경제	연구개발	문화적 상호작용	적주성	환경	접근성					
1	Tokyo 311.0	New York 215.8	London 338.9	Paris 336.6	Frankfurt 201.9	London 245.0					
2	London 307.5	Tokyo 162.9	New York 259.4	Berlin 331.9	Zurich 199.3	Paris 241.1					
3	New York 298.7	London 162.4	Paris 233.4	Vienna 330.3	Geneva 196.6	Hong Kong 211.0					
4	Beijing 297.5	Los Angeles 145.7	Singapore 202.0	Barcelona 327.7	Singapore 195.1	Shanghai 205.7					
5	Hong Kong 278.1	Seoul 122.7	Tokyo 184.7	Frankfurt 325.6	Vienna 191.8	Amsterdam 205.6					
6	Singapore 261.3	Boston 118.4	Berlin 168.4	Tokyo 320.6	Stockholm 189.7	Frankfurt 204.9					
7	Shanghai 261.1	Singapore 112.7	Vienna 164.3	Toronto 319.2	Copenhagen 186.6	Singapore 201.2					
8	Zurich 254.6	Paris 111.9	Istanbul 161.8	Osaka 318.0	London 183.3	New York 196.7					
9	Seoul 239.8	San Francisco 111.0	Beijing 154.9	Fukuoka 317.2	Sydney 182.9	Istanbul 190.4					
10	Sydney 230.4	Chicago 99.6	Barcelona 149.9	Stockholm 316.9	Vancouver 178.8	Seoul 190.0					
11	Geneva 218.4	Hong Kong 87.6	Amsterdam 147.4	Amsterdam 312.4	Berlin 172.9	Tokyo 186.6					
12	Stockholm 217.2	Osaka 79.5	Brussels 145.6	Copenhagen 307.0	Tokyo 172.5	Moscow 163.5					
13	Copenhagen 211.7	Washington D.C. 78.5	Los Angeles 145.6	Vancouver 304.9	Amsterdam 171.7	Brussels 160.2					
14	Paris 211.5	Sydney 75.0	Sydney 140.0	Madrid 302.7	Milan 168.6	Barcelona 155.4					
15	San Francisco 209.9	Berlin 67.5	Madrid 129.1	Milan 298.3	Washington D.C. 166.7	Madrid 154.7					
16	Washington D.C. 207.7	Shanghai 64.2	Seoul 127.0	Geneva 297.0	Sao Paulo 165.8	Taipei 152.6					
17	Toronto 207.6	Taipei 57.4	Shanghai 124.7	Seoul 294.8	Fukuoka 164.1	Copenhagen 149.7					
18	Berlin 205.6	Toronto 57.3	Bangkok 122.6	Brussels 293.8	Taipei 159.6	Chicago 148.1					

19	Amsterdam	203.0	Beijing	56.9	Hong Kong	121.7	Zurich	292.7	Hong Kong	159.3	Bangkok	147.6
20	Vancouver	200.4	Moscow	54.0	Moscow	115.0	Kuala Lumpur	285.9	Seoul	159.1	Vienna	144.8
21	Taipei	198.3	Istanbul	53.1	Chicago	113.3	Taipei	277.9	San Francisco	159.0	Toronto	142.7
22	Kuala Lumpur	197.8	Stockholm	50.9	Mexico City	111.5	London	274.4	Los Angeles	158.0	Milan	139.6
23	Frankfurt	194.5	Zurich	49.9	Milan	104.3	New York	271.7	Madrid	157.7	Osaka	138.9
24	Istanbul	191.8	Amsterdam	45.8	Toronto	102.0	Bangkok	265.6	Paris	155.2	Beijing	137.7
25	Boston	191.6	Vienna	45.1	Washington D.C.	101.4	Shanghai	262.3	Brussels	153.4	Kuala Lumpur	137.3
26	Los Angeles	186.7	Barcelona	41.5	San Francisco	99.6	Mumbai	262.2	Barcelona	147.4	Berlin	134.5
27	Chicago	182.9	Fukuoka	40.5	Osaka	97.2	Moscow	260.5	Boston	146.3	Boston	134.4
28	Osaka	182.5	Vancouver	40.4	Stockholm	93.0	San Francisco	257.8	Toronto	143.5	Los Angeles	128.8
29	Vienna	176.7	Kuala Lumpur	40.2	Boston	89.2	Chicago	257.5	Osaka	142.9	Sydney	127.6
30	Bangkok	172.1	Copenhagen	37.1	Vancouver	83.5	Sydney	253.9	New York	142.5	Zurich	127.2
31	Brussels	169.4	Geneva	37.0	Sao Paulo	82.1	Beijing	252.0	Kuala Lumpur	139.5	Stockholm	125.1
32	Fukuoka	161.3	Brussels	35.0	Copenhagen	79.6	Istanbul	252.0	Chicago	135.7	Mexico City	119.2
33	Madrid	160.9	Bangkok	33.6	Kuala Lumpur	78.1	Boston	247.9	Bangkok	132.7	San Francisco	117.1
34	Moscow	160.8	Frankfurt	31.9	Frankfurt	74.2	Los Angeles	247.9	Mexico City	127.3	Cairo	116.5
35	Mexico City	153.6	Madrid	28.8	Mumbai	65.2	Sao Paulo	244.2	Mumbai	118.4	Vancouver	114.5
36	Barcelona	147.1	Milan	23.6	Zurich	60.3	Hong Kong	240.8	Jakarta	114.8	Fukuoka	113.8
37	Milan	146.7	Sao Paulo	20.5	Cairo	48.9	Washington D.C.	239.9	Johannesburg	112.6	Washington D.C.	112.1
38	Sao Paulo	133.1	Mexico City	12.0	Geneva	48.2	Jakarta	230.6	Istanbul	110.3	Geneva	101.4
39	Johannesburg	119.2	Cairo	8.9	Johannesburg	41.3	Mexico City	227.6	Shanghai	96.5	Jakarta	94.9
40	Mumbai	117.8	Mumbai	7.8	Jakarta	38.7	Singapore	224.6	Cairo	94.8	Sao Paulo	91.6
41	Jakarta	114.1	Johannesburg	4.7	Taipei	30.5	Cairo	215.8	Beijing	82.0	Mumbai	85.9
42	Cairo	97.6	Jakarta	2.8	Fukuoka	29.5	Johannesburg	175.6	Moscow	73.5	Johannesburg	79.7

그림4 지속가능한 도시 지표: 이윤(Profit) 하위 지표



근성 등의 기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능 부문별로 본 서울은 경제·연구개발·접근성 면에서 비교적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적 상호작용·적주성·환경 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추세입니다. 세부적인 비교는 생략하겠지만, 이후 보시게 될 지속가능한 도시 지표에서와 그리 다르지 않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지표는 이윤(profit), 인간(people), 그리고 행성(planet)의 부분 지표들의 통합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지속가능성의 3대 영역인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윤'의 지표는 사업 환경과 경제적 건전성, '인간'의 지표는 삶의 질을 포함한 사회적 성과, '행성'의 지표

는 에너지와 공해 등의 '녹색' 요인을 가늠하는 지표들의 묶음입니다. 이렇듯 분석틀이 각기 다르다 보니 그 결과도 글로벌 파워 도시 순위와 사뭇 다릅니다. 지표상 가장 앞선 순위를 보인 도시는 취리히였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스톡홀름, 비엔나,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이 그 뒤를 잇지요.

지속가능한 도시 지표에 이윤·인간 등의 부분 지표가 더해지면서 전체 순위는 다소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글로벌 파워 도시의 환경 면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도시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 지표의 행성 지표에서도 모두 최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런던은 이윤 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덕분에 순위가 높아진 도시들이라고 할

그림5 지속가능한 도시 지표: 인간(People) 하위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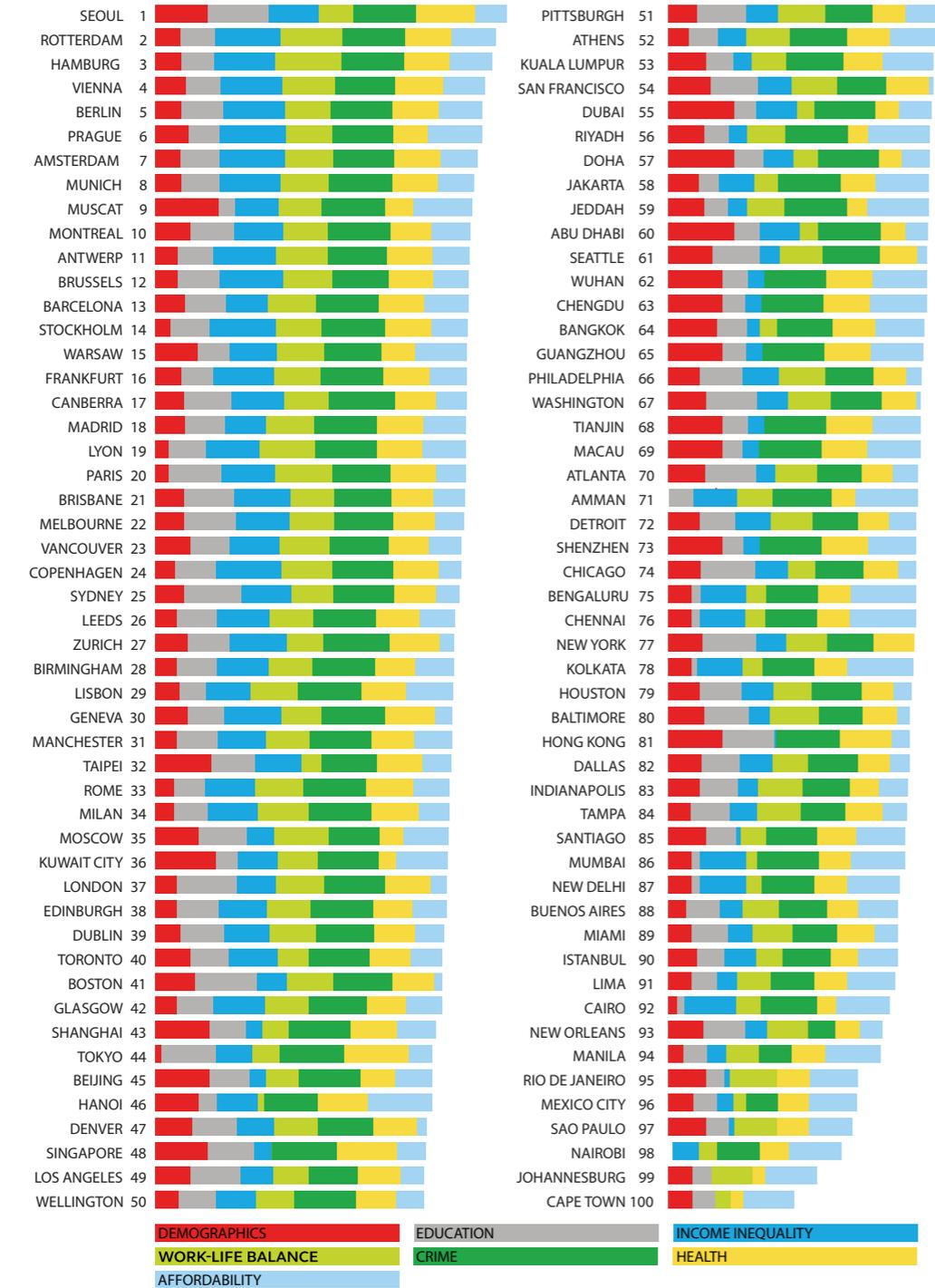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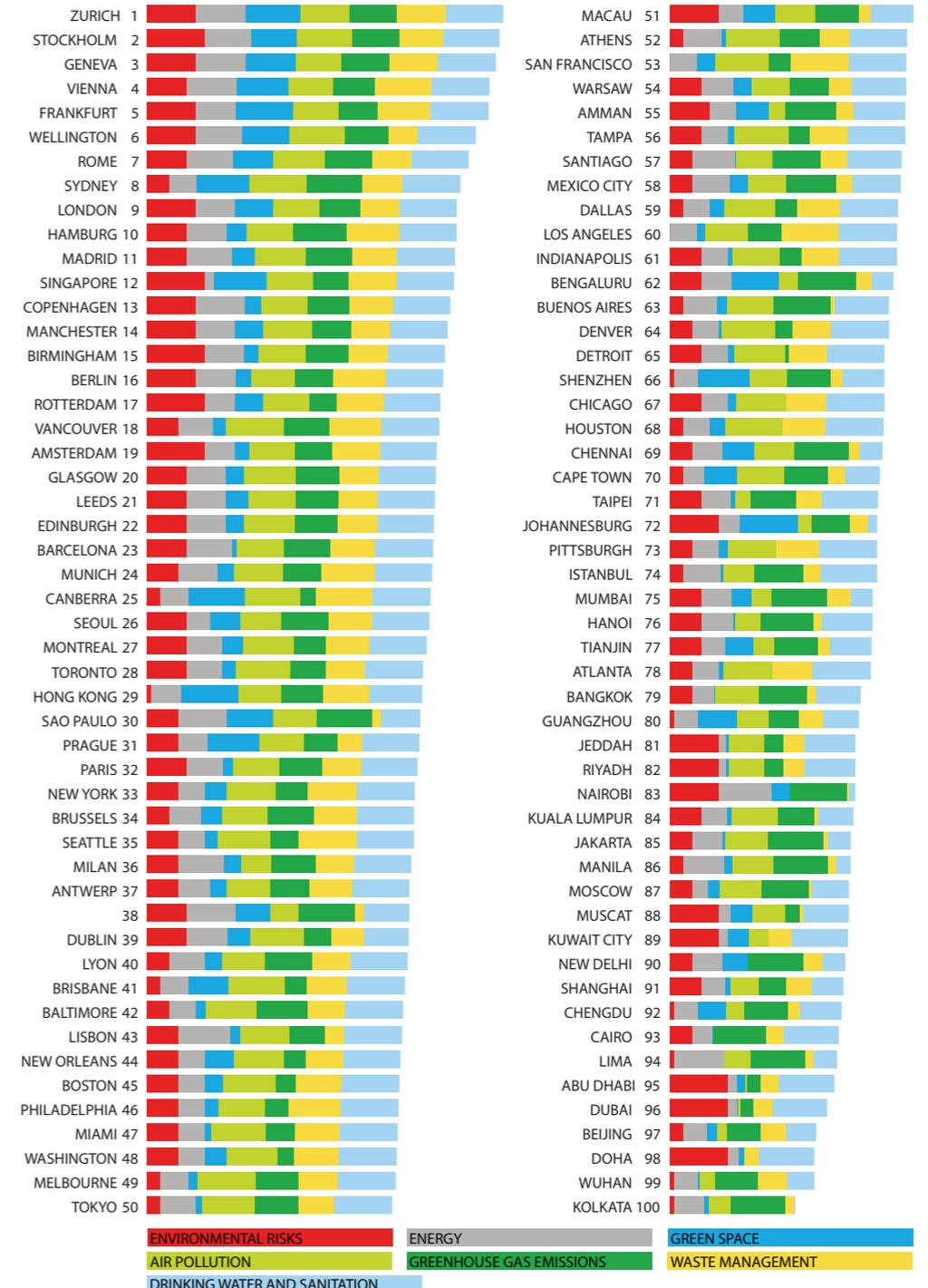


그림6 지속가능한 도시 지표: 행성(Planet) 하위 지표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서울은 인간 지표가 크게 기여한 대표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인간 지표에서 100개 도시 중 1위를 기록했으니까요. 반면 이윤 지표는 18위를 기록했고, 환경 지표는 26위에 그쳤습니다. 잠시 고개를 가우뚱하실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실 텐데, 인간 지표의 주요 구성 지표가 교육, 보건, 범죄 등임을 고려해보면 왜 서울이 저렇게 순위가 높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해소될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고서에서도 해당 지표 덕이라는 언급이 있구요.

두 지표의 하위 지표를 비교해본 결과,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서울의 환경 영역은 양쪽 모두 통합지표 순위에 비해 하위 지표 순위가 낮은 편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많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경제 영역은 양쪽 모두에서 환경 영역보다는 비교적 순위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사회나 문화 등 사람과 관련된 하위 지표에서는 다소 모순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지표에서는 적어도 사회 영역에서 가장 좋은 도시인 반면, 이와 연관성이 있는 글로벌파워 도시 지표의 문화적 상호작용이나 적주성 순위는 그리 높지 않았으니 말이지요.

이 모순적인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글로벌파워 도시 지표에서 시도한 다른 분석을 마저 소개해볼까 합니다. 글로벌 파워 도시 지표에서는 기능에 따른 분석에 더하여 도시의 활동을 선도하는 글로벌 행위자별로 도시 순위를 매기기도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관리자, 연구자, 예술가, 방문자, 거주자 등 5개 행위자가 선호하는 도시를 행위자별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행위자 순위는 기능 순위와 상당부분 일치합니다. 런던은 문화적 상호작용과 접근성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답게, 관리자와 방문객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

는 도시였습니다. 연구개발에서 가장 돋보였던 도시인 뉴욕은 당연히 연구자가 가장 선호하는 도시였고, 적주성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파리는 예술가와 거주자가 첫 번째로 꼽은 도시였습니다.

서울은 비교적 관리자와 연구자의 필요를 잘 충족시키는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자 매력도에서는 9위, 연구자 매력도에서는 10위를 기록했으니까요. 반면 방문자에서는 15위, 거주자에서는 17위로 순위가 다소 낮아집니다. 방문자보다 거주자 순위가 더 낮은 사실이 다소 신경 쓰이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은 예술가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도시가 아닌 모양입니다. 예술가 순위가 전체 42개 도시 중 23위로 중간 이하 순위를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급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서울은 살기보다는 일하기에 조금 더 좋은 도시인 모양입니다. 적어도 지표상으로 서울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임에는 틀림없으나 거주자나 예술가보다는 관리자·연구자·방문자에게 더 살기 좋은 도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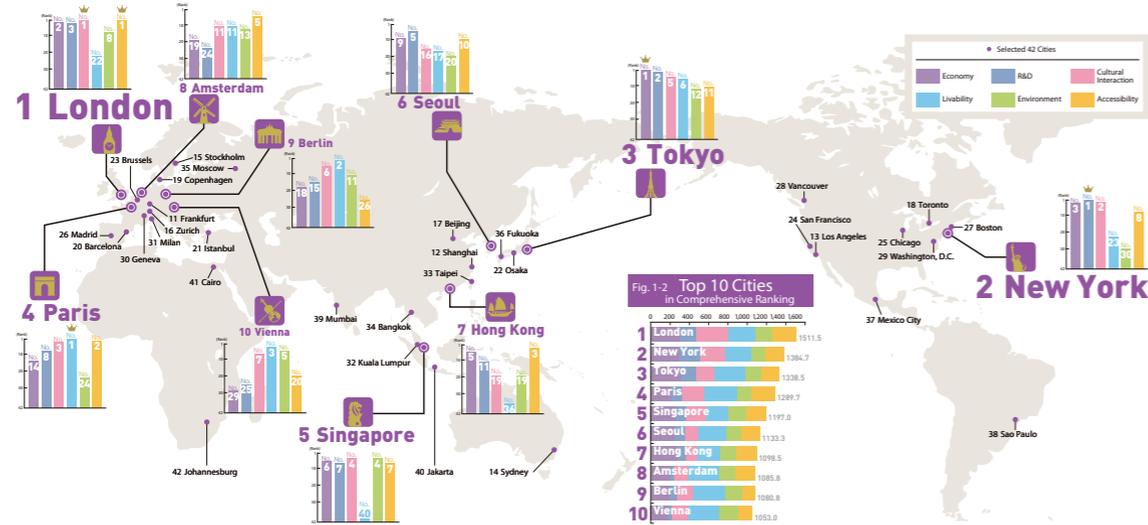
지표가 순위 매기기로만 끝난다면, 또한 그 결과가 상위권 지표를 차지하기 위한 도시 간 경쟁을 유발할 뿐이라면 이런 지표 작업의 의의는 크게 축소되지요. 도시 지표, 그 중에서도 특화 도시 지표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이유는 도시의 내재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개별 도시는 순위 자체에 연연하기보다 도시의 역량을 재확인하고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촉진해야겠지요.

앞서 말했듯이 서울은 세계적으로 드물게도 강력하고도 지속가능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위상을 지키거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지표가 시사한 바와 같이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면에서도, 일

그림7 글로벌 파워 도시 지표 행위자별 도시 순위

Actor-Specific Ranking										
Rank	관리자	연구자	예술가	방문자	거주자					
1	London	57.8	New York	66.6	Paris	52.0	London	57.2	Paris	62.2
2	Singapore	56.3	London	54.8	New York	49.7	Paris	51.6	London	57.8
3	Hong Kong	53.9	Tokyo	52.8	Vienna	48.7	New York	50.3	New York	57.3
4	Shanghai	49.0	Los Angeles	46.3	Berlin	48.1	Istanbul	49.0	Frankfurt	55.5
5	Beijing	48.9	San Francisco	45.7	London	47.2	Tokyo	45.9	Zurich	54.7
6	Istanbul	48.5	Paris	45.4	Barcelona	46.7	Berlin	42.8	Tokyo	53.7
7	Tokyo	47.7	Chicago	39.0	Tokyo	46.4	Barcelona	42.3	Vienna	53.6
8	New York	47.3	Boston	38.8	Amsterdam	45.5	Beijing	42.1	Berlin	53.2
9	Seoul	45.6	Singapore	38.0	Los Angeles	43.3	Vienna	41.4	Stockholm	52.3
10	Kuala Lumpur	45.1	Seoul	37.0	Toronto	42.3	Shanghai	41.2	Geneva	51.6
11	Paris	45.0	Washington D.C.	34.4	Beijing	42.2	Singapore	41.0	Amsterdam	51.0
12	Taipei	43.2	Sydney	33.5	Vancouver	40.4	Bangkok	39.9	Washington D.C.	50.7
13	Berlin	42.2	Hong Kong	32.7	Madrid	40.1	Amsterdam	39.6	Copenhagen	50.7
14	Stockholm	40.7	Beijing	32.3	Stockholm	39.9	Madrid	37.3	Boston	49.1
15	Bangkok	40.2	Berlin	30.5	Osaka	38.6	Seoul	35.3	San Francisco	47.9
16	Zurich	40.1	Osaka	30.4	Washington D.C.	38.0	Hong Kong	35.0	Osaka	47.7
17	Copenhagen	40.1	Toronto	29.4	Milan	37.9	Osaka	34.6	Seoul	47.4
18	Amsterdam	39.8	Vancouver	26.4	Istanbul	37.9	Brussels	34.2	Barcelona	47.4
19	Toronto	39.6	Vienna	26.2	Frankfurt	37.7	Frankfurt	34.1	Brussels	47.0
20	Sydney	39.6	Amsterdam	25.8	Mexico City	37.4	Moscow	33.2	Toronto	46.8
21	Vienna	38.9	Stockholm	25.7	Brussels	37.3	Milan	32.7	Milan	46.7
22	Boston	38.3	Zurich	25.5	Shanghai	37.2	Chicago	31.6	Hong Kong	46.5
23	Vancouver	37.9	Moscow	25.1	Seoul	36.7	Toronto	31.5	Vancouver	46.4
24	Frankfurt	37.8	Geneva	23.6	Moscow	36.7	Copenhagen	30.2	Fukuoka	46.2
25	Geneva	37.2	Copenhagen	23.1	Fukuoka	36.4	Sydney	30.1	Los Angeles	45.4
26	Osaka	36.2	Shanghai	22.5	Chicago	36.3	Mexico City	29.6	Singapore	45.3
27	Brussels	35.4	Barcelona	22.1	Sao Paulo	36.2	Boston	29.6	Madrid	45.2
28	San Francisco	35.2	Madrid	21.5	Kuala Lumpur	36.1	San Francisco	29.5	Sydney	45.1
29	Chicago	35.1	Brussels	21.3	Mumbai	35.3	Vancouver	29.5	Taipei	43.9
30	Barcelona	34.7	Bangkok	21.2	Bangkok	34.9	Kuala Lumpur	29.5	Chicago	43.2
31	Washington D.C.	34.6	Frankfurt	21.0	Copenhagen	34.6	Los Angeles	28.9	Shanghai	43.1
32	Madrid	34.4	Istanbul	20.3	Boston	32.4	Stockholm	28.5	Beijing	42.8
33	Los Angeles	34.2	Taipei	20.3	San Francisco	31.2	Washington D.C.	28.4	Moscow	38.1
34	Fukuoka	32.5	Milan	19.7	Cairo	31.0	Taipei	27.7	Mexico City	37.2
35	Milan	32.5	Fukuoka	19.7	Jakarta	29.1	Mumbai	27.2	Sao Paulo	36.9
36	Mumbai	30.7	Mexico City	19.1	Zurich	29.0	Cairo	26.9	Istanbul	36.5
37	Moscow	30.3	Kuala Lumpur	18.6	Sydney	27.6	Zurich	26.3	Bangkok	33.2
38	Mexico City	27.7	Sao Paulo	18.1	Geneva	26.3	Fukuoka	25.8	Kuala Lumpur	32.7
39	Sao Paulo	25.6	Mumbai	15.7	Johannesburg	24.7	Sao Paulo	24.7	Mumbai	30.7
40	Cairo	23.8	Cairo	11.2	Singapore	23.1	Geneva	23.8	Cairo	29.2
41	Jakarta	23.1	Jakarta	11.0	Taipei	22.4	Jakarta	21.6	Jakarta	25.4
42	Johannesburg	22.4	Johannesburg	9.0	Hong Kong	22.2	Johannesburg	15.1	Johannesburg	21.2

그림8 2016 글로벌 파워 도시 순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있어서도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지요. 그러다 보면 순위라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세부적인 지표의 분석들과 방법론, 그리고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별 자료 등에 대한 소개는 지면관계상 생략합니다. 그러나 모리 재단(<http://mori-m-foundation.or.jp/>)의 2016 Global Power City Index 페이지와 Arcadis(<https://www.arcadis.com/>)의 2016 Sustainable City Index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 두 지표가 같이 쓰고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또 각 지표의 틀에 따라 같은 혹은 다른 자료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

그림9 2016 지속가능한 도시 순위

